

연구총서 99-18

한국사회 냉전문화 극복방안 연구

조 민

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 냉전문화의 내면화 양식과 존재양태를 살펴봄으로써, 냉전문화 극복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교육 부문에서 교과서의 이념교육과 반공교육의 내면화 과정을 검토하고자 했으며, 언론에 의한 레드콤플렉스와 반복이데올로기의 조장 과정을 밝혀보았다. 냉전문화의 존재양태에 대한 이해를 대미인식, 대북정책, 대북인식 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냉전문화 극복방안으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언론개혁 그리고 인권·민주화·평화 이념 등을 함축한 통일교육을 통해 실천적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반도 냉전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민족의 참된 화해와 화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회 내부의 반복의식·냉전문화의 해소가 절실하다.

1. 서론

남북한간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구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가 불가피하다. 냉전구조의 해체는 우리 사회 내부의 냉전의식과 냉전문화의 해소·극복을 전제로 한다.

냉전시대의 반공·냉전의식의 확립은 무엇보다 교육 부문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그리고 언론을 비롯한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전사회적 차원에서 반공·냉전의식의 확인과 생산·재생산 과정이 일상화된다. 국가의 대중적 제도교육은 반공·냉전의식의 배양과 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 언론은 특정 계기마다 반공·냉전의식의 조장하고 생산·재생산해온 메커니즘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아가 민족의 화해와 화합을 가로막는 가치관, 사고방식, 논리체계

등이 학문적 영역에서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2. 냉전구조와 냉전문화

냉전문화는 냉전의식·냉전관행 등의 용어를 포괄하는 일반 대중의 사회 문화적 의식형태 또는 집단적 심리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개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정향과 관련된 의식 일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냉전문화는 반공의식, 분단콤플렉스, 그리고 반북의식 등과 착종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냉전의식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상대를 증오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정신병리적 분열증을 낳게 했다. 내편·내편, 선·악 등의 이분법적 흑백논리는 합리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애초부터 차단하는 냉전시대의 전형적인 의식형태이다. 냉전체제에 의해 강요된 이데올로기적 편향과 함께 분단의식에 의한 '심성의 왜곡'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공통되는 현상이지만, 냉전의식의 폐해는 심각하다. 특히 위기에 처한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남침야욕 등을 강조하면서 긴장과 안보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논리는 지배권력 블록의 권력유지를 위한 물질적·사회적 기반을 갖는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해왔다. 냉전문화로 인해 민족 사회의 미래지향적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3. 냉전문화의 내면화 양식

냉전문화가 개개인의 심성 속에 내면화되어 가는 메커니즘으로 교육과 언론의 기능이 중요하다.

(1) 교육

교과서 속에 반영된 이념교육의 내용과 형태로, 특히 한국전쟁 이후 반공이데올로기가 본격적으로 정착되어왔다. 또한 안보이데올로기가 한국의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초법적 메타법이데올로기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이다. 안보논리는 군사적 위협의 실체보다는 대항이데올로기의 표출이나, 그 보다 훨씬 하위 수준인 개혁의 주장이나 비판논리마저 안보의식을 저해하는 저항과 도전으로 규정되면서, 학문과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상황으로까지 나타났다.

분단시대 한국 현대사의 반공주의적 교육은 체제와 이념 문제에 대한 개인의 어떠한 자율적 판단의지를 허용하지 않았다. 체제 순응적 존재의 양산을 교육목표로 삼았다.

(2) 언론

언론은 분단의식과 냉전문화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다. 보수언론은 남북한 관계에서 적색공포의 신화를 창조하는 매카시즘의 진원이 되어왔다. 언론의 안보위협은 대북 적대감을 자극하고 결국 정부의 통일정책이 보수화 되는 데로 기여해왔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문제와 군부권위주의 청산의 과제가 정치적 이슈로 제기될 때, 항상 남북한 문제와 연관시켜 민주화의 진척을 가로막는 논설을 펼쳐왔다.

따라서 언론 개혁 없이 '냉전벨트'를 걷어내는 작업은 요원한 문제이다. 언론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고루한 의식,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거부하는 냉전관행 등은 곧장 케케묵은 반북·반공의식으로 표출된다. 이는 수구세력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논리로 변질하고 있다.

4. 냉전문화의 존재양태

(1) 대미인식

냉전해체의 변화된 국제관계 속에서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 대한 내향적 성찰과도 일맥 상통한다. 한미간 국가이익의 상호 조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가 요청된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당시의 미국 측의 한반도 전쟁시나리오인 “우리가 죽고사는 문제”가 남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었다.

미국 국익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조망할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 ‘노근리’와 북한의 ‘신천’ 문제 등은 냉전시대에는 은폐될 수 있었던 사안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진실규명을 통해 한미관계가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대북정책

정부의 대북정책을 규율하는 원칙 가운데 하나로 상호주의를 손꼽을 수 있다. 상호주의는 정부 차원의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준용되는 협상 원칙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상호주의는 일반적으로 국가간 거래와 협상에 있어 상호 신뢰의 기반을 쌓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양식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은 대북 불신감에 기반한 대결과 갈등의 냉전 의식의 소산이다. 상호주의의 내용과 함께, 비대칭적 한반도 냉전구조 속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적 적용의 한계에 대한 이해가 요망된다.

(3) 대북의식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및 민주화에 대한 주장은 반복·냉전적 대북인식의 독특한 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인권 문제는 인도주의적 사안이면서도 민감한 정치적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대해 줄곧 침묵을 지키면서 권위주의 체제와 깊은 유착관계를 유지해왔던 사람들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민주화 문제는 선악의 흑백논리에 기반한 냉전의식이 북한이라는 집단에 투사되어 자기 스스로 가장 혐오하는 속성인 ‘인권’이나 ‘민주화’를 자기의 반대쪽인 북한체제에 투영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동·서독간 화해와 긴장완화 노력에 대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정치범 석방 등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내독간 비밀거래에서 많은 것을 시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영상매체에 반영된 북한이미지

예술·문화분야 가운데 특히, 영상매체는 엄청난 대중성을 지닌다. 이 분야에서 냉전문화를 극복하고 통일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대중문화를 창조한다면, 민족의 화해·화합의 분위기는 한층 앞당겨질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었던 영화를 대상으로 냉전의식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상매체 속에 반영된 북한이미지는 우리 사회의 광범한 냉전벨트의 잠재적 요구에 부응한 안보의식의 고취와 더불어 ‘반북문화’의 새로운 유형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5. 냉전문화 극복방안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그리고 통일교육 등을 통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접근과 더불어 새로운 화해와 화합문화의 창출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1) 국가보안법 개선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산물로 이제 그 역사적 존재이유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보안법은 국체 유지를 위한 급조된 ‘도구적’ 성격의 법이다. 보안법은 ‘외부의 적’을 상대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이라기 보다는, ‘내부의 국민’을 상대로 ‘정권안보’를 지키는 법률로 기능해왔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은 법의 존재근거의 보편적 기준 즉, 법적 형평성을 스스로 포기해왔다. 보안법 개혁을 전제로, ‘사상의 자유시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권과 사회정의 그리고 평화통일의 이념에 기반한 진보적 정당들이 자리잡을 수 있는 사회적·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이다.

(2) 언론개혁

언론개혁은 모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개혁의 전제이자, 언론개혁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언론개혁의 방향으로는 첫째, 신문기업 경영의 공개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권언유착 관행으로 인한 왜곡된 언론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여론 형성 권력의 독점에 의한 신문사의 사권력기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유지분의 제한과 소유경영 분리의 제도화가 추진되

어야 한다. 개혁의 실천과제 가운데 특히,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기구로 신문개혁위원회의 구성이 단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언론인 양심권제도와 국가지원금 제도의 도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통일교육

한국사회 냉전문화 해소방안으로 올바른 통일교육의 실천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화해와 화합을 통한 통일 지향적 가치관과 실천의지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을 지향한다.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전통과 가치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권, 평화, 민주화의 보편적 가치의 추구를 지향하는 통일운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평화 통일교육은 궁극적으로 반북의식·냉전문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화합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다.

6. 결론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식, 사고방식, 행위양식 등은 분단구조로부터 영향받아 왔으며, 또한 우리 스스로 분단구조에 순응적인 삶을 통해 분단구조 자체를 주조하는데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다.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를 위한 역량과 성패는 냉전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의지에 달려 있다. 가령 국제적 차원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그러한 외적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의 강렬한 바람과 의지 없이는 냉전구조의 해체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 내부의 냉전의식·냉전문화의 극복을 위해 정부나 학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공청회, 세미나, 문화공연 등의 다각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담론체계를 통한 설득작업을 서둘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방법	4
II. 냉전구조와 냉전문화	7
1. 냉전문화의 정의	7
2. 냉전의식의 폐해	9
III. 냉전문화의 내면화 양식	15
1. 교육	15
가. 교과서와 이념교육	15
나. 반공이념의 내면화	22
2. 언론	32
가. 언론과 레드콤플렉스	32
나. 언론과 반북이데올로기	40
IV. 냉전문화의 존재양태	46
1. 대미인식	46
가. 냉전해체와 새로운 한미관계	46
나. '과거'와 진실규명	53
2. 대북정책	59
가. 상호주의의 원리 및 적용	59
나. 상호주의와 남북관계	62

3. 대북인식	65
가. 북한의 인권·민주화 문제	65
나. 인권·민주화문제 접근방식	68
다. 영상매체에 반영된 북한이미지	73
V. 냉전문화 극복방안	83
1. 국가보안법	83
가. 국가보안법과 냉전의식	83
나. 국가보안법과 인권	84
다. 국보법 개폐와 냉전문화 극복	92
2. 언론개혁	96
가. 언론개혁의 의의	96
나. 언론개혁 방안	103
3. 통일교육	106
가. 통일교육의 의의	106
나. 통일교육 현황	109
다. 통일교육 기본방향 : 「평화의 문화」 창출	113
VI. 결론	123
참고문헌	129

I. 서론

1. 문제제기

새로운 세기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민족의 참된 화해와 화합을 위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동트는 山河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세기 '90년대 초,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이익과 번영의 도모를 합의했던 「기본합의서」는 민족통일의 대장전으로, 통일 과정에 우뚝 선 하나의 이정표였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지난 '90년대는 합의서의 정신이 망실되고 꽃피워져 보지 못한 '잃어버린 10년'이었다.

20세기는 한민족에게 고통과 좌절의 세기였다. 세계사적 도전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항상 냉혹한 국제정치적 격랑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며, 그 결과 분단과 동족상잔의 제물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남북한 상호 증오와 저주의 늪을 삭이지 못하고, 대결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 엄청난 민족적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

세계적인 동서 냉전체제는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다. 그러나 21세기의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흘러간 노래'에 반주를 맞추고 있다. 이를테면 '세계시계'와 '민족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서로 다른 공간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남북한 대결구도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채 냉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역사적 지체' *historical retard*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세계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분단의 장벽은 여전히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이러한 분단구조 위에서 대결·반목·불신의 냉전외식·냉전문화가 대중적

의식을 짓누르면서 국민통합과 민족화합을 저해하는 분열의 토양이 되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미·소 대립의 양극 체제로 표상 되었던 국제 냉전체제의 와해는 사회주의체제의 실패에 따른 소비에트 체제의 자기 붕괴의 결과였다. 이는 물론 미·소 양국간 평화와 화해를 통한 합의의 산물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가 자동적으로 미국의 냉전이데올로기, 군산복합체, 그리고 군사 정치적 패권지배 체제를 해소시키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갈등 종식과 평화구조가 확립될 수 있는 지평을 넓혀나가는 낙관적 전망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러한 세계사적 변화는 바로 그 체제에 의해 한민족의 운명이 결정 지워졌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 창출의 전망과 민족사적 진운의 향방과 관련하여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새로운 평화구도의 정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과제야말로 이 지역의 보다 공고한 평화구조를 확립하는데 관건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우리 정부 대외정책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우리 사회 내부의 냉전의식과 냉전문화의 해소·극복 없이는 불가능하다. 냉전을 지탱한 힘이 국가와 이데올로기였다면 냉전을 허물어낸 힘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의 의지와 행동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갈등과 불신의 장막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의 변화 속에서 분단의 현실적 장벽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한반도 주민의 의식 세계와 생활 양식 속에 자리잡고 있

던 갈라진 마음의 벽도 한층 낮아지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대중적 의식은 점차 냉전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일정한 변화를 위기와 혼란의 징후로 인식하고 그러한 ‘혼란’을 과장하는 세력이 어느 사회에서도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아직도 반공·냉전의식에 사로잡혀 위기의식의 고취와 함께 ‘주적(主的)’ 개념의 사회적 재확인을 강요하는 안보제일주의, 학문·예술 부문 등에서의 사상검증의 요구 등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현실은 뿌리깊은 냉전문화의 강고한 토대를 말해준다.

냉전의식은 시대착오적이고 퇴영적인 세계관이다. 그러나 이 퇴영적 가치관·신념체계가 우리 사회에 널리 편만해 있으며 아직도 상당한 물질적 힘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단 그 자체와 분단 상황에서 연유하는 이러한 현상은, 그야말로 ‘비극적 笑劇’ *tragic farce* 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남북한 분단구조에 착근한 반공·냉전의식은 색깔론으로 표출된 ‘적색망령’으로,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역망령’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정치문화를 심각하게 왜곡시켜 왔다. 이 ‘적색망령’은, 지역주의가 선거를 계기로 한 정치투쟁의 영역에서 항상 배제와 포섭을 특징으로 전개되었다면, 정치투쟁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도 ‘레드콤플렉스’로 각인 되면서 일반 대중의 의식과 삶을 왜곡시키는 이념적 기제로 작용해 왔다.

우리 사회의 통합과 민족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은 안팎으로 증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시장 근본주의의 이념적 토대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정보화 혁명에 의한 금융자본주의의 세계화 속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은 도전 받고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의 자주적 발전과 민족통일의 길이 왜곡·천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는 아직 20세기적 과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21세기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

의 통합이라는 과제와 민족화합의 길에 놓여있는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냉전의식·냉전문화를 타파하는 작업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인간은 사회를 만들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은 그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이다. 행위자인 개인과 그러한 개개인적 행위의 총합성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전체성과의 관계는 항상 사회과학적 인식의 긴장을 초래한다. 사회이론의 가장 중요한 연구의 초점은 개인적인 행위나 행위자의 경험에만 한정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사회적 전체성의 존립이라든가 그 존립을 위한 조건에 대한 연구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현실'은 사회를 일정한 체제의 자기전개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과 개별 행위자들의 행위양식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논리를 다같이 지양함으로써, 행위자로서의 인간과 기존 사회체제의 교호적 연관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사회 구조는 물론 인간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간 행위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회적 현실을 형성하고 재형성하는 구조화의 동인이면서, 바로 그 구조화된 실체로부터 규정받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개인과 사회제도는 이중으로 서로 연관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은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상존하는 한반도 냉전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한 일시적인 성과와 대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무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사적 대립구조를 평화구조로 전환시키고 남북한 공존과 협력을 제도화하는 길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데에 있다.¹⁾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체제, 제도, 정책, 관행 및 의식을 탈냉전의 세계사적 조류에 맞게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대결구조를 협력 및 공존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국제적 차원에서는 과거 진영적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북한의 체제보장의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북·일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 차원에서는 정치·군사적 대결구조를 점차 완화시켜 나가는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공존협력관계를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분단 반세기 이상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냉전의식, 냉전문화, 냉전관행 등을 해소시켜야 한다.

냉전시대의 반공·냉전의식의 확립은 무엇보다 우선 국가적 과업의 차원에서 교육 부문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이를 토대로 언론을 비롯한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전사회적 차원에서 반공·냉전의식의 확인과 생산·재생산 과정이 일상화된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여기서는 특히 교육과 언론에 의한 반공·냉전의식의 습윤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가가 장악한 제도 교육과정을 통해 어떻게 반공·냉전의식이 적색공포로 각인 되어 가는가 하는 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교육은 한 인간의 생애에서 '제2의 탄생'의 계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

1) 통일연구원 주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 (I)('99.2.26), 학술회의 총서 99-01; (II)('99.4.8), 학술회의 총서 99-02; (III)('99.8.11), 학술회의 총서 99-03; (IV)('99.12.22), 학술회의 총서 99-04, 참조.

가의 대중적 제도교육은 반공·냉전의식의 배양과 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메커니즘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청된다.

우리 사회의 언론은 특정 계기마다 반공·냉전의식의 조장하고 생산·재생산해온 메커니즘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흥미 있는 사실은 최근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일정한 성과에 의해 국가 부문의 합리성이 어느 정도 제고됨에 따라 반공·냉전의식의 반시대성·반민족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언론은 오히려 반공·냉전의식에 집착하면서 새로운 반북이데올로기를 창출해내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국가를 선도하는 안보논리와 국가이익론, 통일과 민족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오도된 논리의 무책임·무절제한 조작 등을 통해 끊임없이 냉전이데올로기의 망령을 불러내고 있는 행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민족의 화해와 화합을 가로막는 가치관, 사고방식, 논리체계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영역에서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수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냉전구조와 냉전문화

1. 냉전문화의 정의

영국의 역사학자 E. 홉스봄은 20세기의 세계사를 두고 ‘극단의 시대’로 불렀다.²⁾ 전쟁과 혁명의 와중에서 살육과 테러와 폭압의 광란의 세기였다.³⁾ 그럼에도 20세기 후반기의 냉전은 전지구적인 핵전쟁의 공포와 사상과 이념의 극한적 언술대결의 구조와 함께 상호 공멸 가능성의 위기감 속에서 오히려 상당히 안정적인 세계질서를 유지해왔던 역설적인 측면도 있었다. 냉전은, 이를테면 미·소 초강대국간 ‘차가운 평화’로 인식하려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했던 시기로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 사이의 냉전은 의심할 바 없이 ‘냉화(冷和, Cold Peace)’의 시대였지만, 어느 시대보다도 ‘긴 평화’를 유지했던 시대이기도 했다.⁴⁾

동서 냉전체제는 이러한 양면적 속성을 함축하고 있었으나, 항상적인 위기 국면 속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었던 우리의 분단체제

2) Eric Hobsbawm,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1991* (London: Michael Joseph, 1994).

3) 20세기는 전쟁과 혁명의 정치적 폭력으로 얼룩진 세기였다. *Economist*지는 최근 20세기를 개관하는 특집호에서 전쟁 사망자와 정치적 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의 통계를 밝히고 있다. 전쟁 사망자는 국제전 사망자 3천만명, 내전 사망자 7백만 명으로 모두 3천7백만에 달한다. 반면 정치적 폭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의 수는 전쟁 희생자 보다 훨씬 많다. 정치적 폭력에 의해 직접 희생된 민간인 수에 대한 국가별 통계로는, 소비에트연방 6천2백만(1917~91), 공산주의 중국 3천5백만(1949~), 독일 2천1백만(1933~45), 국민당 중국 1천만(1928~49), 일본 6백만(1936~45) 등, (작은 규모의 희생자 수 포함하여) 총 1억7천만 명에 이른다(Sources: "Statistics of Democide" by Rudy J. Rummel, *The Economist* additions for recent wars). 이처럼 대량학살이 가능한 데에는 역설적이게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 "A Survey of The 20th Century," *The Economist*, september 11th~17th 1999.

4) John Lewis Gadd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Y.: Oxford Univ. Press, 1987).

는, 비록 대규모의 전쟁은 재발하지 않았지만, ‘차가운 평화’마저 구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일찍이 T. 홉스는, “전쟁은 단순히 전투 즉, 싸우는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통해서 다투려는 의지가 충분히 알려진 일정 기간의 시기에 있다.”⁵⁾고 갈파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분단구조는 무력충돌과 분쟁 등으로 인한 항상적인 위기 국면을 내장하고 있었던 일상화된 위기체제였다.

냉전문화는, 일상화된 위기체제로서의 한반도 냉전구조와 관련하여,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흔히 냉전의식, 냉전관행 등의 용어를 포괄하는 냉전문화는 일반 대중의 사회 문화적 의식형태 또는 집단적 심리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개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정향과 관련된 의식 일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⁶⁾ 그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냉전의식은 반공의식, 분단콤플렉스, 그리고 반북의식과 깊은 상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냉전의식·냉전문화에 대한 연구는 냉전체제·냉전구조와 서로 깊은 상호교호적 연관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냉전의식을 규정짓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성격과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고유한 의미에서의 냉전의식·냉전문화의 내용과 성격도 점차 변화되고 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반공주의와 반소의식에 기반한 냉전의식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현실적 몰락과 진영 헤게모니 국가였던 구소련의 해체로 인해, 그로부터 연유하는 위협의 소멸과 ‘악마의 제국’의 부재는

5) Thomas Hobbes, Leviathan (London, 1651), Chap. XIII.

6) 냉전문화는 퇴영적인 성격을 지닌 문화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면, 이와 달리 통일문화는 통일과정 및 통일후의 문화다양성을 전제로 공존의 영역을 창출해 나가는 가능성의 문화라는 점에서 연구의 관심이 지속·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정도 ‘전통적’ 냉전의식의 경감을 초래했다. 이와 동시에 문명사적 전환으로 일컬어지는 전지구적 차원의 시장근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 가치, 신념, 세계관 등에 접맥된 모든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을 아주 급속히 해체시키면서 형해화(形骸化)시키고 말았다. 이런 점에서 냉전적 사고방식, 냉전의식은 점차 사라져가는 퇴역적인 의식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우, 반소·반공주의적 전통적 냉전의식은 조금씩 약화되는 한편, 여전히 ‘반북이데올로기’와 착종되어 비체계적이고 산만하면서 그로테스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체계적이라고 하여, 뿌리깊은 전통적 냉전의식과 ‘반북의식’ 등이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문제에 대한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힘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 새로운 형태의 ‘반북의식’은 통일비용 부담의식, 북한의 후진성, 서구화의 낮은 수준 즉, 촌스러움, 테러리스트 집단의 이미지, 대외적 자존심 등 다양한 형태의 대북 혐오감을 반영한 ‘혐북(嫌北)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된다. 특히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의 요구는, 그 주장의 보편적 가치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냉전의식의 일그러진 변형태로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

2. 냉전의식의 폐해

반세기 이상의 분단의 역사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상대를 증오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정신병리적 분열증을 낳게 했다. 내편·넌편, 선·악 등의 이분법적 흑백논리는 합리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애초부터 차단하는 냉전시대의 전형적인 의식형태이다. 냉전체제에 의해 강요

된 이데올로기적 편향과 함께 분단의식에 의한 심성의 왜곡으로부터 남북한 주민은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민족 분단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북한 주민의 경우, 여기서는 남한 사회 주민들의 심성의 왜곡 상태를 염두에 두고, 과거 사회주의적 억압체제 아래서 동독 주민의 일그러진 감성체계의 특징을 일상적인 성격왜곡의 비밀에서 찾았던 한 연구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H. 마즈(Hans-Joachim Maaz)는 동독 사회주의에서 주민들의 정신생활의 체험에 대해 무려 5천여 명의 노이로제 환자들을 다룬 경험을 통해 인간의 소외와 정신적 기형화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⁷⁾ 구 동독의 집단억압체제를 파시즘의 폭력체제로 분석하고, 이 체제가 표방하고 있는 규율, 질서, 자제, 적응, 순종, 노력 등의 집단 가치들은 결국 개체의 자연스런 감정이나 욕구를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압에 따른 만성적 욕구억제로 인한 내면의 심적 기형화 상태인 감정차단과 감정정체 현상을 보게된다. 억압의 결과인 결핍증후군과 감정정체 상태는 이미 출생과 더불어 시작되고 교육과 사회적 상황을 통해 강화되고 만성화되며, 그러한 상태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심적 거부반응으로 인해 결국은 무의식 속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 상태에 처한 사람은 자연스러움으로부터의 소외, 감동성의 차단, 인격의 분열로 나타나 결국 '건강한 것'과 '병적인 것' 마저 구별하지 못하는 성격의 기형화 상태로 빠진다.⁸⁾

구 동독은 실제 하나의 감옥이었다. 베를린 장벽 구축은 외적으로 외부세계와 차단시킨 장벽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독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내면세계와 자신을 단절시킨 장벽이었음을 상징했다. 마즈는 권

7) 한스-요하임 마즈·송동준 옮김, 「사이코의 섬 - 감정정체·분단체제의 사회 심리」 (민음사, 1994), pp. 288~302.

8) H. 마즈, 앞의 책, p. 83.

위주의적 성격은 종속과 권위주의적 행동지침을 스스로 요구한다는 사실을 임상 경험에서 확인했다.⁹⁾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해한다. 억압을 가하는 권력자들도, 그들 역시 그러한 억압체제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내적 정신구조에 있어서는 이들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현상의 근원을 H. 마즈는 “이 파시즘적 성격구조는 이른바 ‘반파시즘적’ 영웅들에게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전체주의적 인간경멸적 불법체제를 구축할 수 없었을 것이다”¹⁰⁾고 하여 심리적으로 과거의 파시즘이 청산되지 못했던 데에서 찾는다. 따라서 개체의 왜곡된 기형화의 정신 구조, 소외되고 노예화된 정신 구조, 즉 ‘내면적 파시즘’ 이것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보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밝은 미래를 위한 참된 화해는 불가능하다.¹¹⁾

성격 왜곡현상이 보편화되어 그 자체를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오직 이 성격왜곡을 통해서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건전하고 정상적인 심성과 태도는 그러한 억압체제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고립과 억압적 폐쇄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의 인성이 분단체제하 사회주의 동독의 주민들이 겪었던 인성의 파괴, 심성왜곡 현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성왜곡 현상은 우리 사회와는 전혀 무관할 것일까?¹²⁾ 이미 H. 마즈의 저서는 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서독

9) H. 마즈, 앞의 책, pp. 58~61.

10) H. 마즈, 앞의 책, p. 173.

11) 「특집/우리 안의 파시즘: 내면화된 권력, 혹은 ‘자발적 복종’에 대하여」: 임지현, “일상적 파시즘의 코드 읽기,” 「당대비평」, 1999년 가을호 08 (삼인), 참조.

12) H. 마즈의 저서에 대한 베르크홀츠(Stefan Bertholz)의 서평(Die Zeit, 1990년 11월 16일자)은 동독의 억압체제를 서독의 체제와 병행시키고 있다. “우리들에게서는 어떤가? 우리가 언제 이와 달리 살았던가? 아이들 교육이 우

상황을, 서방 문명에서 산업상의 제반 믿음을 거울에 그대로 비친 것처럼 읽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는 지금도 동서독이 경험했던 분단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픔과 좌절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우리의 과거와 죄를, 우리의 억제되고 숨겨진 참모습을 ‘슬픔의 청산작업’¹³⁾을 통해 밝혀보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의 고유한 恨의 정서를 생각해 본다면, 恨이 한민족의 집단정서의 한 특성이라면, 동족간의 전쟁의 상흔, 증오, 저주, 불신의 잔재 등을 적어도 ‘체념의 미학’으로 승화시키거나 문학·예술 부문에서의 ‘한풀이’의 문화를 통해 씻어내는 이른바 카타르시스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럴 경우 우리는 민족의 참된 화해와 ‘한’ 멧힘을 풀어내려는 노력을 통해 서로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¹⁴⁾

북한은 제국주의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 ‘국토완정론’에 입각하여 전쟁까지 불사했고, 남한은 북한지역을 ‘수복’하여 공산 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자유세계로 흡수하기 위해 ‘북진 통일론’의 야망을 키워왔다. 이 극단적 대립항을 매개해 줄 수 있는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남북한 주민은 모두 정상적인 심성을 지닐 수 없었다. 우리는 인간을 언제나 주체와 객체로 모든

리에게서도 무엇보다 기존(잘못 설정한) 계급체제를 위한 준비과정인 아닌가? 언제 마즈가 말하는 ‘동반하는’ 교육을 시도했는가? 아이들이 줄을 서고 견게 하는 ‘조종’이 아니었던가?...북종과 규율과 성취! 그렇다. 바로 이 정확성과 청결을 위한 훈련. 그것은 독일 덕목으로서 기분이 우쭐했을 때든, 패배했을 때든 파괴할 때든 아니면 건설할 때든 어느 때나 요구되었던 것이다.” 앞의 책, p. 305. 재인용.

13) H. 마즈, 앞의 책, p. 264.

14) 恨이 우리의 오랜 역사의 잔재라면, 이를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민족실존의 정서와 의지로 재생시킬 것인가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입장은, 고은, “恨의 극복을 위하여,” 『한국사회연구』2 (한길사 1984.2), p. 161.

사회적 관계에서 행위자와 희생자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스스로 대결과 갈등의 냉전구조를 심화시킨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총체적 기만체계 속에서 뒤틀린 인간 심성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겼던 냉전문화의, 일부 수혜층도 있지만, 희생자였던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나 민족적 차원에서 그야말로 일그러진 자화상을 수습하고 참된 의식과 삶의 토대를 마련하여 민족화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분단의식의 폐해를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반쪽의 자아와의 대결에서 마침내 승리한 우월의식과 우리 사회의 제도, 가치관, 삶의 양식 등에 대한 무비판적 확산, 그리고 위기에 처한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남침야욕 등을 강조하면서 항상적인 긴장과 새로운 안보논리를 동원하여 민족 사회의 미래지향적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안보논리는 지배권력 블록의 권력유지를 위한 물질적·사회적 기반을 갖는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해왔다.

그런데 이 경우의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의식주체의 정치적·사회적 의식을 무매개적으로 곧바로 ‘불러내는(interpellate)’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특정한 문화적 요소나 덕목, 또는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하여 작동한다.¹⁵⁾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의 합리적 내용에 의해 설득되고 지지되어 왔다가 보다는 고도의 강권력을 수반하는 보족적 이념들에 의해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우리의 현실에서 자본주의 이념이 노동통제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곧잘 ‘빨갱이’, 노사화합, 총화단결, 일사불

15) Louis Althusser,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 (N.Y.: Monthley Review Press, 1971); Göran Therborn, *The Ideology of Power and the Power of Ideology* (London: Verso, 1980), pp. 6~7.

란 등과 함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민족주의, 반공주의, 유교 전통의 도덕적 덕목, 미풍양속, 군사적 메타포 등의 보족적, 하위 이념적 요소와 연결되어 나타나게 된다.¹⁶⁾ 이처럼 다양한 매개 요소들에 내포된 공포 유발의 효과는 개개인의 의식 구조 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제도 교육의 영향력과, 매 특정 계기마다 끊임 없는 공포의식을 반복시키는 언론의 역할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사회 냉전문화의 형성과정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교육 체계와 언론 부문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6)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1993), pp. 217~18.

Ⅲ. 냉전문화의 내면화 양식

1. 교육

가. 교과서와 이념교육

1) 해방과 민족교육

한국사회에서 반공이데올로기는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정신습속(mentality)에까지 침투되게 되었다.¹⁷⁾ 한국 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의 연원은 멀리 일제 식민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¹⁸⁾ 그러나 식민지시대의 민족해방운동의 한 노선으로 선택된 사회주의는 일제의 간악한 탄압과 의미변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민중으로부터 경원시되지 않았다.¹⁹⁾ 해방후 반공주의는 일제말 군국주의 파시즘이 조장했던 민족운동가에 대한 공격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것이었으나, 좌경적 경향이 강한 해방정국의 이념적 지형 속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오히려 1930년이래 적극적으로 일제에 저항한 세력이 좌익이었다는 점 때문에 친공이데올로기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²⁰⁾ 이는 당시 미군정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

17) 유재일, “한국전쟁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착,” 「역사비평」 계간16호 (역사문제연구소, 1992 봄), p. 139.

18) 정영태, “일제말 미군정기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역사비평」 계간16호 (역사문제연구소, 1992 봄), pp. 127~130.

19)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사회주의 사상가를 흔히 ‘主義者’로 간략히 불렀는데, 주의자 스스로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박갑동, 「박헌영 - 그 일대기를 통한 한국 현대사의 재조명」 (인간사, 1983), p. 34.

론조사 문항 가운데,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중 어느 체제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자본주의 13%, 사회주의 70%, 그리고 공산주의 10%로 나타났던 조사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²¹⁾ 해방 직후 채만식(1902-50)은 그의 사회풍자적인 소설 작품 「도야지」에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²²⁾

불원한 장래에 사어(死語)사전이 편찬된다면 빨갱이라는 말은 당연히 거기에 오를 것이요, 그 주석에 가로되 1940년대의 남북조선에 불세비키, 멘세비키는 물론 아나키스트, 사회민주당, 자유주의자, 일부의 크리스찬, 일부의 불교도, 일부의 공맹교인, 일부의 천도교인 그리고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로서 단지 추접한 것과 불의한 것을 싫어하고 아름다운 것과 바르고 참된 것과 정의를 동경, 추구하는 청소년들, 글밖에도 xxx와 ○○당의 정치노선에 따르지 않는 모든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 빨갱이라고 불렀느니라.

한편 미군정기에 편찬된 중등 국어 교과서를 예를 들면, 필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좌익성향의 진보적 지식인들이거나 적어도 일제 시기 프롤레타리아 경향문학을 주도했던 시인·문학가도 참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 시기의 국정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당대의 최고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는 특정한 이념적 입장을 배제하지는 않

20) 로버트 T. 올리브·박일영 역, 「대한민국 건국의 비화 - 이승만과 한·미관계」 (계명사, 1990), p. 68.

21) 이성근, “해방직후 미군정치하의 여론동향에 관한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 25집(1985), pp. 119~131.

22) 「도야지」(「문장」 속간호, 1948.10, 「채만식전집」(창작과비평사, 1989) 재수록); 채만식은 식민지시대 한국인의 사회의식을 풍자하면서 인간의 의식세계의 일반적 유형을 탁월하게 표출한 한국의 대표적 문학가로 소개된 바 있다. Ch'ae Man-Sik, trans. by Chun Kyung-Ja, *Peace Under Heaven* (N.Y.: M. E. Sharpe, Inc., 1993), 참조.

위에서 인용한 시는 전체 67행 5쪽 분량으로, ‘익힘’이라는 형태로 “이 노래를 보고 느낀 바”를 말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노동자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는 시로서, 혁명의 정당성의 확인과 동시에 누구라도 금방 혁명전선에 몸을 던질 것 같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매우 감동적인 노래다. 해방후 이념적 차원에서 국정교과서의 편찬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적 상징, 전통문화, 도덕·윤리 등에 걸쳐 다양한 학자·문인들의 문학작품과 논설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처럼 미군정하 한국인만으로 이루어진 한국교육위원회는 주로 자유민주정신이나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교육방침으로 민족적 독립자존의 기풍, 국제 우호 협조의 정신, 실천공행과 근면노작의 정신, 책임감과 공덕심, 고유문화의 순화 양양, 과학기술, 체위 향상, 숭고한 예술, 순후원만한 인격의 양성 등이 전항에 걸쳐 제시되었으며, 반공 사상의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²⁴⁾ 뿐만 아니라 정부 수립과 때를 맞춰 발간된 국정 국어 교과서에도 청소년의 심성의 순화, 전통문화, 민족의 위인, 조국애와 금수강산의 자부심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반공정신의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²⁵⁾

2) 한국전쟁과 반공이데올로기

한국전쟁을 통해 남북한 사회의 구조와 이념적 지형은 완전히 전치되고 다시 새롭게 구조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24) 朝鮮語學會, 「중등국어교본」 상 (문교부, 1946년 8월); 「중등공민」 상 (문교부, 1946년 4월), 참고.

25) 문교부, 「중등국어」 1 (문교부, 단기 4281년 1월 20일 펴); 「중등국어」 ② (단기 4282년 8월 펴); 「중등국어」 3 (단기 4281년 8월 펴), 참고.

그전까지 극우세력과 지배계급에 국한되어 있던 반공이데올로기를 대다수 국민들의 심성 속에 각인 시키는 한편 분단의식을 내재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²⁶⁾ 한국의 반공주의는 처음부터, 미국의 반공주의가 세계체제 내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이념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친일파와 지배계급들의 계급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에 본질적 속성이 있었다.²⁷⁾

정부 수립 후 문교정책의 일환으로 창설된 학도호국단은 과외활동으로서 반공의 기세를 올린 바 있다. 이 시기 학도호국단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43 제주항쟁', 여순반란, 대구10월폭동 등의 좌익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에 대항하여 반공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 등과 함께 결성되었다. 학도호국단의 결단식에 즈음하여 낭독된 결의문은 “우리 학도는 반민족적 반국가적 사상을 깨뜨리고 민족 통일에 결사 헌신한다”²⁸⁾고 선서하였는데, 여기서도 아직 반공 구호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다.

전쟁 중 정부는 1951년 초 전시하 교육 특별조치 요강을 제정·공포하여 전시교육방침으로 「멸공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전국(戰局)과 국제집단안전보장의 인식을 명확히 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반공교육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공산주의는 우리 인민의 적이라는 신념 아래, 공산당을 쳐부순다는 강한 신념으로 대학 이하 중학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문교부는 전시하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국문보급을 위한 교육을 일시 보루하고 20세부터 30세까지의 장정층을

26) 반공이데올로기의 수용을 전쟁의 피해와 공포의식에 기반한 '수동적 동의'로 파악한 연구로, 한지수, “반공이데올로기와 정치폭력,” 『실천문학』 제5호 (1989년 가을), pp. 111~12.

27) 최상룡,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나남, 1988), p. 145.

28)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한국학생건국운동사 - 반탁·반공 학생운동 중심-」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출판국, 1986), p. 505.

대상으로 정신계몽운동을 실시하였는데, 국민재교육사업에는 월남피난민의 사상교육을 위한 강습회 개최와 월남교원에 대한 재교육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교부는 사상지도원을 설치하여 각종 반공관계 서적으로 구성된 「사상총서」와 「사상」이라는 월간지를 발행하여 국민들의 사상선도에도 힘을 쏟았다.²⁹⁾

그런데 1950년대 중·후반에는 반공사상이 방일정신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³⁰⁾ 방일반공(防日反共)을 문교 행정의 표어로 삼고, 중등학교의 부독본으로 반공독본을 간행하였다. 이 시기 반공교육과 관련하여 ‘반공방일(反共防日)교육요강’ 및 ‘반공독본’ 등의 교재를 통한 교육 내용과 함께 각종 반공행사와 강조주간 설정, 학도호국단 간부 합숙훈련, 반공방일 주제의 웅변대회 개최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³¹⁾ 이처럼 전쟁 후반기의 교육정책에 멸공구국의 사상을 역설하여, 특히 반공 도의를 선양하도록 도의교육위원회 등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교과내용에 반공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않았다.

한국의 반공이데올로기는 '60년대 5·16 군사정변에 의한 군사정권 수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5·16 군사정변은 제2공화국의 민주당정권의 무능과 4·19 혁명³²⁾의 이념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단행된 쿠데타로, 혁명 공약의 제1조에 「反共을 國是의 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할 것을 내세웠다. 제5조에는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29) 문교부,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pp. 122~34.

30) 반공의 굳은 결의와 일본 제침의 우려를 강조한 내용은 ‘반공 방일의 정신’ 「중학도의」 2 (문교부, 단기 4219년 3월 25일 박음), pp. 140~152, 참조.

31) 서울시교육위원회, 「서울교육사」 上 (서울시교육위원회, 1981), pp. 231~32, 415~16.

32) 4·19혁명을 계기로 학도호국단은 해체되었고 학원의 반공 과외활동은 잠시 동안이나마 거의 없어졌다.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고 하여 이른바 ‘선건설후통일’론에 기반한 반공의식 고취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또한 이 시기부터 교과 과정에서 반공주의가 특히 도덕과목을 중심으로, 국어 및 사회과목 등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도덕교육은 해방후 일제 잔재인 修身 과목을 없애고 미군정 하에서는 미국식 사회생활을 모델로 한 공민 과목을 설치하였다가 1956년에 처음으로 도덕 과정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그후 이 도덕 교과서를 통해 반공교육을 실시하였던 바, 반공교육이란 도덕교육을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교육의 성패가 달려있었으며 결국 반공정신 그 자체가, 전통적인 윤리 부분을 제외하면, 도덕의 주된 내용을 차지했고 우리 사회에서 오래동안 반공정신이 곧 도덕 그 자체로 인식되게 되었다.³³⁾

교육체계를 통한 반공주의는 1970년대 유신체제의 등장과 함께 ‘한국적 민주주의’의 이념적 지표아래 반공주의는 ‘충효’와 같은 봉건적 덕목과 연관되어 강조되었다. 1973년부터 시행된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족주체성 교육, 민족사관, 안보교육, 국가관의 확립, 한국적 민주주의, 충효교육 등이 주요 이념으로 내세워졌으며, 그에 따라 국가 및 도덕 교과서의 비중이 강조되어 국사과목이 국정과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³⁴⁾ 이 시기는 1960년대 이래 지속된 개발 이데올로기의 강조 아래, ’70년도 초반 냉전체제의 한 축을 완화시키는 듯한 국제정세의 대탕트 분위기에 대한 국내 정치적 반응이 국민정신 무장의 강

33) 金斗憲, “反共教育을 되돌아본다,” 『새교육』 (대한교육연합회, 1968.3), pp. 46~49.

34) 한만길, “교육과정과 국가의 사회통제,” 『교육개발』, 8권4호 (한국교육개발원, 1986), p. 8, pp. 23~25.

화로 나타났던 특징을 보였다.³⁵⁾ 그후 반공·냉전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에서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세대 어떠한 비판과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⁶⁾ 이처럼 국가 차원의 반공교육의 체계화 작업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심성 속에 반공·반북의식과 냉전문화가 깊이 각인될 수 있었다.

나. 반공이념의 내면화

1) 묵시록적 반공주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묵시록(默示錄)적 반공주의가 팽배해왔다. 묵시록적 반공주의는 이성과 비판적 사고 영역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자 하나의 계시적인 가르침의 형태로 나타난다. 마치 서구 중세 암흑사회에 있어서는 종교적 도그마와 신적 권위의 표상 앞에 마주 설 수 있었던 것이 전혀 있을 수 없었듯이, 한국 사회의 반공주의는 그 자체가 의심할 바 없는 '진리'로 군림했다. 단적이 예로, 반공교육의 산증인이자, 분단시대 한국 어린이상의 완벽한 이념형인 '이승복 학생'의 상징성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장공비의 총칼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무참히 희생당했다. 그후 우리나라의 많은 초등학교 교정에 이승복 어린이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

35) 문교부에서 발간한 '반공교육지도 지침서,' 「국민정신교육」(1973년 9월), 참조.

36) '80년대 후반 학계의 민주화와 진보적 학문연구를 표방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제기로, 학술단체연합심포지움 발표논문집,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역사비평사, 1998.8), 참조.

어린이의 마지막 절규는 항상 반공 글짓기대회에 주된 표어로 어린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최근 이 말의 최초 보도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고, 아직 그에 대한 명백한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그 말을 누가 실제로 들었다고 할 경우, 그 어린 소년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절규하듯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반공의식을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승화시켰던 우리 사회의 도덕교육의 개가요 엄청난 성공을 웅변해 준다.

그런데 그 어린 학생에게 공산주의는 과연 무엇이며, 반공은 또 어떠한 가치였을까? 물론 반공교육은 사람들이 아무런 회의 없이 무조건 공산주의를 증오할 수 있을 때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묵시록적 반공주의, 이 맹목적 반공의식이야말로 그 대립점의 한 끝에 있다고 여겨진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바로미터였으며, 공산주의에 대한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부·증오가 도덕적이고 올바른 인간상의 척도로 인식되었다. 반공이념과 반공교육은 한국의 어린이들로, 그후 그러한 집단기억을 내장한 채 성장한 한국의 성인들, 하여금 손가락으로 누르면 즉각 툭 튀어나오면서 “빨갱이”라는 기계음을 벨어내는 ‘자동인형’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누가 한국의 어린이를 이렇게 만들었던가?

에릭 프롬(Eric Fromm)은 1930년대 독일 나치즘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자유에 대한 하나의 심리학적 문제로 분석한 「자유에서의 도피」에서, 근대인은 아직도 모든 종류의 독재자들에게 자신의 자유를 넘겨주도록 갈망되고 있거나 유혹되고 있는 심리상태를 서구 중세사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과정 속에서 집단심성의 변화과정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근대인은 기계 속의 하나의 작은 톱니바퀴로 그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유를 상실하고 있으며, 잘 먹고 잘 입고 있긴 하나 자유인이 아닌 자동인형(自動人

形)이 되고 말았음을 개탄했다.³⁷⁾ 더욱이 자유에 대한 인간의 공포, 자동인형이 되려는 인간의 열망과 즐거움에 관한 이유는 계속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우울하게 전망했다.³⁸⁾ 자유와 자발성을 상실한 인간의 사고와 감정과 행위는 그들 자신의 표현이 아니라 자동인형의 표현에 불과하다.³⁹⁾ 그러나 대결과 갈등의 분단체제 아래서 이 묵시록적 반공주의의 기만체계의 본질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히려 진실을 알고 있거나, 알려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스런 일인가를 체험했으며, 적색 공포를 내면 깊숙이 내장한 채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투쟁심의 고취를 ‘자유’ 이념의 구현으로 여겼다. 이쯤에서 다시 분단시대 한국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반공의식의 상징적 구현 양식을 살펴보자.

<1: 1989년>

“승복아, 체비처럼 재잘거리던 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너는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커서, 기어이 너의 원수를 갚아 주마!”⁴⁰⁾

“공산당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다. 인간의 목숨까지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아주 가볍게 여기곤 하지.”⁴¹⁾

37) E. 프롬-이상두 역, 「자유에서의 도피」 (범우사, 1993), p. 19, p. 320.

38) E. 프롬, 앞의 책, pp. 19~20.

39) E. 프롬, 앞의 책, p. 303.

40) 문교부, 도덕 5-2 (1989년 8월 1일 박음, 1989년 9월 1일 펴냄), pp. 131. 이 교과서 제 11단원: ‘이 승복 어린이’에서는 ‘공산당이 싫어요’ 및 ‘공산당의 잔인성’ 그에 대한 복수의 결심을 다지고 있다.

41) 문교부, 앞의 책, p. 138~39.

<2: 1994년>

“삼촌, 저 쪽에 이승복 기념관이 보이는군요.” “그래, 그옆에 동상도 보이는구나 내가 국민 학교 다닐 때의 일이니까,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같은 겨례로서 나이 어린 학생까지…….” 삼촌께서는 지난 일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1968년, 승복이가 2학년 때 일이었지. 당시 울진·삼척 지구에 침투 하였던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승복이네 가족을 해쳤단다. 인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비극이 없어야 할 텐데…….”⁴²⁾

동일한 주제에 대한 사례<1>의 언어 표상에 비해 사례<2>는 보다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두 사례는 물론 약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간행된 교과서로 사례<2>의 경우 남북한 관계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90년대의 '자신감'을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한 세대가 지난 시기에 이르러서도 기억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반공교육의 집요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반공교육의 효과는 지금도 여전히 실효성을 지닌다.⁴³⁾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성장기 소년·소녀들의 내적 독립과 개성 즉, 그 성장과 완전성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에 있어 교육은 위로부터 부과된 감정과 사상 그리고 소망들로 인해 그 자발성이 제거되는가 하면 독창적인 정신적 활동이 대치되는 결과가 자주 일어난다. 그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정신

42) 문교부, 도덕 5-2 (1990년 9월 1일 지음, 1994년 9월 1일 펴냄), pp. 152~53. 이 교과서 제 10단원: '통일을 향해서'에서는 '이승복 기념관' 및 '통일의 길'을 다루면서, 이승복 이야기에서의 역사적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

4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북한이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전달하기 위해 1999년 6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평화의 염서보내기 운동을 통해 모은 남한 기독교인들의 염서 2,276장을 분석하였는데, 이 중 437명이 신앙인의 염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만1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공산주의는 사탄의 새력'이라는 등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 내용이 전체의 14.1%인 321건을 차지했다. 「국민일보」 1999년 12월 2일자, 참조.

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비교적 초기에 주입되는 적개심과 증오 그리고 공포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교육체계 가운데 인간 존엄성, 공동체의식, 인류 보편적 가치 등을 배양하는 인문교육의 의의가, 자연현상의 원리에 대한 과학적 세계관의 인식이나 지식과 기술의 전수와 습득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내용과는 달리, 새삼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전체 위에서 특히,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 깃든 말과 얼을 보존하고 되살리는 국어 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⁴⁴⁾

국어 교육에서 시가 중시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시는 인간 심성의 가장 순화된 내면 세계를 표상하는 언어예술이다. 꽃봉오리처럼 막 터지려고 하는 청소년 시기에 만나는 아름답게 고양된 시어는 성인이 된 후에 삶에 지치고 부대길 때마다 별처럼 빛나는 가슴속의 보석과도 같다. 시를 읽음으로써 청소년들은 사물을 보는 바른 눈을 갖추게 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자연에 대한 애정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에 실린 시들은 이러한 몫을 충분히 다해내고 있을까? 오히려 저주와 증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그야말로 피냄새나는 언어가 시의 형태로 청소년의 심성 속에 깊이 각인 시켜 분단민족의 고통을 복수의 신념으로 가득 차게 했던 교육은 아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몇 개의 대표적인, 40·50대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학창시절에 감동적으로 암송하기도 했거나 적어도 익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시를 살펴보자.⁴⁵⁾

44) 민족교육의 과제와 관련하여 국어 교육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박태순, “국어교과서와 민족교육 - 초중고 국어교과서의 개혁을 위하여 -,” 『한국사회연구』2 (한길사, 1984.2), 참조.

45) 모윤숙,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문교부, 중학국어 3-I (4287년 3월 25일), pp. 32~38.

“산 옆 위달은 골짜기에 혼자 누워 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향기여! 앞드려 그 젊은 주검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조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앞으로, 진격! 진격! 원수를 밀어 가며 싸웠노라.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저 원수의 하늘까지, 밀어서 밀어서 폭풍우같이, 모스크바 그레플린 탑까지, 밀어 가고 싶었노라……”

모윤숙의 ‘나는 광주 산곡을 헤매다가, 문득 혼자 죽어 넘어진 국군을 만났다.’고 하는 부제 비슷한 것을 붙인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이 대표적인 반공애국시는 상당히 긴 시로 오랫동안 국정 교과서에서 군림했고 그녀는 이 시로 인해 일약 명성을 크게 떨쳤다. ‘피’,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향기’, ‘원수’ 등의 언어에서 어떠한 감정이 솟아날까? 그런데 이 시인의 은유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아예 ‘원수’를 외치는 시도 반공애국시의 대표적 반열에 올랐다. 유치환 시인은 서울 재탈환의 감격에 겨워 “원수 너희 열 번을 침노하여 무절러 보라. 열 번을 반드시 너희의 피로 씻어 돌려야 될 지역이여니”라고 소리쳤다.⁴⁶⁾ 한편 김춘수의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는 전 48행의 장시로서, 그야말로 세계주의적 관점에서 반공의식을 시적 언어의 형태로 형상화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⁴⁷⁾

“다뉴브 강에 살얼음이 지는 동구의 첫겨울 가로수 잎이 하나 둘 떨어져 뒹구는 황혼 무렵 느닷없이 날아온 수발의 소련제

46) 유치환, 「원수의 피로 씻은 지역(地域)」, 문교부, 중등국어 2-1 (4285년 5월 25일), pp. 47~48.

47) 김춘수,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3 (1975년 2월 20일 초판 박음, 1983년 3월 1일 펴냄), pp. 112~115.

탄환은 땅바닥에 쥐새끼보다도 초라한 모양으로 너를 쓰러 뜨렸다. 바퀴진 네 두부(頭部)는 소스라쳐 삼십 보 상공으로 튀었다. 두부를 잃은 목통에서는 피가 네 낮익은 거리의 포도(鋪道)를 적시며 흘렀다.- 너는 열 세 살이라고 그랬다.……부다페스트의 소녀여.”

1956년 헝가리에서 일어난 대규모적인 반소운동은 극동아시아의 한켠의 분단국가의 시인에게도 특별한 영감을 주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인은 스스로 순수시인이라 자처해왔지만 이 시만큼 현실고발과 현실참여의 극적 형태를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다.⁴⁸⁾ 이 시인의 시적 상상력이 헝가리 사태에까지 미쳐 당시의 현장 상황을 재현하는 듯한 분위기를 설정하여 극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 이 시의 메타포는 부다페스트와 서울 두 곳에서의 소녀의 죽음이라는 상황 설정에 있다. 두 소녀는 똑같이 열 세 살이며, 그들을 죽인 자들은 공산군이다. 그러나 그 죽음은, “씩은 비정의 수목들에서 보다… 자유를 찾는 네 뜨거운 핏속에서” 움트기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달리 말해 무자비한 공산당의 만행에 의한 죽음이나 고귀한 자유를 꽃피우는데 위대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 이 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서, 한국의 반공애국시는 이처럼 학생들에게 반공사상에 기반한 전세계적 유대감을 형성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뉴브강의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급전시킨 이 반공애국시의 ‘쥐새끼’,

48) 이 시는 처음 69행이었으나 교과서에는 19행에 삭제된 채 48행만 실렸는데, 삭제된 내용은 반일감정이 주조를 이룬다. 김현승, 「한국현대시 해설」, (관동출판사, 1975), pp. 87~88. (『김현승전집』3 (시인사, 1986) 재수록). 교과서에 이 시를 수록한 의도는 반공의식의 고취에 있지 반일의식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반공이 반일의 연장선 위의 행위처럼 느껴지게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위험하고 자가당착적인 일이다. 반공이 반일에 우선해야 하며 반공 효과를 훼손할 경우 반일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현실에 시인과 교과측은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것이다. 신경림, “어떤 시를 가르칠 것인가 - 中 高校 교과서의 시를 읽고 -,” 『한국사회연구』1 (한길사, 1983.6), pp. 229~234.

‘두부’, ‘목통’, ‘피’ 등의 언표에 묻어나는 섬뜩한 공포 의식은 동포에 대한 증오의 싹을 키우게 했고 분단시대의 광기(狂氣)를 재생산시킨 첨예한 냉전의식의 표상 이외의 별 다른 것이 아니다.

이처럼 교육체계를 통한 반공주의의 의미 확장은 반공주의적 세계관의 일상적 내면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정신 속에 특정한 정치 사회적 사고와 행위를 자발적·자동적으로 유발하는 일종의 회로판을 형성하게 된다. 그것은 사상적 획일성과 명확성, 군사동원주의적 심리, 배타적이고 감시자적 태도, 반정치적 일원주의적 질서, 도덕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지난 시대의 식민지적·군사주의적 정치 질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키는 데는 반공주의의 기여도가 높았다.⁴⁹⁾ 그럼에도 이러한 심성의 훈육은 단정한 교육 체계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았다.

2) 안보이데올로기

안보논리는 성장, 안정, 질서, 규율, 총화단결 등의 메타포와 더불어 학문과 예술 등 개인적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고의 원칙적인 제약 논리로 작용했다. 한국의 안보논리는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와 민족적 자립자존의 방향을 친미 이데올로기에 접합시킨 특징을 지닌다. 안보이데올로기는 대내적으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공공복리의 증진’ 등으로 표출되면서, 한국의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핵심이데올로기로 법적 권위를 획득한 메타범이데올로기로 군림했다.⁵⁰⁾

49) 권혁범,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 체계와 정치 사회적 기능,” 『당대비평』, 1999년 가을호 09(삼인), p. 64.

50) 심희기, “한국법의 상위이념으로서 안보이데올로기와 그 물질적 기초,” 『창

국가안보는 일반적으로 국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¹⁾ 그런데 파시즘국가와 현재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대내적인 계급 또는 계층적 갈등의 문제와 이념적 문제를 비롯한 비군사적인 갈등까지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한국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대내적 문제가 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되어 오면서, 군사적 위협의 실체보다는 대항이데올로기의 표출이나, 그 보다 훨씬 하위 수준인 개혁의 주장이나 비판논리마저 안보의식을 저해하는 저항과 도전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안보관이 학문과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 국정 교과서 밖의 역사 해석이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널리 읽혀지자 정부는 이 책이 계급개념을 도입한 용공·좌경서로 문제삼아 이른바 「한국민중사」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사건은 안보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에서 학문과 사상, 출판의 자유를 어떻게 제약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던 사건으로 분단시대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다. 여기서 당시 우리 사회의 비상한 관심 속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재단하는 공권력의 입장과 이에 대한 관련학계의 변론은 지금 상황에서도 분단현실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경청할 만 하다고 본다.⁵²⁾

작과비평」 1988년 봄호, p. 266.

51) 냉전 해체후 국제체제의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여 안보론 연구에 대한 확대 해석과 축소해석간의 논쟁은, Barry Busan·Ole Waever·Jaap de Wilde,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안보총서 81, 「안전보장」(1988.12), pp. 17~22.

52) 자료 「한국민중사」 사건 증언기록(1987.7.6), 「역사비평」 제1집 (역사문제연구소, 1987.9), p. 375.

문(감사가 증인에게): 냉전체제가 사상과 학문의 자유에 어떤 제약을 가져온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전공한 분야라든지 그걸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학문연구에 냉전체제가 어떤 제약을 가져왔나요?

답: 제기 70년대 말에 어느 재판에 나와 경청한 일이 있는데 그때도 학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건에 ‘착취’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때 ‘착취’란 용어를 쓸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위험한 용어가 아니냐고 하니까 그 사람 대답이 노총에서 제정하는 자기들의 노래에 ‘착취’란 말이 나온다 하며 그 가사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계급’이란 용어를 쓰는데 이 계급이란 용어도 어떤 일인지 계급이라는 용어를 쓰면 계급투쟁으로 연상을 하고 그 연상은 바로 자본주의의 타파로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연상하는 경향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런 발상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계급갈등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그 갈등상태를 정확히 봤으면 그 문제의 해결도 빨리 할 수 있는데 ‘계급’이란 용어 그 자체를 제약한다면 그만큼 학문을 제약시키는 것이지요.

문: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있어 냉전논리를 극복하자는 말씀이 물론 학문적으로 엄밀성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상에 있어서도 분단이 갖는 현실 또는 이데올로기 분단 같은 것은 현실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제가 그 현실을 부정하자는 건 아니지요. 현실은 현실대로 사회과학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꾸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점을 너무 사회적으로 강조하다보니까 예기치 않은 사건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고문치사사건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 또 분단이데올로기가 그만큼 우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과학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학적인 파악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걸 극복해가는 방법, 조건, 방향 이런 것이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분단시대 한국 현대사의 반공주의적 교육은 체제와 이념 문제에 대한 개인의 어떠한 자율적 판단의지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체제 순응적 존재의 양산을 교육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교육체계 속에서 훈육된 세대는 대개의 경우 어느 곳에서도 파시즘이 대두할 수 있는 풍부한 토양 역할을 하였던 '개인의 무의미함과 무력함'⁵³⁾에 순응적으로 되었던 것이다. 사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명백한 광기, 증오와 저주에 대한 묵시록적 수사, 신화 창조, 집요한 주입과 기억 되살리기 등으로부터 아무도 도피할 수 없었던 닫힌 공간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제도교육이 성취하지 못한 것, 이를테면 제도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냉전이데올로기들은 보다 촘촘한 그물코를 만들기 위해 동원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인들을 재교육 체계에 통합시키고, 언론 매체에 의한 이념적 설득과 공세의 일상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2. 언론

가. 언론과 레드콤플렉스

1) 대북·통일관과 언론

우리 사회에서 분단의식과 냉전문화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언론 매체라는 사실은 결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⁵⁴⁾ 일반 국민들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53) 에리히 프롬, 앞의 책, pp. 282~83.

54) 모니터네트워크 1, “웹비저널리즘과 선정·냉전주의의 만남,” 「언론개혁」 창간호 1999.7, 언론개혁시민연대, p. 26.

여론 형성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정보를 수집·독점하고 있는 언론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검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언론의 메시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분야보다도 언론은 보다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레드콤플렉스와 반복 냉전의식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견인차라 할 수 있다. 수많은 시민이 거의 매일같이 사건과 시국정세에 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북한관련 보도내용의 신뢰도는 상당히 낮다. 1998년도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국민여론조사 가운데, 북한관련 매스컴의 객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한이 매스컴(신문, 방송, 잡지 등)에 나타나는 북한관련 보도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42.5%)이 북한관련 보도가 “북한의 상황을 사실보다 부정적 전달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반면, 북한 상황을 “사실보다 긍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 경우는 1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 30.4%, “잘모름” 14.1%의 반응도를 보였다. 배경변수로 볼 때, 여자보다는 남자가,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관련 보도의 객관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⁵⁾

그럼에도 언론의 영향력은 거의 압도적이다. 학생들의 경우, 통일 및 북한관련 정부의 대부분은 학교 교육에서 보다는 방송 등의 언론 매체로부터 영향받고 있는 점이 조사결과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통일을생각하는서울교사모임(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에 대한 정보는 어디를 통해 얻습니까」라는 설문조사 결과는 통일 및 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배경을 잘 말해주고 있다.

55) 민족통일연구원,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민족통일연구원, 1998년 12월), pp. 39~41.

북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채널로 초등학교 4·5·6학년의 의 경우, TV·라디오 48.6%, 신문 12.0%, 도덕수업시간 17.8%, 주변어른이야기 8.0%, 기타 9.3%로 나타나 TV·라디오·신문 등의 언론매체의 영향력은 60.6%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⁵⁶⁾ 그리고 중학교 1·2·3학년의 경우, TV·라디오·신문 등의 언론매체의 영향력은 오히려 초등학교보다 더 높은 82.4%로 나타났다.⁵⁷⁾ 이처럼 통일관련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통일 및 북한관련 정보, 지식, 생각 및 판단을 학교에서 배워 얻는 경우는 전체의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⁸⁾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중고교생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도, TV·라디오 65.6%, 신문 14.9%, 수업시간 6.8%로 통일 및 북한관련 정보에 관련한 학교 교육의 실효성이 지극히 회의적인 가운데, 여전히 언론의 영향력은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⁵⁹⁾

그렇다면 언론 매체에 의해 통일 및 북한관련 정보가 거의 장악되고 있는 현실은 북한에 대한 학생들이 인식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으로는 최근 대구시의 중학생 각 학년 4개반 1,182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통일관을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학생들의 대북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먼저 학생들의 솔직한 답변을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북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었다.⁶⁰⁾

56) 통일을생각하는서울교사모임(준), 「직녀에게 4」 초등학교 대상 여론조사 결과, 1996년 7월, 참조.

57) 통일을생각하는서울교사모임(준), 「직녀에게 6」 중학생 대상 여론조사 결과, 1997년 3월, 참조.

58) 이장원,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와 대안,” 「새로운 통일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샵」 (경실련통일협회, 1999년 8월 31일), p. 1.

59) 통일을생각하는서울교사모임(준), 「직녀에게 12」 중등학교 대상 여론조사 결과, 1998년 10월, 참조.

- 빨갱이, 북괴, 북한 괴뢰군, 무장간첩, 간첩선
- 북한 사람은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 독재하기 위해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 핵무기, 미사일
- 김일성, 김정일
- 전쟁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자들
- 독재권력과 권력세습
- 북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 북한은 3류의 후진국이다
- 비무장지대
- 기쁨조
- 백두산과 금강산

등의 반응도 순서로 나타났다. 여기엔 북한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 이미지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긍정적이 측면 보다 부정적인 선입견에 매몰되게 된 배경에는 언론의 반복적·반민족적 보도의 일상적 세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그 동안 교육 현장에서나 사회 언론 등에서 남북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사건이 있으며 모두 북한 측에 책임이 더 있는 것으로, 더욱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북한 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음을 지나치게 강조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 언론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과 침략 부각, 김일성·김정일 부자 세습독재, 북한 정권의 부패·타락, 북한의 후진성, 빈곤·식량난 등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포·고착시켜 왔으며, 현재도 이러한 시각의 보도 관행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언론의 이러한 보도 관행은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통일의식과 태도를 길러주지 못하고 오히려 반통일적 인식을 굳히는

60) 박영균, “통일교육의 변화 과정과 전환적 제언,” 통일부·경북대평화연구소·대구광역시민주시민교육연구회, 『제2차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1999.8.24), p. 36.

데 큰 영향을 미쳤다.

2) 언론과 매카시즘

미국 사회에서도 한때 광풍처럼 몰아쳤던 적색공포의 시대에 보수적 언론이 적색공포를 창조해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⁶¹⁾ 보수언론은 대개 어떤 특정 사건이나 시국정세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정확한 자료 인용이 없는 공포 중심 세력의 주장을 보도함으로써 적색 공포의 신화를 창조한 주역을 맡았다. 따라서 보수 언론은 특정한 주장을 과장하고 사실을 곡해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공포음모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또한 급진적이지도 혁명적이지도 않은 정세를 임박한 대재앙으로 변화시켜 히스테리를 조장시켰다. 이 과정은 대개 진보적 지식인이나 민주화운동세력의 글과 말을 마치 급진적 행동으로 일치시키고 이 행위는 다시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혁명의 일부로 여기도록 조장한다는 점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보수 언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⁶²⁾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대한 언론의 악의적인 해석과 왜곡된 표제어들은 그 자체가 정상인의 심성을 뒤흔리게 하고 공포 심리를 유발하기에 충분했다.⁶³⁾ 보수 언론은 우리 사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상 국가안보를 앞세워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정

61) 김형곤, 「미국의 적색공포 1919~1920」, (역민사, 1996), pp. 329~30.

62) '공포' 발생을 조장하는 보수 언론에 대항하여, 레드콤플렉스와 불관용의 억압주체를 비판하는 자유주의적 매체는 지역성과 특정 인구의 한계를 넘어 서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63) '레드'에 대한 극한적 혐오감을 책 표제 자체에서 상징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사례로, 박홍·남용우, 「레드바이러스」(기독교청년문화연구소·생명문화연구소 편, 1997), 참조.

권안보, 혹은 개인적 세력안보에 불과하지만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옹호한다. 예컨대 인권 문제나 시민의 자유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 공안 기능을 옹호하는 한 신문 칼럼은, “과거 우리 공안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긍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공안의 명분아래 정권 이해나 권력적 허영을 추구한 측면도 있고, 또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안에 대한 인식을 추락 시킨 경우도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공안사범으로 몰아 고문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적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과거 공안 담당자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체제적 요소를 다스리는 공안 기능이 매도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⁶⁴⁾ 그런데 과거의 공안세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언론이 스스로 공안세력화되어 고문과 정치적 폭력의 동반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사회에서 매카시즘의 광란을 부채질한 것도 언론의 역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매카시가 언론을 활용한 것 못지 않게 언론의 상업주의와 선정주의가 매카시를 부추겼던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매카시의 부도덕한 언론 플레이에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물론 당시에 시작된 냉전의 국제정치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언론은 매카시가 조작하는 공포 그 자체를 확대하는 역할에 만족했던 것이다.⁶⁵⁾

64) 김대중칼럼, “‘간첩’이 샅대질하는 ‘공안,’” 「조선일보」, 1999년 11월 27일자 참조.

65) 로버트 그리피스·하재룡 옮김, 「마녀사냥 - 매카시/매카시즘」, (백산서당, 1997), pp. 153~56.

3) 통일언론과 보도·제작준칙

우리 사회 언론의 현주소는 아직까지 색깔론으로 덧칠하는 관행과 용공/반공, 친북/반북의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언론계 종사자들 스스로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아 언론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한국기자협회(기협),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피디연합회)가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1995.8.15)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보도제작 준칙의 전문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보도·제작과정에서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다는 반성을 전제로, 보도 및 제작실천요강을 천명하였다. 여기서는 이 보도·제작 준칙의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총강을 밝혀보자.⁶⁶⁾

1. 우리는 대한민국(약칭: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으로 나누어진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 존중과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국명과 호칭을 있는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우리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보도·제작함으로써 남북 사이의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3. 우리는 남북관계 보도·제작에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타파한다.
4. 우리는 남과 북의 우수한 민족문화 유산을 공유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쓴다.
5. 우리는 통일문제에 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

66)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 「시민과 언론」 9907-9908 (<http://www.ccdm.or.kr/minju/990703.htm>).

게 반영하여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이와 더불어 보도실천의 10대 요강으로, ① 남북 긴장해소 노력, ② 인물 호칭·직책 존중, ③ 관급 자료 보도 유의, ④ 내외통신 인용 책임, ⑤ 외신보도 신중 인용, ⑥ 1차자료 적극 활용, ⑦ 각종 추측보도 지양, ⑧ 사진·화면 사용 절제, ⑨ 회화적인 소재 지양, ⑩ 망명자의 증언 취사 등을 천명했다. 그리고 제작실천의 10대 요강으로, ① 정보제공 적극 편성, ② 통일지향 가치 추구, ③ 냉전시대 관행 탈피, ④ 상업·선정주의 경계, ⑤ 다원주의 가치반영, ⑥ 보도활동 제작 신중, ⑦ 생활문화 적극 소개, ⑧ 능동적인 자료 접근, ⑨ 남북차이이해 노력, ⑩ 남북 동질성의 부각 등을 꼽았다.

이러한 보도·제작 준칙의 총강과 실천요강에서 보듯이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한국 언론의 반통일적 성격과 역할을 스스로 인정함 바탕 위에서 새로운 자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그러한 실무 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변화와 개선을 기대하기엔 무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긴장해소 노력, 인물 호칭·직책 존중, 관급자료 보도 유의 등의 보도실천 요강과 그리고 통일지향 가치의 추구, 냉전시대 관행 탈피, 상업·선정주의 경계, 보도활동 제작 신중 등의 제작실천 요강의 실천적 반영은 현재도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수준이다.⁶⁷⁾

67) 예컨대 1999년 6월 남북간 무력충돌의 형태로 나타난 '서해사태'에 대해 마치 남북한 군사충돌을 기다렸다는 듯한 보수 언론들의 보도·제작 태도는 언론이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대북보도의 문제점," 『시민과 언론』 9907-9908 (<http://www.ccdm.or.kr/minju/990702.htm>).

나. 언론과 반복이데올로기

1) 보수언론의 안보위협

한국 보수 언론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안보위협’과 연결시켜 뉴스가치를 높이고 대북 적대감을 자극하고 결국은 정부의 통일정책이 보수화되는 데로 기여해왔다.⁶⁸⁾ 한국 언론들은 주로 강경론자들에게만 지면을 제공함으로써, 강-온간의 정책논쟁을 유도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⁶⁹⁾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의 경우 간혹 정책적 지도력을 발휘하다가도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에 자발적으로 굴복하여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기도 했다.⁷⁰⁾

한국 사회의 보수 언론이야말로 반공냉전의식·반복이데올로기를 생산해 내는 진원지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 사회의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탄해 마지않고 있지만, 조금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데에는 바로 권력과 언론간의 이른바 ‘권언유착’이라는 뿌리깊은 고질적 병폐에 있다. 언론의 존재이유(*raison d'être*)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수호함으로써 정치권력의 부패와 독단을 견제하고 사회적 억압과 모순구조의 실체를 밝혀 건전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역할은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해방이래 한국의 정치문화를 규정해온 반민주적 권위주의 정권과의 야합·결탁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입을 가리고 막는데 급급해왔다. 특히

68) 박용규, “90년대 한국언론의 북한보도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언론재단·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언론의 새로운 역할과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1999.8.27), p. 5.

69) 이호재, “남북관계의 언론을 비판한다,” 『통일한국과 동북아 5개국 체제』(화평사, 1997), p. 227.

70) 박건영,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 『국제정치논총』 제38집2호(1998), p. 93.

'80년대 정권을 약탈한 군부 '참주정(僭主政)' 시대에, 언론은 자발적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참주의 폭력을 감싸주고 정당화시켜 주면서 그 대가로 언론기업의 사세를 확장시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밀착된 권언유착을 통해 그 자체가 스스로 정보기관화 하였고 권력기관화 되어왔다.

한국 사회를 영속적으로 지배하는 두 집단은 재벌과 언론이다. 그런데 재벌이 언론사를 소유한 '재벌언론'과 언론사주의 족벌집단의 영광을 위해 운영되는 이른바 '족벌신문' 들이 역대 정권과 구조적으로 공모·결탁해온 과정 속에서, 비록 정권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재벌언론과 족벌신문의 배타적 지배력과 영향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를 이어 지배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력체로 굳어져 갔다. 이를테면 국가·언론·재벌의 삼위일체식 한 덩어리인 지배집단체가 한국사회의 공고한 지배연합구조라 할 수 있다. 물론 삼자 사이의 알력과 마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갈등양상은 비본질적 균열로 곧장 적당한 형태로 봉합되거나 균열 자체가 금방 해소되기 마련이다.

한국 사회의 참된 민주화의 성취는 어느 면에서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언론의 존재이유를 재확인하는 데에 있다고 보겠다. 제자리를 찾은 그러한 언론이어야만 '광풍'의 생산⁷¹⁾을 중단할 수 있고,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과정과 거짓의 보도를 일삼고 민족의 분열을 부추기는 반사회적·반민족적 행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995년 가을, 전직 대통령들의 엄청난 은익자금이 폭로된 비자금정국에, 노태우 전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게 되자 한 보수 언론은 느닷없이 "북한은 남조선의 내부 모순 격화를 반길 것이

71) 조현연, "레드 콤플렉스, 그 '광풍'의 생산업자들," 「당대비평」 1998 여름호 통권4호, 참조.

다”라며, “대한민국이 건잡을 수 없는 자해의 진수령에 빠지는 출발점이 될”⁷²⁾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그후 북한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를 적절히 활용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더구나 대한민국에 그로 인해 ‘건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이 초래된 것도 아니었다.

보수 언론의 이러한 반공·반북이데올로기는 사실 족벌언론사의 뿌리깊은 친일 행각의 역사를 은폐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레드콤플렉스와 친일콤플렉스와의 친연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⁷³⁾ 특히,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문제와 군부권위주의 청산의 과제가 정치적 이슈로 제기될 때, 보수 언론은 항상 남북한 문제와 연관시켜 민주화의 진척을 가로막는 논설을 펼쳐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때 정부가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5·18 학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수용했을 때, 이를 정국의 국면 전환을 위해 ‘선회’하는 ‘송부수’라는 정략적 차원으로 폄하하면서 돌연 남북 문제를 환기시키는 가운데, “특히 김대통령의 선회가 대북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그렇다(기성 세력의 벽은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다)”⁷⁴⁾며 거의 협박성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는 항상 북한의 남침위협을 대서특필하면서 안보위기를 환기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을 활용하여 레드콤플렉스의 나팔수로서 역할을 떠맡고 나선다. 따라서 진실 은폐와 사실 왜곡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일정책을 그들의 구미에 맞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을 강요하면서 국민 여론을 지배하고 있는 언론, 특히 신문의 개혁 없이 냉전이데올로기와 반북의식의 극복

72) 「조선일보」, 1995년 11월 2일 사설, 참조.

73) 손석춘, “왜 레드 콤플렉스가 문제인가 - 적색 공포증 조장에 앞장선 한국 언론,” 「레드 콤플렉스」 (삼인, 1997), p. 28~32.

74) 「조선일보」, 1995년 11월 25일 사설, 참조.

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신문 개혁이 여타 다른 사회부문의 개혁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이자,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은 새삼 인식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 김영삼(金泳三) 정부는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초기의 의욕적이고 희망찬 출발에도 불구하고, 물론 남북한 관계를 통해 접근할 수 없는 미국의 세계 전략적 차원과 관련된 북한 핵문제의 돌출이라는 외적 변수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지만, 한국의 보수 언론의 집요한 냉전적 이데올로기 공세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김영삼 정권은 어느 면에서 보수 언론의 후원과 지지 속에서, 오랫동안 길러온 이른바 그의 ‘언론장학생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 탄생한 태생적 한계도 무시할 수 없지만 보수 언론의 교만과 여론의 향배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대통령 자신의 습성으로 인해 언론 보도에 따른 여론 향배 그 자체가 마치 통치의 준거로 작용했던 측면도 있다. 결국 김영삼 정권은 권언유착 속에서 자율적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언론의 포위공격 속에서 마침내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⁷⁵⁾

2) 색깔론과 언론개혁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는 언론 개혁을 단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을까? 한국 언론의 문제점과 폐해 그에 따른 개혁의 방향은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에 큰 가닥은 잡혀있었으나 전혀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 국세청은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신문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조사결과는 일체 발표하지

75) 김민웅, “고난의 시대에서 배반의 시대로: 김영삼의 좌절과 그 출로, 그리고 우리의 자화상,” 「레드 콤플렉스」, (삼인, 1997) 참조.

않고 덮어버렸다. 당시 항간에는 김영삼 정부가 세무조사 결과를 무기로 신문에 협조를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⁷⁶⁾ 물론 개혁 차원은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순응적인 언론은 만들기 위한 공작적 차원의 언론 길들이기 전략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다. 그후 학계와 시민운동 차원에서 보수 언론의 폐해와 재벌신문사와 족벌신문사의 부정·부패, 신문시장의 독과점 실태, 권언유착의 현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조사를 비롯한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면서까지 언론 개혁의 보다 합리적인 방향과 체계적인 내용을 마련하였다.⁷⁷⁾ 그러나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언론의 ‘자율적’ 개혁을 존중한다는 입장 아래 언론 개혁에 대한 개혁 의지를 지금껏 유보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개혁 의지마저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레드콤플렉스를 조장하는 이념적 공세인 이른바 ‘색갈론’의 대표적 피해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은 언론 개혁에 대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최근 야당시절 재벌신문사측으로부터 상당한 정치자금을 수수해왔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드러남으로써 그 동안 언론에 대해 ‘어찌할 수 없었던’ 태생적 한계의 비밀이 밝혀졌다.⁷⁸⁾ 언론 개혁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 야당시절 부터 언론과 야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권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언론 개혁의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케 하는 파국적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76) 「신문개혁: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신문권리찾기 작은책 2, 언론개혁시민연대, 1999), p. 12.

77) “특집: 신문개혁,” 「언론개혁」, 창간호, (언론개혁시민연대, 1999.7), 참조.

78) 「동아일보」, 1999년 12월 17일자, 1면 기사 참조.

반복의식과 냉전문화를 재생산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데에 교육과 언론의 책임은 무척 크다. 따라서 각급 학교 제도에 반영된 분단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화해와 나눔의 정신에 기반한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하루빨리 정립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언론의 반통일·반민족성의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 누누이 강조되는 사실이지만 언론 개혁 없이 우리사회의 '냉전벨트'를 걷어내는 작업은 요원한 문제이다.⁷⁹⁾ 언론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고루한 의식,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거부하는 냉전관행 등은 끈장 케케묵은 반복·반공의식으로 나타나 수구세력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논리로 변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79) '냉전벨트'는 지역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완상, "긴급대담: 기로에선 현정권의 대북정책," 「창작과비평」 1999년도 가을호, p. 147.

IV. 냉전문화의 존재양태

1. 대미인식

가. 냉전해체와 새로운 한미관계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만큼 통일을 비롯한 남북한 민족 문제에 대한 인식의 예민한 부분을 드러내는 측면도 없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 한반도의 전쟁 억제, 평화, 그리고 경제적 성공의 후원자로서 한국인의 영원한 친구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쟁과 분단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패권국가로서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인가 하는 문제는, 물론 반미 또는 친미적인 양자 택일적 대미관이 현실적 한미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접근법은 아니지만, 쉽게 해명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사적 변화와 함께 지금까지의 전통적 한미관계는 여러 부문에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세기 후반기 냉전 시대의 한미관계의 특징은 미국의 이익이 곧 우리의 국가이익으로 규정될 수 있었던 시기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 수준에서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함께 시장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면서 미국의 국가이익과 한국의 국가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금융, 무역, 첨단 산업 등 광범한 분야에서 시장확보를 둘러싼 무한 경쟁으로 인해 미국은 과거처럼 한국의 발전과 성장을 우호적으로 지원하거나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21세기 초반의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역할과 지위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통적인 한미관계의 유대가 약화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 수준과 내용, 미군의 지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간 이해관계의 불일치와 갈등은 향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한·미 행정협정의 경우, '96년말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중단된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한국의 거듭되는 재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무성의와 미온적인 태도로 3년이 넘도록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미 행정협정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전범국인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지위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협정의 개정 방향이 적어도 일본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새로운 세기의 한·미관계의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⁸⁰⁾

앞으로 우리의 국가이익과 미국의 국익과의 조화를 계속 추구해 나가되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미간 쌍방 교호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추구해 나가고자 한다면 미국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민족적 입장에서 대미관계를 조율할 경우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접근 패러다임이 요청되는 시기라고 본다. 미상원에 제출한 페리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국이나 일본의 협력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인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과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⁸¹⁾

80) “불평등한 ‘한-미 행협’ 또 해넘겨,” 『한겨레』, 1999년 12월 22일자 제1면 기사 참조.

81) Perry, W,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어쨌든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므로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과 의사를 존중한다는 수사적 표현과는 달리, 사실 지금도 우리의 운명은 미국의 국익과 그들 스스로의 판단과 독자적인 행동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국익, 독자적인 판단, 행동이 한반도의 운명을 얼마나 옥쇄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1) 한반도 전쟁시나리오

미국은 지난 '94년 6월 북한의 핵위기 당시 이른바 '작전계획 5027'(Operation 5027 Plan)이라는 작전명으로 전쟁시 100만 명 이상 희생된 것으로 예상된 북한 공격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반도에 크루즈 미사일과 F117 스텔스 전폭기를 투입해 북한을 공격하고 1만여 명의 미군을 한반도에 증파하여 미국 시민을 소개(疏開)한다는 작전의 최종검토타 단계에서 미대통령의 특사로 방북 중이던 지미 카터 전대통령이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알려와 공습계획이 중단되었다.⁸²⁾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었던 '작전계획 5027'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단행하는 도상훈련용이 아닌 실전용이었다. 당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상황의 심각성은 그해 6월 16일 레이니(James Laney) 주한미대사와 게

and Recommendation, 1999.10.12 (http://www.unikorea.go.kr).

82) 로버트 갈루치('94년 미국무부 핵전담대사) 증언, CNN 방송(1999.10.5); 「동아일보」, 1999년 10월 6일자 참조.

리 럭(Gary Luck) 주한미사령관이 미국인 소개를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난 직후, 레이니 대사가 한국에 와있던 그의 딸과 세명의 손자-손녀에게 사흘 뒤인 “일요일까지 한국을 떠나라”고 지시한 사실에서도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상황의 분위기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⁸³⁾

‘Operation 5027 Plan’은 한반도에 54만 5천여 명의 미군이 참전하여 3~4개월 정도의 강도 높은 전쟁을 수행하면 북한을 패배시킨다는 요지의 작전계획이다. 그러나 8~10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100만 명 정도의 인명손실, 한반도와 동일 위도 지역 일본 및 하와이에서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 남한 인구의 40%를 포함하는 서울과 부근지역의 불바다, 남한 경제와 무역의 전면 붕괴, 1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전담비용 소요, 우방국 비용까지 1조달러 이상의 막대한 전쟁비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일성과의 담판을 통해 북한 공중폭격을 포함한 대북제제 움직임을 잠재우려고 한 J.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행동은 미행정부의 고위관리, 미국의 보수언론, 특히 한국내 대북 강경파와 언론들의 불쾌감을 유발했던 것이다. 카터는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해 방북했으나, 그의 입장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카터의 방북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해소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⁸⁴⁾

그러나 북핵문제의 타결을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위기국면의 극적 해소로 보기보다는,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남북한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유리한 국제정세가 형성된 국면으로 파악한 입장에서

83)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Addison-Wesley, 1997), p. 326.

84) Leon V. Sigal·구갑우·김갑식·윤여령 옮김,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 북한과 미국의 핵외교」, (사회평론, 1999), p. 213.

는 북미간 협상을 통한 평화적 타결에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뉴욕 사회과학연구협의회의 컨설턴트와 콜롬비아 대학 국제학부의 교수인 L. 시겔은 1994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 국면의 이면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당시 핵문제 협상을 왜곡시켰던 남한의 언론들의 논조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한국 신문 중 발간 부수 최대인 『조선일보』는 오랫동안 북한과의 협력을 반대하는 십자군 역할을 자임해왔다”⁸⁵⁾ 점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남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비타협적·대결적 입장에 대해 그들조차 무척 곤혹스러워 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한국 언론은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려고 하는 미국 행정부 측에겐 상당히 성가신 존재로 그리고 미국의 합리적 지식인에겐 자가당착적인 집단으로 이해되는 측면일 것이다.

2) 미국의 국익과 한반도

미국의 존재가 북한에겐 단순한 외재적 압력의 수준을 초월한 적대적 규정력으로 북한체제의 존립근거라면, 한국 사회에서는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미국 없는 한국’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재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간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국력이 신장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의식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경제의 대미 종속성의 문제, 정권 교체, 특히 대북정책과 정보, 통일문제 등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은 단순히 외부적 변수 이상의 것임은 분명하다.⁸⁶⁾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서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⁷⁾

85) Leon V. Sigal·구갑우·김갑식·윤여령 옮김, 앞의 책, p. 246.

86) 도진순, “분단에 대한 연역과 통일의 전제,” 『당대비평』 06 (삼인, 1999년 봄호), p. 150.

새로운 시대의 현실에 맞춘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세 가지 핵심은 안보의 제고, 미국의 경제적 번영의 증진, 그리고 해외에서의 민주주의의 확산이다. 이들이 공통된 목적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NATO와 같은 군사동맹의 팽창 및 평화를 위한 동맹자관계와 같은 폭넓은 이니셔티브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균형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위력의 증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제1장 서론 부분에서 ‘개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내 안보를 위해 해외를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전략 방식이다. 우리는 국가·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력의 적절한 기제들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후퇴는 대안이 아니다”고 역설하고 있다.⁸⁷⁾

특히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단호하게 사용”할 것을 밝히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⁸⁹⁾ 그러나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비록 최근 북·미관계의 개선 분위기가 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으나, 미국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의 독자적 판단과 그들의 국내정치적, 사회경제적 필요에 부응되기만 한다면 언제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반도에 무력사용을 한다는 개연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 미국 국익의 최대 관건인 안보 문제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 경우 미국의 경제적 이익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논쟁적일 수 있으나, 이는 대개

87) 미국 백악관,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국가안보전략」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5권1호, 부록, 1999년 봄·여름호), pp. 339~40.

88) 미국 백악관, 앞의 자료, p. 341.

89) 미국 백악관, 앞의 자료, p. 343.

세계적 차원에서 석유등과 같은 천연자원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통제권에 대한 도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의 민주주의의 확산'을 국가적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⁹⁰⁾ 민주주의는 다양한 형태와 다의성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확산 특히, 해외에서의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국가목표는 미국식 가치관이나 삶의 양식 등과 다른 문화체제를 지닌 국가에 필요하다면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대의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사실상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민족 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보다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하려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 편만한 친미의 식과 대미종속적 문화구조와는 전혀 무관한 미국의 국익과 국가목표 그리고 그것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함께⁹¹⁾, 그에 대한

90) 미국 백악관, 앞의 자료, 같은 곳.

91)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 한·미간 협상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모순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북·미협상에 대해 미국은 미사일 세계전략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한국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상논리는 거의 전적으로 경제논리에 입각해 있다.('국민일보', "미사일의 정치경제학" 1999년 11월 18일자 김상은 칼럼, 참조). 미사일의 경제적 의의는 매우 크다. 미국의 군수 관련 정보산업체인 텔 그룹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전세계에서 약 1천1백4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사일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일 품목으로 미사일은 군수산업계의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미사일 생산국들의 시장쟁탈전은 매우 치열하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NYT)는 미사일사거리 연장 협상을 앞둔 묘한 시점에 김대중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추어 "한국의 미사일 개발계획 때문에 군비경쟁이 우려된다"(1999년 7월 1일자 기사)고 썼다. 한편 1993년부터 1999년 11월까지 국내언론에 보도된 '패트리엇미사일' 관련 보도기사는 총 227건에 달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국방부는 최신형 패트리엇 PAC-3 대공 미사일 방위 시스템 14개와 부속장비를 한국에 총42억 달러에 판매키로 동의했다고 9일 발표했다"는 기사가 주목된다.('디지털조선일보', 1999년 11월 11일자 참조). 미국방부의 이 일방적인 발표는 과연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심대한 회의가 든다. 한국이 미국 군수산업의 큰 시장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 한반도 긴장 원인의 가려진 배일이 진정 무엇인가

우리의 신중한 접근과 보다 냉정한 인식을 통해 우리의 생존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나. '과거'와 진실규명

1) 노근리와 신천

최근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노근리 사건'이 외신에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근리(老斤里; 일명 老隱里) 사건이라 함은 45명이 영동지구 주곡리(主谷里), 임계리(林溪里) 등의 주민 약 500-600명에게 피난길을 안내해 주겠다는 구실로 국도를 따라서 걸어 노근리 지역까지 이르게 하고, 기차길 위로 이끌어 소지품을 세밀히 검열하고 미군병사가 무전 연락을 취한 직후, 피약별 아래서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그 피난민들을 향해서 갑자기 남쪽에서 날아온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하고 총격을 가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였고, 그 폭격을 피해 철로 밑에 뚫린 두 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간 그들에게 4일간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또다시 살상을 저질렀다는 사건을 일컫는다.⁹²⁾ 한국전쟁 중, 1950년 7월 23일부터 7월말까지 영동-황간 지구는 미군과 인민군 사이에 대치 내지는 아군 방어 작전이 진행되었는데, 그 기간에 '노근리 사건'이 자행되었다.⁹³⁾ 물론 냉전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사건은 아

를 확인케 한다는 점에서도 미국의 한반도정책의 본질을 스스로 폭로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92) 정은용,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다리, 1994) 참조.

93) 최병수, "6·25동란 초기 충북 영동지구의 민간인 살상사건에 관한 연구(1) - 노근리의 미군 대량민 집단살상사건을 중심으로 -," 「인문학지」 17집,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년 2월) 참조.

에 밝혀질 수 없고 더욱이 문제조차 될 수 없는 금기영역이었다. 과거 진영간 대결구도 속에서 자기가 속한 진영의 내부모순과 체계모니 국가의 불의와 폭압은 냉전적 대치상태에서 항상 은폐되었고 불의와 만행은 공산주의라는 적대적 '악'의 존재로 면책되고 잊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해체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신념이나 선과 악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붕괴시켰으며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미국의 실체에 대한 회의적·비판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⁹⁴⁾

남쪽에 노근리 문제가 있다면 북쪽에는 '신천' 문제가 있다. 북한 황해도 소재의 신천박물관은 전쟁 기간 중 '미제'의 만행을 기록한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신천군 사건은 1950년 10월, 38선을 넘은 미군들이 황해남도 신천에 52일 동안 머물면서 신천군 인구의 4분의 1일에 달하는 무고한 양민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을 말한다.⁹⁵⁾ 당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1951년 피카소가 이 신천 양민학살사건을 주제로 「조선에서의 학살」(*The Massacre in Korea*)이라는 제목의 유채화를 그렸다. 이 그림은 벌거벗은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총을 겨누어 학살하려고 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미군의 양민학살과 야수적 만행에 대한 당시 서구 지성인의 충격과 분노를 피카소가 화폭에 담은 '한국판 게르니카'라 할 수 있다.⁹⁶⁾ 그런데 1960년대

94) 모니터네트워크, “노근리 양민학살’ 보도: 언론의 ‘사대주의’에 물힌 우리의 자존심,” 「언론개혁」, 1999년 11월호, 언론개혁시민연대, p. 28~29.

95) 북한은 2000년 신년사인 「공동사설」을 통해 통상적인 계급적 입장과 반제 투쟁정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언제나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점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신천학살의 기억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서 커다란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2000년 1월 1일, 09:00, 중앙·평양방송.

96) 한국전쟁의 과정에 민간인 학살을 고발하는 연구서의 표지로 상징된 경우는,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후반에 당시 어린이들에게 한창 인기 있었던 피카소 그림이 그려진 크레파스가 한동안 판매금지 처분을 당한 적이 있었다.

신천박물관은 두 채의 건물로 제1관은 6·25전쟁 이전까지 로동당 신천군 당위원회 청사였다가, 1950년 10월부터 신천지구 주둔 미군사령부로 바뀌어 '대중학살의 본거지'가 되었던 건물로 1958년에 박물관으로 꾸며 문을 열었다고 한다. 전시실은 "미제 침략자들이 신천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잣더미 속에 파묻으라고 지껄이면서 1950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52일 동안 신천군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천3백83명의 무고한 인민을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온갖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⁹⁷⁾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자료 가운데, '미군들의 만행에 항거하다 희생되었다는 리현수 소년'에 관한 자료였다. 구탄인민학교 소년단 위원장이었던 그가 미군들에 반대하여 싸우다 죽으면서도 피로써 지켜냈다는 인공기도 함께 전시되고 있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그의 모교를 '리현수 중학교'라 고쳐 부르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말하자면 '북녘판 이승복' 학생인 셈이다.

한편 1972년 이 박물관을 방문했던 미국인 칼럼니스트 S. 해리슨은 최근 국내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신천박물관의 자료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⁹⁸⁾ 남쪽이 전쟁 초기 북한군의 공급피해를 경험했다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 1945~1947 (Princeton University Press(Princeton, New Jersey, 1981) 참조.

97) "이재봉 원광대 교수의 북한방문기('98.10)," 오연호 「노근리 그후」, (말, 1999), pp. 103~109).

98) 북한과 중국은 미군이 전쟁 기간에 생물학 무기를 사용했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최근의 미국의 공식자료와 한국전 관련 중국과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꼼꼼하게 만들어진 「미국과 생물학전: 냉전초기와 한국에서의 비밀」, (인디애나 대학, 1998)이라는 연구는 미군이 두 나라에서 두 달간 야전실험을 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1952년 2월과 3월 감염된 벼룩과 진드기, 거미

면, 북한은 3년 동안 공중폭격을 견뎌야 했다. 카터 애커터 하버드대학 한국학연구소장은 “북한 주민은 3년간 미군의 폭격을 피해 지하 방공호에서 살았으며, 비행기가 핵폭탄을 떨어뜨릴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영구적 포위공격 심리상태’를 갖게됐다고 설명했다. 53년 휴전회담이 시작될 때에도 미군은 폭격을 멈추지 않고 강화했다. 2차 대전때 나치가 폴란드의 제방을 무너뜨려 나중에 전쟁범죄로 지목됐지만, 미군은 제재 없이 북한 지역의 저수지 제방을 폭격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넘었음에도 북한이 미국을 의심하는 것은 바로 이 ‘영구적 포위공격심리’ 때문이다. 이 심리상태는 북한이 한국전의 시대착오적 유산을 청산하는 데 집착하고, 군사정전위원회나 유엔 명령체제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⁹⁹⁾

한국전쟁 중 미국의 양민학살 문제가 하나씩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맹목적 ‘반미’는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적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가 현실과 민족감정과의 괴리 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미국에 대한 무비판적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의존적 사고에서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를테면 미국의 6·25 전쟁 개입으로 대한민국의 국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양국의 혈맹적 유대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한편, 미국의 세계전략적 차원에서의 국가이익의 수호를 위한 대외정책적 선택의 문제로 이해함으로써 한쪽에서는 마냥 은혜를 베풀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지원을 받기만 하는 이른바 ‘후원-수혜’의 일방통행식 관계로 인식되었던 모습을 탈각하고

를 북한의 급화, 평양 등에 뿌려 역병을 유도했다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셀리그 해리슨 칼럼, (『한겨레』, 1999년 11월 1일자) 참조.

99) 셀리그 해리슨 칼럼, (『한겨레』, 1999년 11월 1일자) 참조.

미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시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맹목적 반미는 결코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무조건적·무비판적 수용은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한미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때이다.

2) 베트남과 우리 사회의 도덕성

한국에서의 미군 문제와 관련하여 본다면, ‘과거를 접고 미래를 보자’는 논리로 우리는 더 이상 베트남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¹⁰⁰⁾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민간인 학살사건들이 비공개적 비공식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러 온’ 미군에게 당한 일이라 공론화 되는 것조차 두려워하면서 맨몸으로 당했던 그 억울한 죽음들에 의분을 느낀다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 베트남전의 와중에서 한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과 피해자인 베트남인들의 비극이 그것이다. 월남파병(‘64년 9월부터 8년8개월간)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해외파병으로 5만 명의 전투병이 상주했던 이 파병에서 5천명의 한국군이 희생되었으며, 파병의 대가인 10억달러는 한국산업화의 기반이 되었다. 한국군에 의해 죽은 ‘적’의 수는 약 4만에 달하는데, 베트남 문화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그 가운데 5천명은 양민들이었다고 한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담은 자료집이 발간

100) 베트남의 유력지 「일요 투오이찌」가 베트남 언론사상 처음으로 한국군 양민학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전쟁중 ‘중부 각 성에서의 전쟁범죄 조사회의’와 같은 전쟁범죄 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군의 양민학살 사례를 조사 발표하고 있다. “부끄러운 역사에 용서를 빌자 - 베트남전 양민학살, 그 악몽 청산을 위한 성금모금 캠페인②” 「한겨레21」 제281호(1999.11.4).

되고 학살위령비 앞에서 합동위령제가 열린다고 한다.¹⁰¹⁾

베트남전쟁은 미국의 지식인과 젊은이들에게 양심의 가책과 갈등의 홍역을 앓게 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에게 그 전쟁은 극장에서 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만나는 「대한뉴스」가 전하는 ‘월남소식’에서 파월부대의 베트남사살과 무기노획 등의 승전보와,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에게 ‘지겹도록 들었던 정글에서의 무용담’과, 그리고 미군 PX를 통해 유출된 미제 가전제품에 대한 선망으로만 다가왔다. 월남전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었던가 하는 진지한 물음이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왜곡되고 닫힌 심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문제와 한국전쟁에서의 미군의 양민학살 문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를 요구하는 우리들의 주장이 한층 더 높은 도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며 그들에게 참회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는 또한 조국을 위해 몸바쳤던 희생자들과 지금도 고엽제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상처를 씻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한 성숙한 용기와 도덕성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통일 문제에 대한 아시아 지역 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된 민족사회를 향한 인권과 평화의 싹을 키워 가는 길이다.

101) 「한겨레」, 1999.12.1일자 사설 참조.

2. 대북정책

가. 상호주의 원리 및 적용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규율하는 원칙 가운데 하나로 상호주의를 들 수 있다. 상호주의는 정부 차원의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준용되는 협상 원칙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상호주의 일반적으로 국가간 거래와 협상에 있어 상호 신뢰의 기반을 쌓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양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은 대북 불신감에 기반한 대결과 갈등의 냉전 의식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상호주의의 내용과 함께, 비대칭적 한반도 냉전구조 속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적 적용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관계론에서 상호주의의 기본전제는 국가간 등가물의 교환을 전제로 한 합리적 선택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국가간 협력을 발생시키는 핵심적 요소를 상호성(reciprocity)에서 찾는다. 특히 이러한 상호주의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의 대소봉쇄정책의 산물로, 냉전시대 군비통제 군축협상을 비롯한 미소관계의 기본인식 틀로 작용했다. 상호주의의 요체는 조건성(條件性, contingency)과 등가성(等價性, equivalence)이다. 조건성은 상호주의에 기반한 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보상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행위는 중단되는 것을 뜻한다면, 등가성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위의 결과로 이익배분이 균형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¹⁰²⁾ 이를테면 상호주

102) Robert O. Keohane,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1, (Winter 1986), pp. 5~7; *International Institution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Theory* (London:

의는 '주고받기식'(give & take; *quid pro quo*) 보상 혹은 상응논리(Tit-for-Tat: TFT)에 기반하여 "선에는 선으로" 라는 보상논리적 측면과 "악에는 악으로" 라는 응보논리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이는 곧 "협력에는 협력으로, 비협력에는 비협력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 개념은 당사국간의 힘의 비대칭적 역학관계에 의해 상호 이익이 비등가적으로 교환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호주의가 긍정적·합리적으로 적용되면 협력관계가 증대되나, 상대방의 양보와 양보의 수준을 엄밀히 수치개념으로 측정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등가성에 입각한 엄격한 상호주의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전략적 장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조건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주고받기식' 협상 차원의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심적 의무감을 갖도록 하는데 있으며 또한 협력조치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에 기반한다는 것을 밝히는데 있다.¹⁰³⁾ 상호주의는 상대방의 호응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행위를 반드시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일방이 적용이행 요구를 철회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그런데 상호주의를 상대방의 대가 지불을 전제로 한 일종이 당연지사로 규정하여 강하게 요구할 경우, 이는 자칫 상대를 궁지로 몰게됨으로써 대화와 협상이 결렬되거나 관계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자의 체면의식의 손상, 일대일 차원의 상응조치의 불가능성으로 인해 협상 진행에 역기능적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Westview Press, 1989).

103) Larson Deborah, "The psychology of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Negotiation Journal*, (July 1988), p. 292.

국가간 협력 촉진의 가장 바람직한 조건은 당사국간 이익의 균형 교환이나, 이러한 상성에 입각한 상호주의는 당사국간 반응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남북한간 상호주의 문제는 상호주의의 엄격한 적용 형태인 상응(TFT)전략 보다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증상호주의'(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GRIT)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C. 오스굿이 오래 전에 개발한 협력전략 이론이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적대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심화된 행위자들간에 긴장을 점차적으로 완화하면서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협력이론이다.¹⁰⁴⁾ 점증상호주의(GRIT)는 긴장관계에 있는 당사국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에게 "적절한 위협"(moderate risk)이 수반되는 협력적 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해나가는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¹⁰⁵⁾

첫째, 상대방의 즉각적인 조치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일방적인 양보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해나간다. 이를테면 주고받기식 상응전략에 내포된 즉각적인 대응의 동시성의 문제를 극복하여 일방적 조치와 그에 따른 時差的 반응을 수용하면서 인내 있게 기다리는 상호주의의 비동시성을 함축한 전략이다.

둘째, 긴장완화를 위한 일방적 조치를 공개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양보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의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대방이 호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104) Charles Osgood, "Suggestions for winning the real war with communis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December 1959), pp. 295~325; C. Osgood, *An Alternative to War or Surrender*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2).

105) Larson Deborah, "Crisis prevention and the Austrian State Trea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nter 1987), pp. 32~33; 전성훈,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1996.12), pp. 33. 재인용.

셋째, 협력조치의 범위를 다양한 분야에 지역으로 확대하여,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면 특정 분야에서 계속 손해를 입을 위험성은 줄어든다. 이 경우 상호주의는 반드시 등가물의 교환양식이 아니라, 주고받기의 비등가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점증상호주의(GRIT)에 따르면 어쨌든 어느 정도의 위험(risk)과 특히 손실(cost)을 감수해야 하면, 이를 통해 진실성이 입증되고 상대방의 호응을 얻어 낼 수 있다.¹⁰⁶⁾ 이렇게 이해한다면 남북한관계에서 상호주의는 비동시성, 비대칭성, 비등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점증상호주의(GRIT)의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일방적인 대북지원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동시적이고 등가적인 상응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도 남북한 협상전략의 전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나. 상호주의와 남북관계

한반도 냉전구조의 특징은 비대칭성에 있다. 과거 미소간 냉전구조는 상호 공멸의 핵전력에 기반한 공포의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구조는 한·미·일의 남방 삼각관계가 북·중·소의 이른바 과거 북방 삼각체제의 해체로 인해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한 북한체제를 포위·압박하는 불균형적·비대칭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의 활로를 찾기에 혈안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대외적으로 불안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적인 개혁이 유도되는 것은 아니다.

106) 점증상호주의(GRIT)는 쿠바미사일 위기시와, 오스트리아 중립화 협상과정에서 소련의 대서방 협력조치의 형태로 나타난 바 있다. 전성훈, 앞의 책, pp. 33~41.

그러나 그것은 대외적으로 긴박한 위협에 처해 있다는 인식의 신빙성을 감소시키면서 내부 개혁의 정책적 선택의 폭을 확대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대외 불안정성의 감소가 북한 엘리트들로 하여금 전면적인 무장투쟁이 그렇게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하는 만큼, 그것은 이전보다 더욱 내적인 개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남방 삼각관계의 비대칭적인 우세가 함축하는 바는, 북한은 선택의 빈곤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북한이 보여왔던 경직된 반응의 악순환을 일방적으로 깰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비대칭적 관계에 비추어볼 때 대북협상에서의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인 상호주의에 기반한 '주고-받기 give & take' 보다는 '주고+주고-받기 give+give & take' 또는 '주고+주고+……-받기 give+give+…… & take' 식으로 접근하는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⁰⁷⁾

더욱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서 보여지듯이 일방주의(unilateralism)는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지혜라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의 적용은 보다 탄력적·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호주의 논리 자체가 바로 냉전시대 군비통제·군축의 이론적 기반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최근 김정일체제의 군사주의는 북한체제의 과도한 위기의식으로부터 체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군사화하지 않고는 지탱하기 어려운 선택에 임박한 사회주의 체제의 파행적 형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화는 사회주의 우방의 소멸과 고립무원의 극한적 위기상황에 따른 체

107) 사카모토 요시카키(坂本義和), “한국 냉전의 종식을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국제평화회의 1999.4.19~21,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대안」(크리스찬아카데미 소식 대화, 1999년 여름호 통권 제31호 특별 중간호) 참조.

계수호 논리의 필연적 귀결로 군사국가로 변전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¹⁰⁸⁾ 군사주의는 “전쟁과 전쟁을 위한 준비를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으로 간주하는 태도나 조합”¹⁰⁹⁾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군사주의는 정치와 경제 부문을 비롯한 주민들의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쟁 메타포를 통한 긴장분위기를 일상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주의는 체제위기의 반영인 동시에 남북관계를 경색 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군사주의의 전면화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동양적 예지의 한 형태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이른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미국과 일본의 공조가 없는 상태에서 소련 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배경으로 한 북한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남한의 상황을 상정한다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현재의 북한의 선택보다도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주의를 완화하고 남북한 모두의 군사화의 경향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상호주의가 남북한 관계에 적용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 그것은 항상 ‘조건부’ 교환 형태의 주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조건부’는 명시적으로 대북지원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언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북지원이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거부하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

108) Wada Haruki, “The Structure and Culture of the Kim Jong II Regime: Its Novelty and Difficulties,” *North Korea in Transitional Policy Choices: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1998.5.28~29) 참조.

109) Michael Mann, *State, War and Capitalism* (Oxford: Basil Blackwell, 1988), p. 124.

‘대북지원의 북한의 개혁·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당규약이 전혀 찢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왜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하느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면 북한 형법도 동시에 폐지해야 한다”,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한다면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의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기된다. 이 경우 상호주의적 주장들은 우리 사회의 내부의 반인권적 비민주적 악법을 폐지·개선해야 하는 자발적 인 움직임에 계동을 거는 논리로 작용하기도 한다.

3. 대북인식

가. 북한의 인권·민주화 문제

최근 탈북자를 통해 북한의 ‘수용소군도’와 같은 인권 사각지대의 실상이 전해지면서,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주장하는 입장들이 나타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초래할 수도 있는 부정적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사회의 ‘인권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움직임은 인권과 민주화의 문제는 시공을 초월하여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의 촉구와 노력은 소중한 의미가 있다.¹¹⁰⁾ 그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수용소군도’와 같은 북한사회에서 살아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가장 절박한 요구와 가장 절실한

110) 북한의 인권 개념과 시민적·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권리의 침해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서로,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1996, 1997, 1998) 참조; P. 리굴로(Pierre Rigoulot)는 「공산주의 흑막」(1997.11)에서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숙청으로 인한 희생자 10만, 강제수용소에서 죽어간 희생자는 150만 명이라고 주장한다(앞의 책, p. 16).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의 해체와 파괴, 인간성의 상실, 이웃의 참상에 대한 무감각, 의식의 공동화 상태, 이미 사회의 정상적인 작동이 멈춰선 상태에서 아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처절한 배고픔이야말로 오늘의 북한 동포들의 쉼한 눈동자에 비친 진실이다. 살아있는 북한 소녀·소년들은 만성적 기아에 따른 발육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한민족의 신체구조에서 크게 퇴행한 상태다. 북한의 참상은 결코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럴 상황도 못된다. ‘인간답게’ 살 기본조건은 무엇보다 먼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찾아야 한다. 빈곤·기아 상태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북한 동포들의 실질적이고 가장 애절한 소망일 것이다.

빈곤은 특정한 권리의 박탈이 아니라, 빈 세계인권회의(1993년)¹¹¹⁾와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1995년)가 확인한 ‘인권의 전반적인 부정’이기 때문이다.¹¹²⁾ 배고픔과 만성적 기아상태야말로 인간존엄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최악의 인권 박탈이며, 기아가 인간을 얼마나 비굴하게 만드는지는 정상적인 사람은 전혀 경험하거나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통이다.¹¹³⁾ 심지어 매일같이 기아상태에서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에서 배고픔과 기아 보다 더한 고통이나 두려움

111)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June 1993 - E. DPI/1394 73pp.

112) 생명체가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것이 무엇일까? 고문은 참을 수 있어도 배고픔의 고통은 참을 수 없었다는 고백을 들어보자. “물고문, 집단 폭행, 바늘로 손톱 밑 찌르기... 그래도 직접 신체에 가하는 폭력은 약을 쓰며 견딜만 했다. “밥을 적게 주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전향공작 때 비전향 장기수들한테는 감식 조치가 내려졌다. 그들이 먹었던 밥은 4등급이었다. 5등급은 환자나 병자한테 공급되기 때문에 가장 질이 낮고, 적은 양의 주먹밥을 먹어야 했다. 이공순씨는 “4번 입을 대면 끝이었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다”...(중략) (“고문의 주인공, 바로 너!”, 『한겨레 21』 제285호(1999.12.2), p. 29).

113) 서승, 『육중 19년』(역사비평사, 1999), p. 170.

도 없다는 사실이 최근 증대되고 있는 북한 탈북자들의 증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¹¹⁴⁾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주장은 자칫 우리 사회의 대북지원 분위기를 저상(沮喪)시키거나,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을 위한 최근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에 냉소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보편적 가치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이나 민주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역설적인 현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인권 문제는 억압적 실체에 대한 비판, 폭로, 외부로부터의 압력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의 수준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설득과 회유 그리고 지원과 협조 등의 조용한 방법을 통해 정치적 폭력과 탄압의 형태를 순화시키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탈북자들의 위기상황이나 정치범 수용소의 비인간적 학대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인간존엄성의 숭고한 가치가 송두리째 짓밟히고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한 분노를 자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와 북한 체제에 대한 매도와 규탄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동이 실질적으로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권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보다 책임 있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이다.¹¹⁵⁾

114) 북한 인권 문제의 핵심은 처절한 기아상태, 바로 그 자체임은 최근 탈북자 문제를 다룬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異國서 떠도는 脫北者들 <5> 끝> 불잡혀도 또 탈출」; 연길 외곽의 한 교회에서 만난 이 산철(35)씨는 고생과 중국인들의 질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탈북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 배도 채우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섭니다. 불잡히는건 두렵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6개월간 강제노동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강제노동소가 더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먹을걸 주니까요.” 「조선일보」 1999.12.15일자 참조.

115) 최근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

외부세계에서의 폭로, 규탄, 대북지원거부 형태 등의 외적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면, 북한의 인권상황은 잠시 개선될지도 모르지만 더욱 은폐되고 교묘한 형태로 변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외부의 간섭이 인권문제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북한통치층으로 하여금 반발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 희생자는 서울의 보수언론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구하고자 하는 북한 동포들이라는 점에서도 아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요망된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를 남북관계 개선과정의 제1의적 의제로 삼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북한 동포들의 참상과 인권개선의 의지를 방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가 북한에 비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소한 것으로 희화화되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나. 인권·민주화문제 접근방식

인권 문제는 인도주의적 사안이면서도 민감한 정치적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다. 흥미 있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권위주의체제 아래서 반독재투쟁과 민주화를 추구해왔던 진보세력에서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반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대해 줄곧 침묵을 지키면서 권위주의 체제와 깊은 유착관계를 유지해왔던 사람들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80년대 거의 맹종의 수준에서 가장 친북적 논리를 견지했던 과거 학생운동권 출신의 일부 '늙은 학생'들이 이번에는 가장 반복적인 극우

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북한땅에 인권의 빛을' 「조선일보」 1999.12.2일자 참조).

적 입장으로 극전환하여 이 문제에 대해 조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심지어 북한 해방을 위한 '전쟁불사론'까지 거침없이 주장하고 있다.¹¹⁶⁾ 이처럼 도착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극좌에서 극우로, 이념의 좌우극단을 마구 넘나들 수 있는 정신적 파탄 현상의 한 형태인 독특한 의식구조와, 권위주의적 억압체제의 동반자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과 민주화의 대북 전도사로 나서고 있는 현실은 - 순수한 인도주의 그 자체의 발로로 보기엔 많은 유보조항이 따르는 - 과연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1) 그림자의 집단투사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카를 융(Carl G. Jung)이 고찰한 '그림자' 현상 이론을 빌려 우리 사회에 편만한 도착적 의식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융이 말하는 '그림자'는 인간 의식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무의식의 내용으로,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그림자라고 부르는 심리적 내용들이다.¹¹⁷⁾ 그림자란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이자 나, 자아의 어두운 면이다. 이러한 그림자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될 때 나와 비슷한 부류의 대상에 투사되며 거기서 그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본다. 융은 이 그림자를 때때로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에도 적용시킴으로서 정치적 사건이나 역사적 현상 속의 그림자를 밝히는 작업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림자의 집단적 투사란 어떤 집단 성원의 무의식에 같은 성질의 그림자가 형성되어 다른 집

116) 전쟁은 항상 정의와 자유를 위한 聖戰, 민족해방을 위한 혁명, 세계 인류의 구제를 위한 정벌로 표상된다. 그림에도 북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활자화되었다. "북한 해방 위한 '전쟁'의 세 가지 조건," 월간 「말」, 1999년 9월호 참조.

117) 이부영,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반려자: 그림자」 (한길사, 1999), pp. 40~42.

단에 투사되는 것을 가리킨다.¹¹⁸⁾

우리 사회의 만연한 흑백논리에 기반한 냉전의식이 북한이라는 집단에 투사되면, 북한에 대한 그림자의 투사와 동시에, 카를 융이 말하는 마음의 밑바닥에서 솟구치는 악에 대한 이른바 ‘거룩한 분노’(heiliger Zorn)가 왜곡되어 표출된다. 거룩한 분노는 남의 죄를 단죄하기 전에 자기의 잘못을 먼저 반성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반복의식에 사로잡힌 심성은 북한체제는 인간이 아닌 일종의 괴물집단으로 보이고 죽여도 좋거나 죽여야 할 악의 존재로 보이게 된다. 이 경우 ‘거룩한 분노’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의 집단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보이면서, 국민의 집단적 무의식을 자극하여 북한 집단에 대한 그림자 원형의 투사를 촉진시킴으로써 북한을 무찌르는, 한국의 사회체제와 삶의 방식 등이 한반도 전역에 관철되는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실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으로, 명분을 제시하고 집단적 광분을 부채질한다.

말하자면 인권이나 민주화 등의 보편적 가치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인 적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거부해왔던 한국 사회 보수세력의 집단 심성의 어두운 측면이 북한체제에 투영됨으로써 마치 카를 융의 그림자 현상처럼 자아로부터 배척되어 무의식에 억압된 성격 측면이자 또한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속성인 ‘인권’이나 ‘민주화’를 자기의 반대쪽인 북한체제에 투영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악의 집단인 북한에 일시 경도했던 세력의 참회와 ‘거룩한 분노’는 - 통일문제에 대한 강박관념, 지나칠 정도의 사명감, 잊혀지기를 두려워하는 강한 존재의식 등으로 퇴영적이고 비정상적인 의식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이 연출에 극적 효

118) 이부영, 앞의 책, pp. 94~127.

과를 더한다. 냉전의식은 이처럼 선과 악의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반하여 항상 대립과 투쟁의식을 내장한 이데올로기의 발현 양태이지만, 양 극단이 점점에서는 어느 순간 선과 악 그 자체의 구별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의식의 반전(反轉) 또한 한순간에 가능한 지극히 비정상적인 심성구조를 형성시켰다고 생각된다.

2) 동서독 사례

북한 인권개선 문제는 동서독간 화해와 긴장완화 노력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동독은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구체적인 사례 지적에 대해 소극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내정간섭이라고 하여 아예 대응을 하지 않거나 국제인권협약에서 유보조건으로 허용된 예외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대처해 나갔다. 동독 지도부는 서방측의 인권보장에 대한 요구를 동독내 반체제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로 받아들이고, 서방측이 제기한 인권의 보장이 결국 잠재적인 체제반대세력을 양성하게 된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었다.¹¹⁹⁾ 동독 측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서독 측은 국제적인 회의를 통한 간접적인 논란 제기와 비밀협상 채널을 통한 “특별노력”(besondere Bemuehungen) 등 이중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인권 상황이 개선되도록 시도했다.¹²⁰⁾

119)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통일원, 1995.12), pp. 175~76. 북한 측도 이와 유사한 대응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공개처형에 대한 특별보고서」(1993년 10월, 1997년 1월)를 내자 북한은 자료공개를 거부하면서도 탈북주민 처벌과 관련이 있는 북한형법 제47조가 1995년에 개정되었음을 AI에 통보하였으나 개정 조항의 규정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였다.(민족통일연구원, 「북한 인권백서 1998」, p. 17).

특히 동독 지역 정치범 석방을 위한 내독간 비밀거래가 주목된다. 서독 정부는 분단고통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주민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일환으로 두 가지 특별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정치범 석방을 위한 지불거래로, 이를테면 동독의 감옥에 수감 중인 정치적 박해자를 비밀거래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서독으로 석방시켰다면, 다른 하나는 역시 비밀 협상을 통해 이산가족의 재상봉을 실현시켰다.¹²¹⁾ 물론 이 사업은 그 당시에는 언론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통독후 정치범 석방을 위해 물자 제공의 거래 이외의 다른 방식은 없었는가, 그리고 서독 측이 제공한 물자가 권력층의 수중에 들어가 그들의 권력유지를 도와준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범 석방, 가족 재상봉 등 인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독에게 양보하는 것이 불가결했으므로, 인권과 관련한 이러한 비밀거래는 통독후 동독정권의 내적인 정통성을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면서 결국 체제붕괴에 일조를 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된다.¹²²⁾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기아와 절대빈곤 상태의 해결을 위한 접근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북한 주민 스스로 인권 의식이 싹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 인권과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보듯이 외부의 억압과 간섭이 뚜렷한 개선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또한 근대화를 추진하던 개발연대의 우리의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과 그에 대한 해결방식을 성찰함으로써 북한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0) 통일원, 앞의 책, p. 180.

121) 통일원, 앞의 책, p. 185.

122) 통일원, 앞의 책, pp. 185~210.

분단의식은 이처럼 분단 그 자체로부터 반쪽의 자기를 대상화·객체화함으로써 스스로 불구화되고만 존재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기도 취와 분단질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존재영역을 지키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특정한 가치와 신념 체계의 우월적 확인, 승리한 체제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 만족과, 사회경제적 탈락자들의 스스로에 대한 책임귀속, 마치 전인미답의 처녀지를 발견한 것처럼 미개척의 영역을 선점하려는 특정 종교집단의 열렬한 선교의식¹²³⁾, 대결과 갈등 분위기 속에서 기생하는 직업적 냉전지식인 사이에 편만한 소명의식 등은 바로 분단의식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 분단의식의 다양한 발현 양태인 것이다. 더욱이 남북간 전쟁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평화와 화해·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절박한 시기에 아직도 대결과 갈등의 냉전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일부의 냉전전사, 냉전지식인 등의 강고한 '냉전벨트'는 민족 화합과 국민통합의 길에 가로놓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 영상매체에 반영된 북한이미지

1) 「쉬리」¹²⁴⁾

'99년 초에 개봉된 이 영화는 1년동안 전국에서 5백9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국내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웠다. 홍콩과 일본 등 해외에서의

123)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00년을 맞이하여 북한교회재건운동을 위해 본격적인 대북선교 및 지원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여, 그 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에 해방 전까지 설립돼 있던 것으로 확인한 2천9백49개의 교회를 개교회 및 해외한인교회와 결연 시키는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을 밝혔다. '對北선교 분위기 쇄신 새천년 재도약 계기로' 「국민일보」, 1999년 11월 30일자.

124) 제작자상호: (주)동성프로덕션, 제작등록번호: 문광부등록제200호, 공진협심의 번호: 9905-V107, 제작년월일: '99.8.1, 상영시간: 2시간5분.

개봉으로 한국영화의 새로운 전망을 개척한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¹²⁵⁾

영화의 대장의 줄거리는, 국가 일급 비밀정보기관 OP의 특수비밀 요원이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소재 액체폭탄 CTX를 탈취한 북한특수부대 요원들의 테러 행위를 막아낸다는 내용이다. 남북한 화해 무드 속에서 남북한 두 정상이 남북 축구를 관전하는 축구장에 수 만 명의 관중이 함께 희생당할 수 있는 액체폭탄을 터트리는 테러를 감행함으로써 북한 군부가 반대해온 남북한간 화해 분위기를 깨고 전쟁을 통한 '조국통일'을 실현하겠다는 북한특수부대 요원들의 암약과 그에 맞서는 우리측 요원들의 활약상을 그렸다. 여기서 북한8군단 비밀 첩보요원 이방희의 역할을 키워드로 설정하여 첫 장면부터 그녀를 비롯한 북한특수부대 요원들의 지옥훈련 과정과 특히, 이방희가 주도한 남한 사회에서의 테러 공작활동을 자막 처리하여 관객의 긴장감을 바짝 끈다.

사건내역: 핵물리학 박사 저격, 국방과학연구소장 저격, 도시가스 폭발사고 주도, 국가안전기획부 대북전략 수석○○○살해,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팀장○○○박사 저격 등.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북한특수부대 요원들이 열과 빛에 반응하여 적절한 온도에서 폭발하는 액체폭탄 CTX를 이미 축구경기장 라이터에 설치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장면들이다. 라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조종실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눈 바짝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극중 주인공들인 남북한 요원들간 불꽃튀는 설전은 통일 문제의 해결 방식에 대한 남북한을 상징하는 인물들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125) 「동아일보」, 1999년 12월 27일자, A4면 참조.

- 박: 곧 여긴 썩어빠진 남북정치꾼들의 무덤이 될 것이야.
- 유: 정치인 뿐만 아니라, 관중들까지겠지.
- 박: 역사는 때론 무모함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 바로 지금처럼.
- 유: 미친 것이야. 원하는 게 뭐야.
- 박: 전쟁이야. 우린 전쟁을 위해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있는 거다.
- 유: 저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은 아닐텐데.
- 박: 여기 일단계 작전이 끝나면 곧 바로 우리 인민혁명군의 통일전쟁이 시작된다.
- 유: 무모한 것이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이터를 꺼!
- 박: 미안하지만 이 땅의 역사와 조국의 영령들은 그걸 원치 않는다.
- 유: 또한번 서로의 가슴에 총구를 맞대는 전쟁은 더더욱 원치 않아.
- 박: 혁명엔 고통이 뒤따르게 돼있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지.
- 유: 지난 1950년에도 니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 그 전쟁의 결과가 우리에게 남겨준 고통이 뭔지 알아?
- 박: 알고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전쟁의 고통이 뭔지, 분단이 안겨준 고통이 뭔지, 이젠 끝날 때가 됐다.
- 유: 오늘 이 경기가 바로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야.
- 박: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 근데 순진하게도 우리는 저 고매하신 정치꾼들을 믿고 지난 50년간을 그렇게 기다려왔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들은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아.
- 유: 착각하지마. 박무영! 통일을 원하는 건 니들만이 아냐. 아직은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할 때야.
- 박: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니들이 한가롭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이 순간에도 우리 북녘의 인민들은 못먹고 병들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 나무껍데기에 풀뿌리도 모자라서 이젠 흙까지도 파헤쳐 먹고있어. 새파란 우리 인민의 아들 딸들이 국경 너머 매춘을 위해서, 그것도 단돈 백달라에 개팔리듯이 팔리고 있어, 굶어 죽은 쥐새끼 인육마저 뜯어먹는 그 에미 그 애들 년 본적

이 있어? 썩은 미제 콜라 햄버거를 먹고 자란 너희들이 알리가 없지. 축구로 남북한 하나가 되자고...개수작 떨지 마라. 지난 50년간 속고 기다린 걸로 족해. 이제 조선의 새역사는 우리가 다시 연다!

조선의 새역사를 다시 열겠다는 ‘우리’는 물론 북한 전체가 아닌 북한 군부 특히, 특수부대요원들로 비타협적이고 남북한간 변화된 현실을 외면하는 북한 군부의 일부 이탈세력을 말한다. 그럼에도 그들의 침투공작, 사회혼란획책, 무모함, 혁명과 조국통일への 지나친 강박관념, 화해와 평화무드를 거부하는 경직된 사고방식, 남한 사회에 대한 거친 증오감, 테러 암살 도시게릴라 활동, 전쟁 기도 등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만하고 냉혈한 인간형은 전형적인 ‘전쟁광’, 테러리스트 집단 이미지로 부각되기에 충분하다.

이 영화의 기획 의도와는 무관하겠지만 남북한 관계와 관련하여 영화에 함축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화해하고 악수하는 순간에도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된다. 정상회담의 시기에, “전형적인 대남적화전술로, 늘 그래왔듯이 화해 무드로 눈가리고 뒤통수치는” 북한의 수법에 조금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상기시킨다.

「쉬리」는 변화된 남북한 관계에 부응하는 새로운 안보관의 재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북한의 테러리스트의 전형적인 이미지 창출에, 미국이 부각시키는 ‘깡패국가’ rogue state의 상에 제대로 어울리는, 성공한 영화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위협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 문제를 낙관하는 것은 시기상조며 항상 그들의 전형적 수법인 미소 속에 감춰진 비수를 경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반공영화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우리 사회를 언제라도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릴 수 있는 저 무모한 맹동집

단이 견재하고 있는 북한의 실체에 대한 위협을 다시 일깨웠다. 위기를 해결하는 우리측의 대공요원들에게 아낌없는 신뢰와 찬사를 보내면서 최첨단 무기, 정보체계 등 북한 특수부대요원들을 응징할 수 있는 방첩체계와 함께 안보관의 확립이 새삼 요청되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테러리스트 이미지로 각색된 반복의식은 자연스럽게 내면화된다.

2) 「간첩 리철진」¹²⁶⁾

리철진은 북한 대남 공작조 요원으로, 한국 과학자가 개발한 슈퍼 돼지 유전자입수 임무를 띠고 동해안으로 침투하였으나 서울로 오는 도중 4인조 택시강도를 당한다. 북조선 최고의 정예군인 대남 침투요원이 상경길에 남한 사회의 잡범들에게 강도를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간첩 리철진의 '부적응성'을 말해준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이러한 해학적 상황을 설정한 점에서 눈을 끈다. 간첩 리철진의 남한 사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딱딱하고 경직된 모습, 그럼에도 당의 명령과 임무에 대해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그와, 주변 인물들의 개성적 행동들과의 부조화가 흥미를 자아낸다. 간첩의 잔인성, 음흉함 등의 전형적인 인물상과는 달리 거의 생활인으로 전락한 고정간첩의 일상성 그 자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온 간첩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점에서도 코믹한 터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의 모티브 설정은 「쉬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남한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탈취가 주된 모티브다. 여기에도 뛰어난 기량, 암살, 목적 달성의 수단에 불과한 북한 공작원 등의 이미지를 부각시

126) 제작자상호: (주)동우영상, 제작등록번호: 문광부등록제239호, 등급분류번호: 9907-V81, 제작년월일: '99.8.3, 상영시간: 102분.

김으로써 대남 공작원의 현대판 전형성을 창출하고 있다. 물론 이 영화는 이러한 현대판 전형성에도 불구하고 간첩을 둘러싼 스토리를 코믹하게 전개시키고 있는 점에서 반공영화의 상투적인 교훈성을 극복하고 있다.

홍행 차원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이 두 편의 영화는 최근 남북한 관계의 변화된 현실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냉전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 두 편의 영화에서는 공통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반공의식은 어느 정도 옅어진 반면, 새로운 형태의 '반북논리'가 상당한 설득력 있게 전개된다. 사실 북한은 그 체제가 존속되는 한, 또는 적어도 북한체제가 크게 변화되었다고 믿을 만한 결정적 시기가 오지 않는 한, 북한은 언제나 경계와 의혹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이 본질적으로 경계와 의혹의 대상인 한, 우리의 심성 속에서 참된 화해와 용서의 마음이 나타나기가 무척 어렵다는 데에 딜레마가 있다.

남북한은 총체적 국력 차원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남북한 국민총소득을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 보다 1993년 16.8배, 1997년 26.8배로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다가 1998년에는 남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25.1배로 소폭 축소되었다.¹²⁷⁾ 경제 통계수치 면에서 북한은 축소 경향적 국가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비해 경제력 측면에서는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바람직한 상태로 여기고 있으나, 군사력을 중심으로한 전쟁 수행능력과 위협의 수준에서

127) 통계청,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1999.11, 참조.

는 상당히 '경쟁력'있는 체제로 인식하고 계속 존속하길 바라는 입장도 없지 않다. 즉, 핵·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력의 측면에서나 테러국가로서의 위협실체의 존재는 결코 간과될 수 없으며, 오히려 지속적으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존재는 위협실체로서, 실제로 북한의 군사력의 수준 또는 「쉬리」에서 보듯이 군부이탈 세력의 영향력이나 그것의 규모 등의 현실성의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 '요청'되는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쉬리」의 경우, 영화제작 기법과 편집방법 등에서 헐리우드 액션물의 모방적 측면도 엿보인다. 헐리우드 영화는 그 나름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영화 즉, 헐리우드 영화는 '미국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미국적 가치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악으로 규정되어 타기의 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테러, 마약, 정부전복음모 등을 - 이들 범죄의 조직적 기반과 신념 등은 대개 비기독교적, 아랍적, 러시아적, 제3세계적인 것들과 접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해결하는 궁극적인 승자는 항상 미국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창출한다. 헐리우드 액션물의 도식은 미국적인 것과 비·반미국적인 것과의 대립 속에서 미국적인 선이 악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겨 미국 시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논리구조를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승리하는 것이 곧 선이요, 승리 그 자체가 미국식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쉬리」는 시종일관 선·악의 대립구도 속에서 우리 즉, 비폭력과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적'인 것이 이기는 단순한 논리를 도식화한 영화이다. 북한은 전쟁광, 우리는 평화주의자. 통일에 대한 북한의 조급함과 우리의 인내를 갖고 기다리자는 논리 등은 분명 이분법적·대립적 남북관이다. 황해도 초도항의 비내리는 밤, 「조국통일」을 다짐하는 북한특수부대 요원들의 깡마른 체구에 번득이는 눈빛들. 이러한 배경

설정은 모두 두렵고 음산하고 어두운 무드를 조성한다. 반면 남쪽 사회의 활기차고 명랑한 모습들, 레스토랑·커피숍 등의 밝고 자유스러운 도시 분위기와는 무척 대조적이다. 그러한 북한에게 우리는, 비록 군부 이탈세력이지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신념과 당위성을 확인시켜 주었고, 화해·협력의 준비태세가 되어 있고 실제로 대북지원 등 시혜를 베풀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모험세력은 단호히 응징한다는 논리는 헐리우드식 이데올로기의 복사판과 크게 다르지 않는 한국판 적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케케묵은 이념, 비개인적인 집단가치, 촌스러움, 세련되지 못한 매너, 그리고 군사력, 가공할 생화학무기, 테러 등의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의 이미지도다. 그러나 그것들과 전혀 무관하고 정반대편에 놓여있는 가치, 생활방식 -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이다 - 등이야말로 비록 네거티브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한국적'인 가치들로 상정된다. 젊은 청춘남녀들의 낭만적이고 순수한 사랑과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방식은, '조국통일'을 위해 지옥훈련 속에서 최소한의 개성마저 잃어버린 북한의 혁명전사의 비인간적인 삶과 뚜렷이 대비된다.

「간첩 리철진」은 북한 문제를 희화화시켜, 분단의 고통과 억압적 실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겉으로는 탈정치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면에는 남한의 자유와 다양성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부적응성과 어색한 행위들은 오늘날 북한사람들의 시대착오적이고 뒤쳐진 행태를 연상시키면서, 우리의 우월의식을 확인시키는 한편 '북한 것' '북한적인 것'에 대한 가치평하를 가져오는 현대판 반복이데올로기를 배태시킬 우려가 크다. 부드럽고 탈정치화된 - "심심하면 전자오락실, 만화방, 편의점 등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 자연스런 인간적인 삶의 양식과 혁명적·전사적 존재양식은

선과 악의 관념으로, 전자는 ‘한국적’인 것임에 비해 후자는 ‘북한적’인 것이다. 여기서 반복의식은 그것과 대비되는 ‘한국적’인 것의 의미와 정당성을 위해 필요하다.

두 편의 영화 모두 통일문제와 북한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우리의 ‘반쪽’인 북한의 존재를 한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정한 사회체제의 한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부조적 수법은 항상 그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상상시키게 되듯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호흡을, 물론 두 영화의 문제 영역은 아니나, 전혀 느낄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전통적인 ‘반공·반소’의 냉전이념과 냉전문화는 새로운 시대에 변형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이다. 그런 점에서 이 두 편의 영화는 위협실체로서의 북한·북한군부의 존재를 다시 확인시키는 한편, 암살·파괴 공작을 일삼는 테러리스트 집단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광범한 냉전벨트의 잠재적 요구에 부응한 안보의식의 고취와 더불어 ‘반북문화’의 새로운 유형의 창출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영화, 연극, 소설문학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분단의 질곡과 고통을 다룰 경우, 인간의 정서적 심성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술적인 문장이나 언론의 보도 차원과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히 영화와 같은 매체의 엄청난 대중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반복문화와 냉전의식의 존재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추구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¹²⁸⁾

북한의 억압체제의 실체와 인권 사각지대의 현실을 북한 주민의

128) 한국 현대문학의 대표적 작가들로서 ‘좌익’ 2세의 삶과 의식세계를 그들 소설 작품을 통해 분석한 연구로, 한수영, “분단과 전쟁이 낳은 비극적 역사의 아들들,” 『역사비평』 1999 봄 통권46호 (역사문제연구소) 참조.

고통과 곤궁 속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아쉽다. 인간의 존엄성의 회복과 자유에의 강렬한 열망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고뇌에의 동반을 유도하고, 북한 동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해결 방안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협실체이자 테러리스트 집단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면 결국 북한에 대한 경계심만 더욱 높아지고, 새로운 안보논리가 확산되어 냉전문화의 찌꺼기는 더욱 굳은 양금으로 남게된다.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남북한 동포가 진정으로 화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문화·예술 분야에서 恨의 정서, 카타르시스적 해소, 회한의 눈물로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한 풀이의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분단의 고통을 덜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V. 냉전문화 극복방안

1. 국가보안법

가. 국가보안법과 냉전의식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에, 정부 수립 4개월만에 국가의 기본 형사법인 형법에 비해 5년 앞서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식민지 악법들을 모체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정 당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일제의 ‘치안유지법’,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및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등은 해방후 국가보안법, 반공법, 그리고 사회안전법 등으로 그대로 되살아났다.¹²⁹⁾ 그 후 보안법은 남북대결과 갈등의 냉전시대의 전 기간에 걸쳐서 국가안보의 법제도의 보루였으며, 동시에 인권과 민주화를 억압하는 법적 근거로서 분단시대의 의식과 행위양식 등을 규정하고 재단해온 모든 것의 척도 즉, 하나의 ‘잣대’였다. 보안법은 1961년 군사쿠데타 정권에 의해 ‘반공법’으로 바뀌었다가, 1980년 12월 새로운 군부정권에 의해 반공법을 흡수 통합한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명칭을 찾은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보안법은 어느 면에서 보면 분단이 낳은 사생아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극한 이념적 대결과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인 절차를 통한 정상적인 법체계를 갖추기도 전에 국체 유지를 위한 ‘도구적’ 성격으로서 보안법이 급조되었던 것이

129) 조국, “한국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 「역사비평」, 1988년 여름호 (역사문제연구소) 참조.

다.¹³⁰⁾ 보안법은 그후 분단국가를 규율하는 초헌법적 실체로서 한국 사회의 전영역에 군림해왔다. 그러나 보안법은 국가안보의 측면 못지 않게 정권과 지배계급의 안보를 위해 기여해왔다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존재이유에 대한 회의를 불식시키기 어려웠다. 그 결과 최근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남북한 관계의 변화된 상황에 부응하여 국가보안법의 존재문제가 제기되면서, ‘존치론’, ‘대체입법’, ‘부분개정’ 및 ‘폐지론’ 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¹³¹⁾

냉전문화 극복의 과제 앞에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상당한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한 화해와 화합의 실천적 행동은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주 내에서 규정받을 수밖에 없다. 특정 행위와 활동에 대해 보안 당국의 보안법의 해석·적용 여하에 따라 준법과 범법의 경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대개 남북한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운동을 추구해온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했으며, 그 결과 냉전체제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사고와 행위패턴을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국가보안법과 인권

냉전논리는 진영간 대결구도에서 ‘악’으로 규정된 상대 진영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내부 모순은 은폐되어야 했으며, 인권과 민주화 등의 보편적 가치는 어느 정도 유예될 수 있는

130) 1949년 한해동안 이 법에 의해 검거 또는 입건된 사람의 수는 11만 명에 이르며, 전쟁 기간중 부역자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55만 명에 달한다. (국정감사자료집, 「법제사범위원회」, 1996년, p. 104.

131) 민화협 결성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국가보안법과 남북대화」 (민중화해협력법국민협의회, 1999년 9월 16일) 참조.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체제유지의 도구적 성격으로 출발했던 국가보안법은 제정·개정 당시의 입법취지가 퇴색됨으로써 이제 역사적 존재이유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인권

국가보안법 가운데 가장 독소적이고 남용 소지가 많다고 비판받는 조항은 제7조로 찬양·고무 및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판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양산되었고, 가장 심각하게 남용되어온 조항이다. 이와 함께 제10조는 ‘불고지죄’ 조항으로 반인륜적 조항일 뿐만 아니라 봉건시대의 연좌제를 망블케하는 악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국가보안법은 개개 조항의 합리성 여부나,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유형과 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이나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근본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¹³²⁾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보안법은 ‘외부의 적’을 상대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이라기 보다는 ‘내부의 국민’을 상대로 ‘정권안보’를 지키는 법률로 기능해왔다고 볼 수 있다.¹³³⁾ 치안본부가 1980년부터 1988년까지 검거한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현황표를 살펴보면, 동기간 동안 ‘외부의 적’인 간첩 검거는 전부 65명에 불과한데 비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는 1,565명이나 검거했다. 특히 간첩 검거현황은 ‘80년 14명, ‘81년 13명, ‘82년 8명, ‘83년 3명, ‘84년 8명, ‘85명 10명, ‘86년 9명, ‘87년 0명, ‘88년 0명으로 나타나 있다. ‘87년과 ‘88년

132) 최창동,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1995), p. 64.

133)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3 (역사비평사, 1992), p. 195.

두 해 동안 간첩 검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은 우리 사회에 간첩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인지, 혹은 암약하고 있는 데도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동 기간동안 꾸준히 늘었다. 어쨌든 이 통계수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시기 동안에는 간첩의 숫자는 점점 줄고 있고, 일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큰 비율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¹³⁴⁾ 여기서 우리는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고통 당하고, 민족적 양심이 학대받고 있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안보논리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기준에서 이해해야 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침해받을 수 없는 천부인권으로 국가이익에 우선하는 권익이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국가안보의 내용과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존폐의 문제는 인간 존재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공생의 정신에서 접근 해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키려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규약 위반 결정에 의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998년 10월 20일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유엔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정부는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보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2주후 동 법 제7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유엔인권이사

134) 「내무부국정감사자료」, 1988년 10월, p. 448.

회가 적용하는 사법적 판단기준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표현행위를 처벌할 경우, 첫째, 어떤 표현이 법적으로 금지된 표현인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둘째, 해당 표현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위태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국가안보를 저해할 것이라는 개연성이나 가능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런데 유엔산하기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이 난 국내 사건에 대해 ‘규약위반’으로 결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나라는 유엔 B규약과 규약의 이행 여부 감시를 위한 유엔 인권위의 활동을 인정하는 선택의 정서를 모두 비준했기 때문에 이 결정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과 철폐요구에 대해 그들이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한국인들의 총의를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적어도 유엔이 특정하여 지적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내용 국가보안법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규범이라 할 수 있는 인권조약에 위배되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고 말았다.

2) 국가보안법과 북한형법

보안법은 항상 북한 형법 체계와 비교된다. 북한이 아직도 대남적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반통일적인 북한 형법의 개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우리 국가보안법만 폐지하라는 주장은 형평과 상호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상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¹³⁵⁾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형법은 우리의 국가보안법이나 헌법과 달리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³⁵⁾

민족반역죄란 일제, 기타 제국주의 밑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야합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 자주권을 위한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탄압·박해하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등 매국매족행위를 감행한 범죄를 말한다.

이처럼 북한 형법은 ‘민족반역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은 ‘남한체제’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이 조항은 북한 주도로 통일이 되면, “남한의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을 민족분열을 시도하고 미제국주의자를 지원한 민족반역자로 몰아 처단” 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¹³⁷⁾ 즉, 한반도 적화후 정치적 보복 의지를 드러낸 법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러나 위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형법은 명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가보안법도 사실상 북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 내부의 반정부인사를 향한 법이라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북한 형법과 연계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¹³⁸⁾

135) 북한연구소, 「북한형법의 실상」, 1990, p. 91.

1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p. 18 (1975년 2월 1일 시행된 신형법 제63 조항은 1987년 2월 5일 개정형법 제52조로 계승됨).

137) 북한연구소, 앞의 책, p. 95.

국가보안법은 법조항 자체가 애매하고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문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제정 당시부터 끊임없이 인권시비에 휘말려왔다. 냉전체제 아래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보안법 존치론자들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실체가 한반도에서 사라지지 않고 분단 현실이 지속되는 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¹³⁸⁾ 이를테면 남북한 관계와 세계사의 변화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남북한 대치상태의 현실을 강조하는 ‘변함없는 현실론’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 관련 직종의 이해관계 속에서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해온 ‘냉전벨트’의 법적 존재근거로, 국가보안법 자체에 의해서 일상적 위기상황이 창조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안보위기가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안보관련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불신과 냉소적 분위기가 차츰 해소됨으로써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138) 박원순, 앞의 책, p. 201.

139) 보안법 개폐 반대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간 엄청난 국력차와 북한의 경제적 실상이 거의 밝혀진 상태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실체를 과소평가 하여 오히려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이 손쉽게 침투·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국민들로 하여금 확고한 안보의식과 대북 경각심을 드높여야 할 때이다. 둘째, 보안법 개폐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논의 자체가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친북·파괴세력까지 투입하여 난장판을 만들기 쉽기”(이경남, “국가보안법 개정의 문제점,” 민화협 결성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앞의 자료, p. 30) 때문에 보안법 논의 자체가 자제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친북행위일 수 있다. 셋째, 일반적인 국민 대다수의 경우 보안법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상의 불편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보안법 개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안법으로 인한 생활상의 제약이 무엇인가 라고 되묻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개폐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내 인권상황을 총망라해 평가한 '1998년 인권보고서'를 펴내면서, 먼저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8개월 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모두 310명으로, 김영삼 전대통령 시절 같은 기간의 67명 보다 4배 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¹⁴⁰⁾ 그러나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98년 한해 구속자 465명은 '97년의 641명 보다 27.5% 줄어든 수치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새 정부가 과거의 사상전향제 대신에 '준법서약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공안사범을 사면하면서도 보안관찰제를 통해 “국가의 감시통제는 여전히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¹⁴¹⁾

국가안보기관이 냉전적 행위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권안보와 냉전벨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면, 국제사회의 치열한 정보경쟁에서 영원히 낙후되어 정보원(情報源)의 대외의존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이익의 장기적 실현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물론 대결구도의 분단체제가 극복되지 못한 현실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내적 요인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국제정제와 세계사의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새로운 안보관과 안보논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국가안보기관은 국제적 경쟁력 배양을 위해 인권관념이 배제된 수사관행을 탈피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향함으로써 국가와 민족 안위에 기여하는 자긍심 높고 존경받는 안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¹⁴²⁾

140) 대한변호사협회, 「1998 제13집 인권보고서」(대한변협, 1999년 10월), p. 21.

141) 대한변호사협회, 앞의 보고서, p. 17.

142) '97년 정권교체기에 집권층의 대북밀약을 통한 편문점 총격요청사건, 이른바 '북풍' 사건은 남북한 집권세력의 적대적 공생관계 즉 남과 북의 '공생의 비밀'을 확인시켜준 계기로 국가안보당국의 불명예와 불신을 깊게 한 사건이었다.

법의 존재 근거는 정당성에 있다. 정당성은 법의 도덕적 기반과 함께 보편적 적용의 원칙에서 발견된다. 국가보안법은 존재 여부의 문제를 북한실체와 국가안보의 '현실론'에 착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현실적인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오히려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 속에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여기는 사람을 용기 있고 도덕적 결단을 지닌 희생자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보안법의 도덕적 권위를 찾기 힘들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은 법의 존재근거의 보편적 기준 즉, 법적 형평성 상실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법 적용의 현실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은 이른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다. 법은 저울로 상징된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은 이미 스스로 법적 성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³⁾ 특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 8. 1. 법률 제4239호)과 국가보안법의 상치 현실에도 불구하고, 양 법 가운데 어떤 법을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직 보안 당국의 자의적 판단과 입장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보안법 적용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¹⁴⁴⁾

143) 영화 「레드헌터」는 제주 43사건에서의 양민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대학인권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전자의 경우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으나, 후자는 문제삼지 않았다. 이러한 이중적 잣대는 보안 당국 스스로 보안법의 적용을 정치적 상황논리에 따라 접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비밀비제할 뿐만 아니라, 거의 일반화된 적용행태라 할 수 있다.

144) 화가의 그림이 김일성의 생가와 닮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례가 있다. 그 화가가 화보나 북측의 홍보용 자료를 본 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닮았다고 판정하는 측은 분명 보안당국이다. 이 구속사례 역시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법적용이었다.

한편 국가보안법을 바라보는 국민적 인식의 변화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보안법의 공포스런 이미지와는 반대로, 대개의 경우 진보적인 지식인, 학생, 예술가, 노동자, 정치인 등의 보안사범을 정치적 희생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민주화 투쟁시대가 낳은 많은 '정치적 영웅'은 어느 면에서 국가보안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후 민주화세력이 정치세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개인적 자부심인 동시에 민주화 투쟁의 징표로 여겨졌고, 국보법 전력에 비례하여 정치적·사회적 평가를 받았던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패러독스야말로 국가보안법의 체제유지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보안법의 역사적인 회화성(戲化性)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 국보법 개폐와 냉전문화 극복

1) 색깔론과 사상·표현의 자유

자본주의적 발전은 일반적으로 계급·계층의 분화에 조용하는 사회세력의 성장을 보게되며, 그에 따라 자본주의적 이념의 다양한 분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회 균등의 원리가 반영되는 사회민주주의나, 환경·생태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체제를 호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만이 시장경제체제를 골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유일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단순화된 사상이나 폐색적인 사고구조로 인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창의적인 상상력은 근원적으로

차단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색깔론’의 망령을 떨쳐버리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본다.

우리 사회의 산적인 개혁 과제 가운데 특히, 재벌개혁의 당위성과 중요성은 오랫동안 강조되어왔다. 물론 재벌 개혁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개혁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적인 야당의 입장이 동일할 수 없다. 그러나 재벌개혁 자체를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재벌을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해체하려는 “반자본주의적 발상” 이라면서, “그같은 경제개혁은 사회주의적 변혁이 아니냐”고 힐난식의 비난을 제기한 정당도 있었다. 이는 재벌개혁 문제를 ‘사회주의적 변혁’ 등의 자극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정부의 개혁정책 자체를 ‘색깔론’으로 점화시키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만 무장해제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김대통령 주변에는 사회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구사하면서까지 개혁정책을 ‘색깔론’으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⁴⁵⁾

개혁이나 보안법 등의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상호 비판과 설득의 통로를 처음부터 외면한 채, 상대방의 정책이나 입장을 일단 색깔론으로 몰아붙이고 보자는 분위기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역사적·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색깔론을 통해 대중적 공포의식의 동원을 자극하는 냉전논리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사고의 경직성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사상의 자유 자체를 억압하고 질식시키는 국가보안법 자체에 근본 원인이 있다. 여기서 보안

145) “8·15 대통령경축사 반응: 본질 흐리는 ‘색깔론쟁,’” 『동아일보』, 1999년 8월 19일자 참조.

법 문제에 대한 법조인들의 견해를 인용해 보자.¹⁴⁶⁾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의 상실이며 공산주의에 대한 패배감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 체제의 우월성을 믿는 한 모든 사상과 이념을 학문과 언론의 자율적 논의의 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 공산주의 사상을 형벌로 극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그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 사회에 독재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정착되고 사상의 자유로운 논의가 보장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다양한 이념적 주장이 공론적 영역에서 검토되고 비판받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안법 폐지문제를 이해하는 입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인권·사회정의·평화통일의 이념과 진보정당

정당은 사회 각 계층의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정당의 정책으로 반영하는 측면에서 사회 통합적 기능을 지닌다. 사회통합은 물론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국민동원의 논리와는 다르다. 계급·계층적 이익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진보적 대중정당의 활동이 보장될 때 비로소 진보와 보수정당간의 정책 대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정책 대결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사를 결집하고 민주적 가치와 질서 규범을 존중하는 사회통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정치에 투영된 냉전은 반공적 규율화로 나타나면서, 한국 정치에서 자생적

14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역사비평사, 1989), p. 29.

정당과 이익단체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러한 냉전적 규율화 속에서 보수 여·야당의 특권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 정치의 개방화를 가로막았다.¹⁴⁷⁾ 냉전은 대내 정치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를 확립시켜 주었고, 보수적 반공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정치사회세력은 항상 '용공'으로 매도당하면서 정치적 시민권이 박탈되었다. 그러나 냉전의 해체는 그 동안 정강정책이나 대안논리의 개발과 무관할 수 있었던 여야 보수 정당들로 하여금 '냉전적 도식'에 더이상 기댈 수 없는 한계상황에 맞닥뜨리게 했다. 이러한 한계국면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되고 민주적 규범과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는 참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상과 정치사회적 활동이 공개 영역에서 토론되고 검증 받을 수 있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시장경제의 성장·발전에 조응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의 출현이 절실히 요망되는 상황이다. 한국 사회의 정당정치 구조는 지금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초록 동색인 보수 여·야당 일색으로 이어져오고 있다.¹⁴⁸⁾ 정강정책에서 전혀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여·야 보수정당간의 이합집산은 한국의 정치문화를 상당히 퇴영적인 형태로 만들었으며, 그로 인한 정치사회의 무기력증과 국민들의 정치적 혐오감은 국가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활력을 소생시키고 세계사적 흐름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21세기의

147) 윤근식, "한국 정당의 조직사회화," 안희수 편저, 「한국 정당 정치론」(나남, 1995), p. 203-28.

148) 우리 사회에서 급진주의세력이 크게 부상해 가는 현실에 대응하여, "적어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공산주의 이념을 인정하고 제도권 내에서의 공산당 설립을 허용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도 일찍이 개진되었다. 송복, 「사회발전과 13대 국회의 역할」, 민정당 국제연구소 주최 강연, 1988년 6월 8일 (『이념문제주보』 제23호, 이념문제연구소, p. 58).

다양한 가치체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정치 구조가 확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도구적' 성격으로 탄생했던 보안법의 역사적 존재 의의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과 사회정의 그리고 평화통일의 이념에 기반한 진보적 정당들이 자리잡을 수 있는 제반 법적·제도적 지원장치의 마련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

2. 언론개혁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인구 구성은 전후세대가 차지하고 있다.¹⁴⁹⁾ 전후세대의 인구구성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의 대북인식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의 경우, 교육과 언론매체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언론개혁의 의의

한국 사회가 21세기의 세계사적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민족통일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난 세기의 천연된 개혁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가 차원의 총체적 개혁을 위해서는 언론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개혁은 모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개혁의 전제이자, 언론의 개혁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언론이 개혁의 방해세력이 되는 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 그럼에도 언론은 지금까지 최후의 성역으로 개혁의 무풍지대로 군림해 왔다. 최근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언론개혁관련 여론조사

149) 1954년 이후 출생의 전후세대는 전체 인구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1996년) 참조.

결과에 의하면, 언론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아주 강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96%(1천명 중 960명) 달하는 비율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이 무척 주목된다.¹⁵⁰⁾

국가 전체가 성역 없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 정치권을 비롯하여 국가안보기관 등 권력기관마저 모두 공개와 투명화를 지향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는 달리 언론기관만이 유일하게 성역으로 남아있는 불균형적 현상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문개혁의 역사적 의미는 한국 최후의 성역 개방과 민주화의 정착이라는 과제의 해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신문개혁이 단행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민주적 가치와 규범이 자리잡아 나갈 수 있게 된다.

1) 사주와 편집·편성 자율성

한국언론재단이 수행한 기자의식조사 결과(703명 대상 1대1 대인면 접방식)에 의하면, '사주로부터 편집·편성의 자율성'에 대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27.4%와 '별로 안되고 있다' 54.5%로 사주의 편집·편성권 침해에 대해 약 82%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 중 57.4%는 바람직한 신문사 소유구조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들었고 '사주 전횡 방지를 위해 소유지분 제한'(13.9%)이나 '비영리재단화'(10.3%) 등을 원한 반면, 현체제 유지는 1.7%에 머물렀다. 자유로운 취재보도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광고주로부터 오는 제약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언론사 내부의 제약이나 압력, 정부의 영향이나 통제, 언론관계 법제와 정책 등을 들었다.¹⁵¹⁾

150)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시민 1천명 언론개혁 여론조사," 「언론개혁」 1999년 12월호, pp. 12~13.

이 조사결과로 볼 때, 남북한 관계 및 통일 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신문의 성격은 결국 사주와 그의 측근세력의 세계관과 접근 방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들의 대북인식, 안보관, 남북관계 접근방식, 통일관, 통일후 미래상 등에 의해 기사의 시각이나 칼럼, 사설, 논단 등의 이른바 북한 및 통일관련 편집 방향과 성격이 영향받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즉, 통일과 민족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론의 향배가 소수 독과점 언론사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족벌신문·재벌신문·종교신문의 사주와 사주의 대리인인 몇몇 측근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한 사회의 여론의 수렴, 형성, 공유 그리고 정책적 반영 등의 순환 메커니즘의 심각한 왜곡구조가 아닐 수 없다. 소수 독과점 언론사의 사주와 사주의 몇몇 대리인들에 의해 통일과 민족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의 과정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언론사를 장악한 소수인들에 의해 '사실'이 조작되기까지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정부 정책에 대해 언론의 비판적 사명을 명분으로 사주와 그의 대리인들의 견해를 강요하거나 심지어 추진중인 정책조차 그들의 의도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권언유착의 오랜 관행 속에서 언론사주의 대리인들이 정권 핵심부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여 그가 예측되었던 사주에게 정부정책의 내용을 사전 보고하는 관계망의 형성을 기반으로, 그야말로 정부 위에 군림하여 우리 사회를 향도하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단계에까지 오게되었다.

2) 언론의 북한 및 통일보도관

한국의 외교안보에 가장 커다란 변수인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언론보도를 이 분야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70여 명의 전문가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연구 결과를 주목할 필요도 있다. 조사 항목 가운데,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의 객관성 유지여부”를 묻는 항목에 대한 응답 반응도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¹⁵²⁾

- ① 정권논리에 좌우, 문제해결 및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부족 (13.0%)
 - ② 한정된 정보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획일화된 보도경향 (12.0%)
 - ③ 기사해석에 대한 냉전시대적 인식(11.5%)
 - ④ 추측성에 근거하거나 사실을 확대보도하는 경향(11.5%)
 - ⑤ 사실에 대한 해석이 너무 근시안적(9.0%)
 - ⑥ 강한 선정적 상업주의와 이데올로기적 편향성(8.5%)
 - ⑦ 북한관련 보도가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보도되는 경향(6.5%)
 - ⑧ 객관적인 사실보도였다고 보기 어려움(6.0%)
 - ⑨ 정책분석보다는 사생활 캐기식 보도경향(5.5%)
 - ⑩ 언론사들의 방향오도: 북한현실에 대한 왜곡·비방(5.0%)
 - ⑪ 사실보도의 양이 절대적으로부족(5.0%)
 - ⑫ 북한 및 통일문제가 지니는 특별한 가치 무시(3.0%)
 - ⑬ 비교적 사실보도에 주력(3.0%)
 - ⑭ 객관성 유지노력 확산(0.5%)
- (총합: 100%)

152) 김용호, 「외교안보정책과 언론 그리고 의회」, (오름, 1999.11), p. 101~105.

이 조사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보도환경의 제한성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및 통일문제 언론보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권논리, 냉전시대적 인식, 추측기사, 국가안보와의 의도적 연계 등은 우리 사회 언론보도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북한보도의 상업성과 이데올로기적 편향성, 북한현실에 대한 왜곡·비방 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언론의 사실보도나 객관성 유지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신뢰 수준은 거의 바닥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⁵³⁾ 그리고 전반적인 보도경향 자체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의 통일전략은 급진적인 무력적화통일로 보도하면서 남한의 통일전략은 점진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보도”하는 경향, “남한의 경제발전은 긍정적,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 “북한의 자주노선이 지닌 폐쇄성이 약점으로, 남한의 대외의존적 세계화 전략의 개방성이 강점으로 부각”되는 경향 등을 지적함으로써 언론보도가 남한에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⁵⁴⁾

한편 언론의 대북 및 통일관련 보도의 문제점은 시민단체들에 의해서도 자주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⁵⁵⁾

153) ‘왜곡된 언론보도사례: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한 대표적인 예’에 대한 질문항목에 반응도 순위대로 정리하면, ① 성혜립 망명사건, ② 이한영 살해사건, ③ 1994년 김일성 사망원인에 대한 추측보도, 조문파동, ④ 북한돕기운동에 대한 일관성 없는 보도, ⑤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일회성 평가, ⑥ 김정일 실각설, 와병설, ⑦ 북핵문제를 둘러싼 안보불감증 논리 전파, ⑧ 편향적 통일정책 비교, ⑨ 남포 부근의 정치범수용소로 알려진 사진 공개, ⑩ ‘서울불바다’ 보도파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김용호, 앞의 책, p. 107.

154) 김용호, 앞의 책, p. 107.

155) 정희중, “남한언론의 통일 관련보도 행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언련 통일기획(1),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남북한 언론의 역할과 전망」(1999년 7월 1일) 참조.

-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력 행사
- 안보상업주의 추구
- 객관성보다는 가치개입 보도로 상황 왜곡
- ‘음모론’을 강조하여 부정적 여론 조성
-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고착
- 체제우월성 강조, 비방성 기사 쓰기 관행
-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국제여론 조성
- 정확한 사실 추구보다는 소설쓰기식 보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조선일보의 보도와 논조의 비평을 ‘국가안보상업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면서, “조선일보는 ‘국가안보상업주의’를 먹고 자란 대표적인 언론사다. 조선일보의 북한·노동운동·학생운동 등에 대한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한 기사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작문성 기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지적했다.¹⁵⁶⁾ 그런데 조선일보의 이와 같은 편향성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조선일보사의 독특한 심리상태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일단은 조선일보사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¹⁵⁷⁾

156) 민언련이 분석한 「조선일보」의 곡필과 오보 10선은 다음과 같다. ① 이승복 어린이 사건 관련 보도(1968년 12월 11일자), ② 금강산담·평화의 댐 관련 보도(1986년 10월 31일자), ③ 김일성 사망설 관련 보도(1986년 11월 16일~19일자), ④ ‘서울 불바다’ 발언관련 보도(1994년 3월), ⑤ 김일성 사망·조문논쟁 관련 보도(1994년 7월 9일 이후), ⑥ 박홍 추사파 발언관련 보도(1994년 7월 19일 이후), ⑦ 성혜림 망명설 관련 보도(1996년 2월 13일 이후), ⑧ 황장엽 망명 관련 오보(1997년 4월), ⑨ 이석현 의원 명함파동 관련 보도(1997년 8월), ⑩ ‘양심수 사면’ ‘전향제 폐지’ 관련 보도(1997년 12월/1998년 7월), www.ccdm.or.kr, 민언련자료실, 작성일 99/03/22, 참조.

157) 조선일보 ○회장의 철순잔치에서 ○스포츠조선 사장의 인사말, 1992.11.7.

회장님을 남산이라고 부르고 싶다. 남산에 있는 옛날의 중앙정보부와 현재의 안기부 못지 않게 회장님이 계신 태평로 1가에는 모든 정보와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낮의 대통령은 그 동안 여러 분이 계셨지만 밤의 대통령은 오로지 회장님 한 분이셨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낮의 대통령’이고, ‘밤의 대통령’은 신문사 사주라는 말이다. ‘밤의 대통령’은 두루 알고있듯이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주시대에 시카고를 활동무대로 명성을 떨친 마피아 두목의 별칭이다. 사실 조선일보가 그들 사주를 스스로 ‘밤의 대통령’으로 부르고 떠받드는 것은 상당히 합당한 표현이자 절묘한 대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개발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 정권·국가안보기관과 결탁하여 “모든 정보”를 독점하면서, 심지어 그들 위에서 국가안보와 사회안보를 선도해왔다. 더욱이 정권교체 때마다 언론조작을 통해 그들과 결탁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자를 밀었고, 새로운 정권 출범 후 정권 창출의 가장 큰 영향력 집단으로 자임해왔다. 그 대가로 정권의 통제를 벗어나 국가와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특수한 지위를 향유해왔다. 그런 점에서 사주에게 바치는 이 유명한 헌사는 마치 마피아 집단과 유사한 그 신문사의 조직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식의 ‘국가안보상업주의’는 장기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안보 문제를 확대과장과 허위날조로 인식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중요한 안보 문제가 수구 냉전논리에 집착한 언론에 의해 냉소적 대상으로 되어 국민들의 안보관을 진실과 허위를 구별 못하는 도착된 상황으로 이끌거나 또는 안보불감증을 낳게 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신문사 사주의 무소불위의 권한과 지위는, ‘낮의 대통령’은 여러 명이었지만 ‘밤의 대통령’은 그들식 표현대로 ‘오로지 한 분’ 뿐이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영원하다. 언론개혁 입법을 단행해야 할 집권세력이나 국회 중심의 정치권은 원천적으로 정치와 언론의 유착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언론개혁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나. 언론개혁 방안

1) 목표와 방향

첫째, 신문기업 경영의 공개성 및 투명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신문개혁은 기본 방향은 권언유착 관행으로 인한 왜곡된 언론시장의 정상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는 언론기업의 경영투명성과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여론 형성 권력의 독점에 의한 신문사의 사권력기관화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소유지분의 제한과 소유경영의 분리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의 족벌신문의 소유구조는 대주주와 그 친인척, 관계회사, 재단까지 합쳐 거의 대부분이 사주 1인 또는 그 가족에게 장악되어 있다. 예컨대 3대 족벌신문의 주식 및 주식지분 현황을 살펴보면, 동아일보의 경우 가족 및 사주의 특수관계자 지분의 총합이 전체 지분의 76.69%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94.64%, 한국일보는 99.8%로 거의 전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⁵⁸⁾ 이는 우리 나라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평균 소유지분 23.3%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¹⁵⁹⁾

죽별신문의 폐해는 소유주나 경영진들이 안팎으로부터 아무런 견제장치없이 과잉투자, 제살짜기경쟁, 수천억원의 부채, 자의적 인사관리 등의 방만한 경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언론으로 하여금 사회적 공익성, 북한보도의 객관성·합리성 등의 언론의 정상적인 사회적 기능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언론개혁은 편집 자율성의 확보와 언론의 책임·윤리의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은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권한만을 향유하는 오늘날 한국 언론의 현실은 신문사 경영진의 전횡으로 인한 기자의 자율성과 판단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엔 언론인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고양할 전문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권리의식 약화와 언론 피해 구제제도의 불완전함이 언론인의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에 가장 중요한 세력인 언론 사주와 경영진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희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언론개혁은 의견 및 정보의 다양성과 다원성 확보를 지향해야 한다. 한국 사회 언론의 이념적 지향은 대부분의 경우 보수 일변도이다. 전체 신문시장의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중앙 3대 죽별·재별신문은 모두 비슷한 이념집단에 의해 언론시장의 독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158) 시민권리찾기 작은 책 2, 「신문개혁: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언론개혁시민연대, 1999), p. 7.

159)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개혁」 창간호 (1999년 7월), p. 6.

2) 실천과제

신문개혁의 실천적 과제는 크게 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언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혁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을 수 있다. 물론 법적·제도적 개혁은 언론의 대주주의 소유지분의 제한, 편집권의 독립,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신문개혁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개혁의 추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문개혁위원회는 신문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위원회는 신문개혁의 문제의식을 수용하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신문개혁위원회는 정부가 주도할 필요는 없으나, 언론개혁의 범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구의 위상과 성격에 맞도록 직접적 이해관계를 떠난 각계의 대표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순수한 민간기구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여기서 마련된 각종 개혁 방안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회 결의를 통해 신문개혁위원회의 기구 구성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 쉽지 않다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산하 위원회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¹⁶⁰⁾

한편 정부 차원에서의 보조적 역할도 요망된다. 언론기업이 사기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 개입의 한계가 있으나, 사주 중심의 언론산업 구도를 개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언론인 양심권제도와 국가지원금 제도의 도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60) 언론개혁시민연대, “특집: 신문개혁,” 「언론개혁」 창간호 참조.

북한 및 통일문제에 있어서 반복·냉전문화를 극복하고, 남북한의 화해와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문언론의 개혁이 절실하다. 신문개혁을 비롯한 전반적인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학계의 연구, 공청회, 세미나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언론개혁운동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고 그 방안이 제시되었다. 언론개혁의 관건적인 문제는 개혁의 방법과 절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지 그 자체의 결집에 달려있다. 정부가 사회개혁의 스피커로 언론을 활용할 경우, 국민의 언론이 아니라, 언론사 사주의 사병화된 언론의 고질화된 병폐를 치유할 수는 없다. 언론개혁은 우리 사회 민주화의 최종적 결산이자, 21세기 한국사회의 향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신문, 방송 등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야만 남북한 화해와 화합 문화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민족공영의 방향 모색이 가능해질 수 있다.

3. 통일교육

가. 통일교육의 의의

통일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화해와 화합을 통한 통일지향적 가치관과 실천 의지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통일교육은 남과 북 사이의 적대의식과 불신감을 해소하고 서로가 화합하고 협력하여 민족 공존공영의 토대 위에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배양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의 유지·

정착을 위한 뚜렷한 평화관과 확고한 실천의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대북정책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전통과 가치 속에서 반통일적인 분단논리와 냉전문화를 극복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필요성은 세계사적인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일기 시작한 '9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분단 시대 대부분의 시기 동안은 우리 사회는 통일과 민족문제를 '반공교육' 중심으로 접근해왔다. 그후 '80년대 중반에 '통일안보교육'으로 변화하면서 '9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통일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기 6차교육과정에서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적극 부각하고, 통일의 방안을 모색하며, 북한 동포를 통일후 함께 살아야 할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며 통일이후의 민족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에 토대를 둔 통일교육으로 변화하였다.¹⁶¹⁾ 그러나 반공교육의 오랜 관행과 교육 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통일교육은 참된 통일 대비교육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의 내용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근간으로 하여 북한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주지시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어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으로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대비 교육이 마침내 '통일교육'으로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역사성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 와서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¹⁶²⁾ 및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¹⁶³⁾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정부의

161) 교육부, 「통일교육지도자료」(교육부장학자료 제89호), 1993.

162) 1999년 2월 5일, 법률제5752호.

통일교육 관련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학계 및 교육현장에서 세미나, 워크숍 등의 형태를 통해 통일교육 방향과 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한층 높게 인식되면서 통일교육 관련 학계 및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는 본고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이 인권 및 평화 그리고 민주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사회에 편만한 반복의식·냉전 문화를 극복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일교육 추진과정에서 독일의 정치교육을 참조할 수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정치 참여의 능력과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정치교육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회적 가치 및 제도를 이해·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삼았다. 독일의 정치교육에서 통일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독일문제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독일문제 교육지침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달성될 전망이 없다는 전제에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간의 존엄성과 내면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은 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독일문제 교육지침의 기본방향은 통일을 위한 외부적 환경을 조성하고, 유럽의 평화가 유지되는 외적 조건하에서 양독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한편, 독일민족으로 하여금 체제비교를 통하여 통일독일의 정치경제체제를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게 하는데 있었다.¹⁶⁴⁾ 이러한 독일의 정치교육의 방향과, 통일관련 정치교육의 주요내용은 우리의 통일교육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163) 199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01호.

164)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22~23.

나. 통일교육 현황

통일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함한다. 학교통일교육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로 시행되어 왔으나 소기의 성과와 교육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목표 및 방향 설정에 있어 반공안보논리에 바탕한 체제적 정당성 및 정책홍보 차원에 치우쳤던 점이 주된 비판 대상이었다. 반면, 최근 재야 및 종교사회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통일교육은 정당성을 극복하지 못한 점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통일교육은 세계사적인 변화에 따른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 및 통일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의 목표, 방향, 교수방식 등에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주도 및 정부지원 통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신과 대결의 냉전의식의 재생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냉소적 반응과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 학교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제시와 더불어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야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과정에 반영되고 있는 통일교육 내용은 과거의 반공교육 일변도에 비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의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학교통일교육은 크게 세 측면에서 변화를 보여왔다.¹⁶⁵⁾

165) 수탁연구 CR 99-12,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9), p. 60.

<표> 교육과정 총론 상의 학교 통일교육 관련 내용

	개정과정 및 이념상 특징 중 에서 학교 통일교육관련 내용	구성 방침·목표 및 체제·편제상의 특징 중 에서 학교 통일관련 내용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 (1945~1946) 및 교육 요목기(1946 ~1954)	· 교수 용어의 한국어 사용 ·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 목 교수 일체 금함.	· 수신과 폐지로 도덕 내용을 공민과로 흡수 · 새로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공민과 등장
	· 홍익인간 교육목표 제시 · 애국애족 교육의 강조	· 사회생활과 신설 및 민주시민교육 실시
제1차 교육과정 (1954~1963)	· 생활중심교육 강조	· 반공교육·도의교육 강조 · 공민과목 내의 도의교육 실시 및 반공· 반일교육내용 포함 · 중학교 도의 교과서 개발
제2차 교육과정 (1963~1973)	· 민족 자주성 강조 · 교과활동 외에 반공·도덕생 활 별도 설치	· 1970년부터 대학에 국민윤리 교과 설치 · 교과활동 외에 반공·도덕 생활 주당 2시간 운영, 고등학교 국민윤리 4단위 실시 · 중학교 도의, 중학교도덕으로 사용(66년까지) · 중학교 도덕→「민주생활」과 「승공통일의 길」로 분책 편찬.(78년까지)
제3차 교육과정 (1973~1981)	· 학문중심교육 강조 · 국민교육현장의 이념 및 한 국 전통과 주체성 강조 · 국민정신교육 강조	· 사회과에서 도덕과가 분리됨. · 도덕과 및 국민윤리과 교과로 편성됨. · 평화적 통일 지향 목표 시도됨.
제4차 교육과정 (1981~1987)	·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 심,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통한 전인교육 강조 · 국민정신교육 강조	·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 평화통일 신념의 함양 · 통일교육과 이념교육의 강조
제5차 교육과정 (1987~1992)	· 민주화의 실천시기 · 문화의 주체성이 확립된 민 주사회, 정의사회, 복지사회, 문화사회 전망	· 대학 국민윤리교과 교양필수에서 제외 · 북한에 대한 맹목적 적개심 교육 탈피 · 통일안보교육 강조

제6차 교육과정 (1987~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의 육성 ·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의 범교과화 시도 · 유치원 : 북한에 관심을 가지기 · 초등 도덕과 주당 2시간→1시간으로 축소 ·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변화됨. · 고등학교 국민윤리→윤리로 변경
제7차 교육과정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론에 통일교육에 대한 언급 없음 ·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 강조 · 전통문화 이해, 세계시민으로의 역할 강조

*자료: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수탁연구 CR 99-12,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p. 61, 참조.

첫째, 학교통일교육은 점차적으로 냉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6차교육과정에서는 종래의 반공교육이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일방적으로 심어주었던 교육 방향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이념 교육 부분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그에 대체할 만한 북한이해와 통일인식 내용이 확충되지 못했다.

셋째, 학교통일교육은 도덕·윤리 등의 특정 교과에서 국어, 사회, 국사, 지리 등으로 통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통일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통일교육의 방향과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며, 통일교육이 아직까지도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통일교육의 방법론적인 한계 등이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⁶⁾ 여기에는 모든 교육과

166) KDI주관 '97년 국가정책개발사업,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민족통일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1997.11.30), pp. 53~56.

정(초·중등 및 대학과정)에 걸쳐 정부가 제공한 「통일교육지침」에 의한 '내리먹이기식' 방향 제시로 교육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예컨대 초등학생으로부터 대학생 통일교육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통일교육지침」은 교사·학생의 능력 및 수준 차이나 또는 교육현장의 상황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교육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⁶⁷⁾

2) 사회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은 정부주도, 정부지원, 민간주도형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통일교육을 주기적·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기관·단체는 많지 않다. 무엇보다 어려운 사정은 교육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71년 이후 최근까지 총 수강인원은 정부기관인 통일교육원의 수강인원 33만 여명을 포함하여, 관변단체와 종교·사회단체의 실적을 모두 합하여도 총 40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90년대초 이래 종교·사회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이다. 천주교민화위의 경우 통일교육은 '95년도에 시작하여 총 5회 동안 1,146명의 수강 인원을 확보하였고, 경실련통일협회는 300명('96년 시작, 총6회), 자유총연맹 2만여명('94년 시작, 총195회), 홍사단 1만2천여명('92년 시작, 총 175회) 등에 불과했다.¹⁶⁸⁾ 더욱이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의 사회통일교육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은 일관성의 부족과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

167) 통일교육지침서, 「국민의 정부 통일교육기본방향」(통일부, 1998.11), 참조.

168) 전숙희, "성인통일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비판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9), 참조.

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관변단체의 경우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목표와는 달리 지나친 냉전논리와 안보 중심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대북 적대감과 불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를테면 사회통일교육의 실태는 여전히 냉전의식을 증폭시키는 교육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교과목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교육현장에서는 반공주의적 담론이 우세한 경우가 적지 않다.¹⁶⁹⁾ 이런 점에서 과거 학교교육을 통해 반공사상으로 정신무장된 현재의 성인들의, 이들은 또한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여론주도층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령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무비판적인 반북냉전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성인 대상의 사회통일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 통일교육 기본방향 : 「평화의 문화」 창출

통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의 문화’를 창출하는데 있다. 평화는 국가들 사이에서건 시민사회 내에서건 간에 그 자체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침윤된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테면 ‘문화의 힘’을 통해서만 평화의 견고한 토대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풍찬노숙의 일생을 보낸 백범 김구 선생은 계급혁명, 양차 세계대전, 침략국의 패망 등 전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참된 평화에의 갈망을 ‘평화의 문화’를 통해 찾고자 했다. 해방과 분단의 와중에서, 그는 1947년 11월에 발표한 「나의 소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¹⁷⁰⁾

169) 이우영,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경실련통일협회, 「새로운 통일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샵」, (1999년 8월 21일), p. 28.

170) 김구, 「백범일지」(교문사, 1980), p. 293.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 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 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평화의 문화’는 일견 강대국의 압제와 피침의 역사 속에서 고통받은 약소민족의 도덕적 외침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의 탐바구니 속에서 침략과 압제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약자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평화에의 민족적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김구 선생의 이상과 의지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평화의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성패는 사실,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을 막론하고, 교육의 방법론 즉, 테크닉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효율성과 관련한 토론식·강의식·자료활용·현장답사 등의 강의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의 담보상태는 단순한 교육 테크닉의 문제라기보다는 통일에 관련된 인식론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⁷¹⁾ 따라서 통일교육은 당연히 현실유지적 세계관이나 안보중심적 체제논리와 급진적으로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통일교육은 지식전달 교육이 아니다.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자각적 인식의 계기를 얻고, 타자와의 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존재로

171) 전효관, “탈분단 시대의 통일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개요,” 경실련통일협회, 앞의 발표문, p. 20.

서의 자신을 재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에 대한 실천적 주체로 스스로 자각하고, 그러한 자각적 존재들의 연대의 장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은 통일과정에서나 통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실천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전통과 가치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일교육의 핵심 내용은, 한편으로는 전쟁의 위기감이 사라지지 않은 특수한 분단상황을 고려한다면, 「평화교육」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평화교육의 의의

평화교육은 아직 학문의 한 영역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1953년부터 시작한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이 평화교육의 단초를 열었고, 1970년대 독일의 '비판적 평화교육'이 실시된 이래 1980년대에 와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 사이에서 평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각자의 종교적·이념적 성향, 이사회 또는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전망, 심지어 개인적 차원에서 서로 다른 사상 등이 평화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평화의 개념적 혼란은 다시 '평화'라는 단어의 악용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평화교육의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평화교육을 실천하는 제일차적 과업은 '평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종교, 문화권에서의 평화에 대한 이해와 평화사상의 고찰은 예비적 작업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교육은 그것이 필요하게 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정의되어야 한다. 사실 구체적 사회현실을 떠나 평화에 대한 보편적 이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종종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컨대 과거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에서도 ‘평화’는 항상 강조되어왔지만 갈등과 대립의 분단체제의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체제유지와 군비경쟁의 논리로 활용되었던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들이 처한 정치적 사회적 조건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화교육의 실천적 방향으로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해방신학의 이념과 전략이 강조되었다면, 유럽은 반전·반핵 등의 군축 교육과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의 평화교육은 당연히 분단극복과 반북·냉전문화의 해소를 주된 내용으로 통일교육의 기본정신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평화교육은 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세계적 차원에서의 갈등과 분쟁에 즉 평화 부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아직도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실과 원인 및 해체 방향 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쟁의 위험성을 줄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편만한 반북·냉전문화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널리 일깨워야 한다. 나아가 분단체제 아래서 형성된 제도적 폭력체계와 반평화구조의 다양한 형태들을 밝혀내고, 그것들의 상호관계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분단구조에 착근한 수혜층 및 분단기생층의 논리를 비판하고 반평화적 사회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실천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평화지향적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평화교육의 방향

평화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서독의 '비판적 평화교육' 모델의 원칙들을 참고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⁷²⁾

- ① 평화교육은 이데올로기 비판과 계몽적 기능을 인지하여야 한다.
- ② 현실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제기한다.
- ③ 갈등을 수용하여 그것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 ④ 폭력과 대응폭력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비폭력을 생활원칙으로 삼는다.
- ⑤ 민주주의의 구현을 지향한다.
- ⑥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반평화적 현실에서 이익과 고통을 받는 자를 명백히 밝히며, '아래로부터'의 인식 태도를 함양한다.
- ⑦ 피교육자들에게 역사적 경험을 일깨우며, 스스로를 인간 해방의 전통에 연결시키도록 한다.

'비판적 평화교육'의 방향은 위에서와 같이 평화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구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통일교육의 주된 핵심을 평화교육에서 찾는다면, 앞의 서독의 '비판적 평화교육'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있듯이, 평화통일교육은 개인 및 국가간 어떠한 형태로든지 폭력적 행위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을 전제로,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정의의 구현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추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기반

172) 윤웅진,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경실련통일협회, 앞의 발표문, p. 15.

하여 우리의 분단현실의 극복과 반북·냉전문화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 수 있다.

첫째, 평화통일교육은 분단체제의 극복과 통일을 추구하는 '정신적 인프라' 체계 구축작업이라 할 수 있는 바, 민족적 활로 개척의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

둘째, 평화통일교육은 반북냉전의식을 극복하고 평화 추구하고 합리적 안보관의 확립을 지향한다. 즉, 평화지향적 안보관과 현실적 안보관에 기반한 평화의 추구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교육은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것과 동시에 '민족안보'의 전망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분단 현실에 기인한 국가안보의 엄중성과 7천만 한민족의 명운이 달린 민족안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인류 보편적 가치의 존중과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은 민주화의 내포적 심화와 외연적 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하며, 역사적·사회적 개혁 과제의 수행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있다.

넷째, 참된 민족화해를 위한 공존의 논리와 윤리의 확립이 절실하다. 이를테면 남북한의 '차이'의 부각보다는 서로 '다름'의 현실을 존중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배양해 나가야 바람직하다.

평화통일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물론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객관적·초당적 차원에서 민족공동체의 형성의 과제 속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 교육을 통해 우리는 분단체제에 의한 폭력적 상황과 왜곡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색깔론'으로 표출되는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군사문화, 공격적 언어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태도 등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¹⁷³⁾

이러한 평화통일교육의 실천적 지향을 위해, 일찍이 반공사상과 냉전의식이 팽배했던 시절에 분단의식을 깨고 민족통일의 의지를 평화사상 속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함석헌의 평화사상의 의미와 가치를 재음미함으로써 오늘날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실천적 의지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평화통일교육의 사상

현대 한국사회에서 평화교육의 실천적 귀감으로 함석헌의 ‘씨울’ 사상으로 나타난 평화사상은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함석헌의 평화사상은 노장사상, 예수의 평화사상, 간디의 사상, 퀘이코교, 특히 한국의 역사 자체로부터의 사상적 영향을 통해 마침내 씨울 사상에 이르게 된다.¹⁷⁴⁾ 씨울은 “지위도 없이 권력도 없이 그저 땅을 디디고 서서 전체를 위해서, 전체라는 것을 의식도 못하면서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또 봉사하다가 가는 사람들”¹⁷⁵⁾로 씨울은 본질적 평화요, 씨울의 바탈(바탕)이 평화요, 평화의 열매가 씨울이며, 씨울의 목적은 평화의 세계 이외에 있을 수 없다.¹⁷⁶⁾ 이러한 씨울 사상에 바탕을 둔 함석헌의 평화의 길은 다음의 네 가지 성격을 갖는다.¹⁷⁷⁾

173) 윤웅진, “평화통일 희년맞이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한신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민족통일과 평화』 (한국신학연구소, 1995), pp. 251~61.

174) 안병무, “함석헌의 평화 사상,” 『현대 평화 사상의 이해』 (한길사, 1992), pp. 365~66.

175) 함석헌, 「6천만 민족 앞에 부르짖는 말씀」, 안병무 외 편, 『함석헌전집』 12 (한길사, 1985), p. 124.

176) 함석헌, 앞의 글, 앞의 책, p. 282.

177) 안병무, 앞의 글, 앞의 책, pp. 374~77.

첫째, 평화 의식은 전체 의식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자각이 평화의 근원이다.

둘째, 평화 운동은 바로 정신 운동임을 전제하면서 사회 운동이나 정치 운동에 앞서야 한다.

셋째, 한국 민족의 특성에 대한 재인식이 평화, 한국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 운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넷째, 유약하고, 무능하고, 이름 없이 음지에서 고난받는 민중이 평화 운동의 주역이 되어 온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이끌 수 있다.

이러한 함석헌의 평화사상은 특히 평화교육과의 관련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시장근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공동선의 회복과 물신숭배적 가치관을 돌아볼 수 있게 하며 분단민족의 고통과 좌절의 역사를 극복하여 민주주의와 평화를 통한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그러한 통일 자체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함석헌 평화사상은 통일교육의 사상적 토대로서 그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 종교단체에서 비교적 일찍 관심을 기울여왔다.¹⁷⁸⁾ 특히 평화 문제를 종단간의 공통관심사로 설정하고, 평화에 대한 종교간 대화를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룩한 실험'으로 보면서¹⁷⁹⁾, 그와 같은 종단간 대화를 통한 우리 사회에서 절박한 평화 문제를 접근한 노력도 주목된다. 여기서는 통일교육을 매개로 종교간의 대화, 평화로운 세

178) 고병헌, "평화, 평화 교육의 이해를 위하여,"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평화, 평화 교육의 종교적 이해」(내일을 여는 책, 1995) 참조.

179) 이윤구, "열린 사회의 종교교육,"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종교간 대화와 인류의 평화」(원화, 1992), pp. 86~87.

상 창조를 위해 종교인들이 공동으로 노력해 가는 모습은 우리와 같이 다양한 종교사회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이는 종교 다원주의의 입장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환경의 오염, 생태계 파괴, 정신세계의 황폐화, 핵무기의 위협, 끊임없는 전쟁 등 인류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공감에서 새로운 지구윤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⁸⁰⁾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윤리의 확립은 종교인들의 고유한 사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종교단체의 평화교육의 의의를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반공의식·냉전문화 극복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추진되지는 못했으며, '평화' 문제 자체를 사회적·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종교단체에서 평화통일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기여하는 바가 무척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평화교육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평화 창조의 적극적인 예술을 추진할 내용과 방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교사, 종교인, 공동체 지도자들은 평화를 위한 교육은 이제 교육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중심 또는 핵심적인 관심사로 부각시켜 나가야 한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모든 교육은 본질적으로 평화를 위한 교육으로 되어야만 인류의 영적·물질적 생존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필요하다.¹⁸¹⁾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전통과 가치를 토대로 21세기의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는 새로운 민주화의 과

180) 임운길, "지구윤리와 천도교,"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자료집, 「21세기를 향한 종교간 이해와 지구윤리 - 한국종교의 대응-」(1993년 11월), pp. 48~55.

181) Leonard Grob, "Spiritual Politics: Introductory Remark," *Education for Peace: Testimonies from World Religions*, Haim Gordon and Leonard Grob, eds. (New York: Orbis Books, 1987), p. 5.

제와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전쟁의 파괴성과 무모함에 대한 인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분명 평화로운 세계의 건설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자력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최초의 국가이다.¹⁸²⁾ 만일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열린 사회’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토대가 한층 굳건히 구축될 것이다. 평화통일교육 그 자체가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다면, 평화통일교육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심화와 더불어 민주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과도 부합될 수 있다. 인권, 평화, 민주화의 보편적 가치의 추구를 지향하는 통일운동은 반복의식·냉전문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화합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다.

182) 최상룡, “민주평화사상과 한국,” 『평화연구』 제7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98년 12월), p. 285~86.

VI. 결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냉전의식·냉전문화의 극복 문제이다. 냉전적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상당한 반대와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나 결코 주저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을 공존·협력의 동반자로 삼는 과정에서는 많은 이견이 분출할 것이다. 그럼에도 냉전의식·냉전문화 해소를 위한 노력은 통일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대북 포용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내 진보와 보수간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이른바 ‘남남대화’를 통한 국민화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하다는 점에서도 무척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접근한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제 I 장에서는, 한국사회 냉전문화 해소방안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남북한간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구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냉전구조의 해체는 우리 사회 내부의 냉전의식과 냉전문화의 해소·극복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냉전문화에 대한 정의와 그것의 폐해를 규명하고자 했다. 흔히 냉전의식, 냉전관행 등의 용어를 포괄하는 냉전문화는 일반 대중의 사회문화적 의식형태 또는 집단적 심리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개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정향과 관련된 의식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냉전문화는 반공의식, 분단콤플렉스, 그리고 반북의식 등과 착종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냉전의식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상대를 증오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정신병리적 분열증을 낳게 했다. 내편·내편, 선·악 등의 이분법적 흑백논리는 합리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애초부터 차단하는 냉전시대의 전형적인 의식형태이다. 냉전체제에 의해 강요된 이데올로기적 편향과 함께 분단의식에 의한 ‘심성의 왜곡’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공통되는 현상이지만, 냉전의식의 폐해를 찾고자 했다.

제Ⅲ장에서는, 냉전문화가 개개인의 심성 속에 내면화되어 가는 메커니즘으로 교육과 언론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먼저 교과서 속에 반영된 이념교육의 내용과 형태를 분석하면서, 특히 한국전쟁 이후 반공이데올로기가 본격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또한 안보이데올로기가 한국의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초법적 메타범이데올로기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했다. 안보논리는 군사적 위협의 실체보다는 대항이데올로기의 표출이나, 그 보다 훨씬 하위 수준인 개혁의 주장이나 비판논리마저 안보의식을 저해하는 저항과 도전으로 규정되면서, 학문과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상황으로까지 나타났던 현실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분단시대 한국 현대사의 반공주의적 교육은 체제와 이념 문제에 대한 개인의 어떠한 자율적 판단의지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체제 순응적 존재의 양산을 교육목표로 삼았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언론은 분단의식과 냉전문화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다. 보수언론은 많은 경우 객관적 사실을 도외시한 채 남북한관계에서 적색공포의 신화를 창조하는 매카시즘의 진원이라는 점을 밝혀보았다. 보수언론의 안보위협은 대북 적대감을 자극하고 결국 정부의 통일정책이 보수화 되는 데로 기여해왔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문제와 군부권위주의 청산의 과제가 정치적 이슈로 제기될 때, 항상 남북한 문제와 연관시켜 민주화의 진척을 가로막는 논설을 펼쳐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언론 개혁 없이 ‘냉전벨트’를 걷어내는 작업은 요원한 문제이다. 언론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고루한 의식,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거부하는 냉전관행 등은 곧장 케케묵은 반복·반공의식으로 나타나 수구세력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논리로 변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함을 호소하고자 했다.

제IV장에서는, 냉전문화의 존재양태를 살펴보았다. 첫째, 대미인식의 문제로, 냉전해체의 변화된 국제관계 속에서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 대한 내향적 성찰과도 일맥 상통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미간 국가이익의 상호 조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가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당시의 미국 측의 한반도 전쟁시나리오 오는 “우리가 죽고사는 문제”가 남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으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미국 국익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조망할 수 있는 인식을 강조하고자 했으며, 노근리와 북한의 신천 문제를 환기시킴으로써 냉전시대에 은폐될 수 있었던 ‘과거’의 진실규명을 통해 한미관계의 보다 성숙한 발전을 지향해 나가야 할 때임을 밝혀보았다.

둘째, 대북정책에 반영된 냉전의식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규율하는 원칙 가운데 하나로 상호주의를 들 수 있다. 상호주의는 정부 차원의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준용되는 협상 원칙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상호주의 일반적으로 국가간 거래와 협상에 있어 상호 신뢰의 기반을 쌓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양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은 대북 불신감에 기반한 대결과 갈등의 냉전의식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상호주의의 내용과 함께,

비대칭적 한반도 냉전구조 속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적 적용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반북·냉전의식의 발로로 나타나는 대북의식의 한 형태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및 민주화를 주장하는 논리는 반북·냉전적 대북인식의 독특한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인권·민주화 문제의 접근방식으로, 선악의 흑백논리에 기반한 냉전의식이 북한이라는 집단에 투사되어 자기 스스로 가장 혐오하는 속성인 ‘인권’이나 ‘민주화’를 자기의 반대쪽인 북한체제에 투영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동서독간 화해와 긴장완화 노력에 대한 사례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내독간 비밀거래에서 많은 것을 시사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예술·문화분야 가운데 특히, 영상매체는 엄청난 대중성을 지닌다. 이 분야에서 냉전문화를 극복하고 통일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대중문화를 창조한다면, 민족의 화해·화합의 분위기는 성큼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었던 두 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냉전의식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상매체 속에 반영된 북한이미지는 우리 사회의 광범한 냉전벨트의 잠재적 요구에 부응한 안보의식의 고취와 더불어 ‘반북문화’의 새로운 유형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제V장은 마지막 장으로, 냉전문화 해소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그리고 통일교육 등을 통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접근과 더불어 새로운 화해와 화합문화의 창출의 제도화를 추구했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산물로 이제 그 역사적 존재이유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보안법은 국체 유지를 위한 급조된 ‘도구적’

성격의 법이다. 보안법은 '외부의 적'을 상대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이라기 보다는, '내부의 국민'을 상대로 '정권안보'를 지키는 법률로 기능해왔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은 법의 존재근거의 보편적 기준 즉, 법적 형평성을 스스로 상실해왔다. 보안법 철폐를 전제로, '사상의 자유시장'이 보장되는 것과 아울러 인권과 사회정의 그리고 평화통일의 이념에 기반한 진보적 정당들이 자리잡을 수 있는 제반 법적·제도적 지원장치의 마련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

둘째, 언론개혁은 국가 차원의 총체적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개혁은 모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개혁의 전제이자, 언론개혁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언론개혁의 의의와 방안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신문기업 경영의 공개성 및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권언유착 관행으로 인한 왜곡된 언론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함을 역설했다. 나아가 여론 형성 권력의 독점에 의한 신문사의 사권력기관화를 방지해야 하기 위해서는 소유지분의 제한과 소유경영의 분리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개혁의 실천과제 가운데 특히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기구로 신문개혁위원회의 구성을 기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언론인 양심권제도와 국가지원금 제도의 도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한국사회 냉전문화 해소방안으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통일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화해와 화합을 통한 통일지향적 가치관과 실천의지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을 지향한다.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전통과 가치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밝혔다. 인권, 평화, 민주화의 보편적 가치의 추구를 지향하는 통일운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

육은 궁극적으로 반복의식·냉전문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화합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자 했다.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식, 사고방식, 행위양식 등은 분단구조로부터 영향받아 왔으며, 또한 우리 스스로 분단구조에 순응적인 삶을 통해 분단구조 자체를 주조하는데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다.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를 위한 역량과 성패는 냉전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의지에 달려 있다. 가령 국제적 차원에서, 최근의 북·미관계 개선에서 보듯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그러한 외적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의 강렬한 바람과 의지 없이는 냉전구조의 해체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 내부의 냉전의식·냉전문화의 극복을 위해 정부나 학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공청회, 세미나, 문화공연 등의 다각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담론 체계를 통한 설득작업을 서둘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구. 「백범일지」. 교문사, 1980.
- 김용호. 「외교안보정책과 언론 그리고 의회」. 오름, 1999.
- 김진균·홍성태. 「군신과 현대사회 - 현대 군사화의 논리와 군수산업에 관한 연구」. 문화과학사, 1996.
- 김현승. 「한국현대사 해설」. 관동출판사, 1975.
- 김형곤. 「미국의 적색공포 1919~1920」. 역민사, 1996.
- 권용립. 「미국 대외정책사」. 민음사, 1997.
- 국토통일원.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 통일원, 1989.
- 교육부. 「통일교육지도자료」 교육부장학자료 제89호, 1993.
- 로버트 T. 올리브·박일영 역. 「대한민국 건국의 비화 - 이승만과 한미관계」. 계명사, 1990.
- 로버트 그리피스·하재룡 옮김. 「마녀사냥 - 메카시/매카시즘」. 백산서당, 1997.
- 문교부. 「문교40년사」. 서울: 문교부, 1988.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1996, 1997, 1998.
- _____ .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민족통일연구원, 1998년 12월).
- 박갑동. 「박헌영 - 그 일대기를 통한 한국 현대사의 재조명」. 인간사, 1983.
- 박홍·남용우. 「레드바이러스」. 기독교청년문화연구소·생명문화연구소 편, 1997.

- 서울시교육위원회. 「서울교육사」 上. 서울시교육위원회, 1981.
- 서승. 「옥중 19년」. 역사비평사, 1999.
- 이부영. 「우리 마음 속의 어두운 반려자: 그림자」. 한길사, 1999.
- 이호재 편. 「한반도군축론」. 법문사, 1989.
-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시민권리찾기 작은 책 2. 언론개혁시민연대, 1999.
- _____ . 「신문개혁: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1999.
- 전성훈.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정은용.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다리, 1994.
- 朝鮮語學會. 「중등국어교본」 상. 文教部, 1946년.
- 최상룡.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나남, 1988.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1993.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6년.
- _____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계청: 1999.
- 통일부. 「통일교육지침서, 국민의 정부 통일교육기본방향」. 통일부, 1998.
-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통일원, 1995.
- 통일연구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
(I). 서울“ 통일연구원, 1999. 2
- _____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
(II). 서울“ 통일연구원, 1999. 4
- _____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
(III). 서울“ 통일연구원, 1999. 8.

- 학술단체연합회.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역사비평사, 1998.
-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
개발원, 1999.
-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한국학생건국운동사 - 반탁·반공
학생운동 중심-」.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출판국,
1986.
- 한스-요하임 마즈·송동준 옮김. 「사이코의 섬 - 감정정체·분단체제의
사회심리」. 민음사, 1994.
-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7.
- 황치성. 「한국의 언론인」. 한국언론재단, 1999.
- Althusser, Loui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 N.Y.:
Monthly Review Press, 1971.
- Gaddis, John Lew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Y.: Oxford Univ. Press, 1987.
- Hobbes, Thomas. *Leviathan*. London, 1651.
- Hobsbawm, Eric.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1991*. London: Michael Josoph, 1994.
- KDI.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97년 국가정책개발사업.
민족통일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1997.
- Leon V. Sigal·구갑우·김갑식·윤여령 옮김.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
았다 - 북한과 미국의 핵외교」. 사회평론, 1999.
- Levin, Murray B. *Political Histeria in America*. N.Y.: Basic
Book, 1971.
- Mack, Allen and Paul Keal. *Security and Arms Control in the
North Pacific*. Sydney: Allen & Unwin, 1988.

- Mann, Michael. *State, War and Capitalism*. Oxford: Basil Blackwell, 1988.
-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Addison-Wesley, 1997.
- Osgood, Charles. *An Alternative to War or Surrender*.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2.
- Poulantzas, Nicos. *State·Power·State*. London: Verso, 1980.
- Therborn, Göran. *The Ideology of Power and the Power of Ideology*. London: Verso, 1980.
- E. 프롬·이상두 역. 「자유에서의 도피」. 범우사, 1993.
- Ziegler, David W. *War, Peace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Little, Brown, 1987.

2. 논문

- 고병현. “평화, 평화 교육의 이해를 위하여.”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평화, 평화 교육의 종교적 이해」. 내일을 여는 책, 1995.
- 고은. “恨의 극복을 위하여.” 「한국사회연구」 2. 한길사, 1984.
- 권혁범.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 체계와 정치 사회적 기능.” 「당대비평」 1999년 가을호.
- 金斗憲. “反共教育을 되돌아본다.” 「새교육」. 대한교육연합회, 1968.
- 김민웅. “고난의 시대에서 배반의 시대로: 김영삼의 좌절과 그 출로, 그리고 우리의 자화상.” 「레드 콤플렉스」. 삼인, 1997.
- 도진순. “분단에 대한 연역과 통일의 전제.” 「당대비평」. 999년 봄호.

- 모니터네트워크. “노근리 양민학살’ 보도: 언론의 ‘사대주의’에 묻힌 우리의 자존심.” 『언론개혁』 1999년 11월호.
- 문정인. “남북한 신뢰구축.”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 박건영.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 『국제정치논총』 제38집 2호 (1998).
- 박영균. “통일교육의 변화 과정과 전환적 제언.” 통일부·경북대평화연구소·대구광역시민주시민교육연구회. 『제2차 통일교육 발전 워크샵』 자료집. 1999. 8. 24.
- 박용규. “90년대 한국언론의 북한보도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언론재단·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언론의 새로운 역할과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999. 8. 27.
- 박태순. “국어교과서와 민족교육 - 초중고 국어교과서의 개혁을 위하여 -.” 『한국사회연구』2. (1984).
- 사카모토 요시키카(坂本義和). “한국 냉전의 종식을 기대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대안』. 크리스찬아카데미 소식 대화. 1999년 여름호.
- 신경림. “어떤 詩를 가르칠 것인가 - 中高校 교과서의 詩를 읽고 -.” 『한국사회연구』1. 한길사, 1983.
- 세종연구소.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국가안보전략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국가전략』 제5권 1호. 세종연구소, 1999년 봄·여름호.
- 손석춘. “왜 레드 콤플렉스가 문제인가 - 적색 공포증 조장에 앞장선 한국 언론.” 『레드 콤플렉스』. 삼인, 1997.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시민 1천명 언론개혁 여론조사.” 「언론개혁」, 1999년 12월호.

_____. “모니터네트워크 1: 냄비저널리즘과 선정·냉전주의의 만남.” 「언론개혁」, 창간호 (1999).

_____. “특집: 신문개혁”, 「언론개혁」, 창간호 (1999년 7월).
안병무. “함석헌의 평화 사상.” 「현대 평화 사상의 이해」, 한길사, 1992.

이성근. “해방직후 미군정치하의 여론동향에 관한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25집 (1985).

이우영.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경실련통일협회. 「새로운 통일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1999. 8. 21.

이윤구. “열린 사회의 종교교육.” 서울 평화교육센터 편. 「종교간 대화와 인류의 평화」, 서울: 원화, 1992.

이장. “남북한 군비현황과 방위비 삭감의 필요성.” 방위예산의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 1994. 11. 9.

이장원.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와 대안.” 경실련통일협회 「새로운 통일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1999. 8. 31.

이호재. “남북관계의 언론을 비판한다.” 「통일한국과 동북아 5개국 체제」, 화평사, 1997.

임운길. “지구윤리와 천도교.” 「21세기를 향한 종교간 이해와 지구윤리 - 한국종교의 대응 -」, 서울: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1993년.

유재일. “한국전쟁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착.” 「역사비평」, 계간16호 (역사문제연구소, 1992 봄).

임지현. “일상적 파시즘의 코드 읽기.” 「당대비평」 (1999년 가을호).

윤웅진. “평화통일 희년맞이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한신대학교

- 평화연구소 편. 「민족통일과 평화」. 한국신학연구소, 1995.
- _____.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경실련통일협회. 「새로운 통일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샵」자료집. 1999. 8. 31.
- 전숙희. “성인통일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비판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전효관. “탈분단 시대의 통일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개요.” 경실련통일협회 「새로운 통일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1999. 8. 31.
- 정영태. “일제말 미군정기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역사비평」 계간 16호 (역사문제연구소, 1992 봄).
- 정희중. “남한언론의 통일 관련보도 행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남북한 언론의 역할과 전망」. 1999.
- 조현연. “레드 콤플렉스, 그 ‘광풍’의 생산업자들.” 「당대비평」. 통권 4호 (1998).
- 최병수. “6·25동란 초기 충북 영동지구의 민간인 살상사건에 관한 연구(I) - 노근리의 미군 대량민 집단살상사건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지」 17집 (1999년 2월).
- 최상룡. “민주평화사상과 한국.” 「평화연구」 제7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98.
- 통일을생각하는서울교사모임(준). “초등학생 대상 여론조사 결과.” 「직녀에게 4」 (1996년 7월).
- _____. “중학생 대상 여론조사 결과.” 「직녀에게 6」 (1997년 3월).
- _____. “중등학생 대상 여론조사 결과.” 「직녀에게 12」 (1998년 10월).
- 한수영. “분단과 전쟁이 낳은 비극적 역사의 아들들.” 「역사비평」 통

권 46호 (1999 봄).

한완상. “긴급대담: 기로에 선 행정권의 대북정책.” 「창작과비평」, 1999년도 가을호.

한지수. “반공이데올로기와 정치폭력.” 「실천문학」 제5호 (1989년 가을).

함석헌. “6천만 민족 앞에 부르짖는 말씀.” 안병무 외 편. 「함석헌전집」 12. 한길사, 1985.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 1945-1947*.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Deborah, Larson. “Crisis prevention and the Austrian State Trea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 Winter 1987.

_____. “The psychology of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Negotiation Journal*. July 1988.

Grob, Leonard. “Spiritual Politics: Introductory Remark.” in Haim Gordon and Leonard Grob. eds. *Education for Peace: Testimonies from World Religions*. New York: Orbis Books, 1987.

Haruki, Wada. “The Structure and Culture of the Kim Jong Il Regime: Its Novelty and Difficulties.” presented paper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 hosted b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1998. 5. 28~29.

Keohane, Robert O.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1, Winter 1986.

Keohane, Robert O. *International Institution and State Power: Essays*

- in International Theory*. London: Westview Press, 1989.
- Man-Sik, Ch'ae. trans. by Chun Kyung-Ja. *Peace Under Heaven*. N.Y; M. E. Sharpe, Inc., 1993.
- Osgood, Charles. "Suggestions for winning the real war with communis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December 1959.
- Unterberger, Betty Miller. "Woodrow Wilson and the Bolsheviks: The 'Acid Test' of Soviet-American Relations." *Diplomatic History*. vol. 11, no. 2, Spring 1987.
- W, Perry.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 1999. 10. 12
(<http://www.unikorea.go.kr>).

3. 기타

- 1999년 2월 5일, 법률제5752호.
- 199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01호.
- 「국민일보」.
- 「동아일보」.
- 「디지털조선일보」.
-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2000년 1월 1일, 09:00, 중앙·평양방송.
- “대북보도의 문제점.” 「시민과 언론」. 9907-9908
(<http://www.ccdm.or.kr/minju/990702.htm>).
- www.ccdm.or.kr, 민언련자료실, 작성일 99/03/22, 참조.
- 「말」.

문교부, 「도덕 5-2」 (1989년 8월 1일 박음, 1989년 9월 1일 펴냄).

문교부, 「중등국어」1 (문교부, 단기4281년 1월 20일 펴냄); 「중등국어」
② (단기 4282년 8월 펴냄); 「중등국어」 3 (단기 4281년 8월
펴냄), 참고.

「조선일보」.

「중등공민」 상. 문교부, 1946년.

「중학도덕」 2 (문교부, 단기 4219년 3월 25일 박음).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 「시민과 언론」
9907-9908 (<http://www.ccdm.or.kr/minju/990703.htm>).

「한겨레」.

「한겨레 21」.

New York Times.

The Economist.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June 1993 - E.
DPI/1394.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의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한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계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육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 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99-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전성훈	저	6,000원
99-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저	6,500원
99-05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저	5,500원
99-06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저	4,500원
99-0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독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99-08	김정일의 퍼스널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김성철	저	5,000원
99-09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 전망	오승렬	저	5,500원
99-10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	최수영	저	5,000원
99-11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이우영	저	5,000원

99-12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김병로	저	7,000원
99-13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조한범	저	4,500원
99-14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 관계: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국신	저	4,000원
99-15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서재진	저	5,000원
99-16	전환기의 대북정책: 포용과 억지의 병행전략	홍관희	저	4,000원
99-17	4자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박영호·박종철	공저	7,000원
99-18	한국사회 냉전문화 극복방안 연구	조민	저	7,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전현준·계성호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전현준·계성호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계성호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북한인권백서 2000		
	제성호·최의철·서재진의 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6,5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5,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7,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i>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i>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7 (1998)</i>	8,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7,000원
Regime Sustainability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6,500원
and Proposals

■ 기타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목정균 저 5,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會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ku.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 이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한국사회 냉전문화 극복방안 연구

인쇄/1999년 12월 28일

발행/1999년 12월 31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통일정책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3 팩시밀리 901-2544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ISBN 89-87509-96-6

7,000원